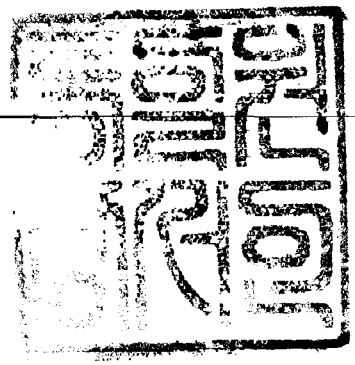
統調 90－12－88

蘇聯·東歐의 變革과 分斷國 統一問題

1990



統 一 院

책 을 내 면 서

이 册子는 當院이 後援하고 延世大 및 西獨 뮨헨大가 共同 主管한 第 11次 韓·獨學術會議(1990. 7.3～4, Wildbathkreuth)에서 發表된 主題論文과 各種 워크샵을 통한 主要 活動內容 등을 綜合·整理한 것입니다.

특히 同 行事가 獨逸의 貨幣·經濟·社會統合條約이 發效(7.1)된 時點에서 開催되었을 뿐만 아니라 獨逸統一과 맞물려 EC統合이 加速化되고 있는 狀況임을 勘案할 때, 유럽의 新國際秩序 改編에 關한 좋은 參考資料가 되리라 믿는 바입니다.

또한 獨逸統一과 韓半島 統一問題를 國內外的 諸側面에서 相互 比較·檢討함으로써 우리의 統一問題에 대한 狀況認識과 統一政策 樹立에 必要한 基礎資料로서 活用될 것으로 期待합니다.

여기에 收錄된 內容과 國內外 學者들의 主張이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韓·獨學術會議를 비롯한 韓·獨間의 相互友好協力關係가 韓半島의 統一問題 解決에 있어서 적은 보탬이 되기를 빕니다.

1990. 12.

調 査 硏 究 室

目　　次

第一部 : 韓·獨　學術會議　關聯　活動內容

Ⅰ. 一般事項 ····· 5

Ⅱ. 活動內容 ····· 13

Ⅲ. 主要　面談者　名單 ····· 66

Ⅳ. 評價　및　建議事項 ····· 69

Ⅴ. 蒐集資料目錄 ····· 71

第二部 : 韓·獨　學術會議　主題發表文

Ⅰ. 유럽의　經濟統合　現況 ····· 77

F.Franzmeyer (독일경제연구소)

Ⅱ. EC의　對東獨　및　社會主義諸國과의　關係 ····· 92

Klause Schneider (유럽공동체)

Ⅲ. 韓國과　유럽共同體의　장래 ····· 103

민 충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Ⅳ. 소련의　經濟改革　動向 ····· 137

Andreas Polkowski (함부르크 경제문제연구소)

Ⅴ. 東歐의　政治·經濟改革이　東·西　經濟關係에　미치는　影響 ····· 147

Knirsch (자유베를린대)

Ⅵ. 東歐의　經濟改革과　東아시아地域과의　關係 ····· 167

정 구 현 (연세대)

Ⅶ. 東獨 經濟體制 轉換上의 問題點 ····· 179
Horst Brezinski (파다본대)
Ⅷ. 南北韓間의 經濟協力 展望 ····· 199
김 학 은 (연세대)
Ⅸ. 獨逸統一의 國際的 影響 ····· 219
Kindermann (뮨헨대)
Ⅹ. 東北亞의 勢力均衡과 韓半島平和 展望 ····· 234
김 달 중 (연세대)
Ⅺ. 北韓體制의 變化展望과 金日成의 고독한 選擇 ····· 246
서 진 영 (고려대)
Ⅻ. 韓國의 北方政策과 南北關係 展望 ····· 267
안 청 시 (서울대)

第一部

韓·獨 學術會議 關聯 活動內容

(出張結果報告書)

Ⅰ. 一 般 事 項

1. 出張 目的

○ 독일통일 추진과 유럽統合 작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學術次元에서의 공동연구를 통해 분단국문제 解決을 위한 相互協力 방안을 모색하였음.

○ 이와 關聯한 학술회의 및 워크샵·懇談會 開催內容은 다음과 같음.

日 字	地 域	行 事 內 容
6.29	비 엔 나	○ 오스트리아 國際問題硏究所 워크샵
7.3-4	뮨헨(Wildbad Kreuth)	○ 제11차 한·독학술회의
7. 5	서 베 를 린	○ 전독문제연구소 서베를린분장실과의 간담회
7. 6	동 베 를 린	○ 독일은행 總裁 및 동독외무성·경제성 간부와의 간담회
7. 9	본	○ 전독문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
7.9-10	멘 체 스 타	○ 제3차 한·영학술회의

○ 특히 독일통일문제에 관한 각종 文獻資料 등을 수집함으로써 韓半島問題 解決에 원용할 수 있는 통일정책의 개발에 活用할 수 있게 되었음.

○ 한·독학술회의, 워크샵 參加者들과의 깊은 유대관계 및 각종 非公式會議를 통해 상호 우호친선 관계를 도모함은 물론, 양국관계의 이해증진에 努力하였음.

○ 아울러 **國際問題專門家**, 동독의 관료층 및 현지교민·유학생 등과의 **懇談會**를 계기로 하여 우리 政府의 통일노력을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 韓國의 대외지지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음.

2. 出 張 者

姓 名	所 屬 및 職 位	備 考
김 달 중	연세대 교수, 동서문제연구원장	
김 학 은	〃 , 동서문제연구원 부원장	
정 구 현	〃 , 동서문제연구원 간사	
서 진 영	고려대 교수	
안 청 시	서울대 교수	
민 충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 용 재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보좌관	
설 충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보좌관	

※ 박태규(연세대 교수) : 학술회의 참석

3. 出張地域 및 主要日程

○ **期 間** : 1990. 6.27 ~ 7.12

○ **訪問國** : 오스트리아, 동·서독

○ 主要日程 內容

日 字	日 程 內 容	主要 接觸對象者
6.27 (수)	○ 서울 출발 ○ 파리 도착	
6.28 (목)	○ 파리 출발 ○ 비엔나 도착	
6.29 (금)	○ 비엔나 워크샵 - 日 時 : 6.29 09:35 ~ 14:00 - 場 所 : 국립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회의실 - 主 題 : 유럽의 변화와 동·서관계의 신국면 - 參席者 : Neuhold 소장 등 14 명 ○ 대한항공 비엔나 취항 기념 리셉션 參加 - 日 時 : 6.29 19:00 ~ 21:00 - 場 所 : 비엔나 힐튼호텔 - 參席者 : 5 명 - 비엔나 거주교민 接觸 및 韓國情勢 論議 ○ 비엔나지역 교민 간담회 - 日 時 : 6.29 21:30 ~ 23:00 - 場 所 : 고려정	Prof.Dr. Hanspeter Neuhold 소장, Dr.Hans Platt-ner 이장춘 駐오스트리아대사, 조중건 대한항공 회장 등

日 字	日 程 內 容	主要 接觸對象者
	- 參席者 : 비엔나 거주 교민대표 15 명	
6.30 (토)	o 비엔나시내 시찰	
7. 1 (일)	o 비엔나 출발 o 뮨헨 도착 o 뮨헨시내 시찰	
7. 2 (월)	o 뮨헨대 總長 主催 리셉션 - 日 時 : 7. 2 10:00 ~ 12:00 - 場 所 : 뮨헨대 세미나실 - 參席者 : 뮨헨대 간부 및 한·독학술회의 關係者 등 17 명 o 한·독학술회의 관계자 사전 간담회 - 日 時 : 7. 2 19:00 ~ 21:00 - 場 所 : Tegernsee Bier-Cafe - 參席者 : Gumpel 교수, Kinderman 교수 및 韓國側 參席者 등 12 명	Steinmann 뮨헨대 총장, Gumpel 교수 (동남유럽 경제사회연구소장) Kindermann (국제관계연구소장) Dr. Schonfelder 등
7. 3 (화) -7. 4 (수)	o 제 11 차 한·독학술회의 - 場 所 : Wildbad Kreuth Hanns-Seidel 재단 연수원 대회의실	

日 字	日 程 內 容	主要接觸對象者
	- 主 題 : EC 통합 및 소련·동구의 變革과 분단국 통일문제 - 主 管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달중) 뮨헨대 동남유럽 경제사회연구소 (Gumpel) 뮨헨대 국제관계연구소 (Kindermann) - 參席者 : 한·독학자 및 전문가 45 명 ○ 한·독학술회의 韓國側 參席者 懇談會 - 日 時 : 7. 4 20:00 ~ 21:00 - 場 所 : Wildbad Kreuth 인근 Cafe - 參席者 : 김달중 교수 등 11 명	Steinmann 뮨헨대 총장 Lange Hanss-eidel재단 정치담당 이사 등
7. 5 (목)	○ 뮨헨 출발 ○ 서베를린 도착 ○ 서베를린시 Gerhard Kunze 정치담당국상 主催 午餐 - 日 時 : 7. 5 13:00 ~ 14:40 - 場 所 : Intercontinental Hotel Dachgarten - 參席者 : 한·독학술회의 韓國 및 西獨側 參加者, 서베를린지역 親韓 관계자	Gerhard Kunze 정치담당국무상, 박동규 주서백림 총영사

日 字	日 程 內 容	主要 接觸對象者
	○ 전독문제연구소 서베를린분실장과의 懇談會 - 日 時 : 7. 5 15:00 ~ 17:00 - 場 所 : 전독문제연구소 서베를린분실 會議室 - 參席者 : Dr.Holzweissig 분실장 등 13 명 ○ 서베를린지역 교민 간담회 - 日 時 : 7. 5 19:30 ~ 22:00 - 場 所 : 한일관 - 參席者 : 30 명	
7. 6 (금)	○ 동베를린 워크샵 - 日 時 : 7. 6 09:30 ~ 14:00 - 場 所 : 동베를린 호텔 - 參席者 : 독일은행 총재, 동독은행 관계자, 동독외무성, 경제성 간부 등 25 명 - 會議內容 : 독일의 經濟統合과 韓·獨과의 경제협력 전망 - 워크샵후 독일은행側이 준비한 午餐 參加 ○ 동베를린시내 시찰 ○ 독일은행 총재 주최 만찬 - 日 時 : 7. 6 19:00 ~ 19:30 - 場 所 : 동독인민의회 의사당내 식당	Prof.Dr.Knirsch Axel Osenberg Edgar Most Dr. Dube 등

日 字	日 程 內 容	主要 接觸對象者
	- 參席者 : 한 · 독학술회의 한국 및 서독측 대표단 ○ 체코슬로바키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관람 - 日 時 : 7. 6 20:00 ~ 22:00 - 場 所 : 동독 국립오페라하우스 - 參席者 : 독일은행 총재 등 12 명	
7. 7 (토)	○ 동독 산수치 궁전 관람 ○ 동독 포츠담시내 시찰 - 『포츠담』회담장소 방문	
7. 8 (일)	○ 서베를린 출발 ○ 본 도착 ○ 본시내 시찰	
7. 9 (월)	○ 신동원 駐獨大使 면담 - 日 時 : 7. 9 10:30 ~ 11:30 - 場 所 : 대사 집무실 - 參席者 : 대사, 정무과장, 통일원 직원 2 명 ○ Detlef Kuhn 전독문제연구소장 면담 - 日 時 : 7. 9 14:00 ~ 15:30 - 場 所 : 소장 집무실 - 參席者 : 소장, 통일원 직원 2 명,	신동원 주독대사 Dr.Detlef Kuhn 전독문제연구소장

日 字	日 程 內 容	主要 接觸對象者
	김명숙 (통역)	
7.10 (화)	○ 본시내 視察 ○ 政治教育센터 방문 및 자료수집	
7.11 (수)	○ 본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 프랑크푸르트 출발	
7.12 (목)	○ 서울 도착	

Ⅱ. 活 動 內 容

1. 오스트리아 國際問題硏究所 워크샵

가. 槪 要

○ 日 時 : 1990. 6.29 09:35 ~ 14:00

○ 場 所 : 국립 오스트리아 국제문제연구소 회의실

○ 主 題 : 유럽의 변화와 동·서관계의 신국면

○ 參席者 (14 명)

- 한국측 (7 명) : 김달중 (연세대), 김학은 (연세대), 안청시 (서울대), 서진영 (고려대), 최맹호 (동아일보 주비엔나 특파원), 김용재 (통일원), 설 충 (통일원)
- 서독측 (7 명)

Hanspeter Neuhold	(소장, 비엔나대 교수)
Hans Plattner	(외무성, 서구국장)
Hanspeter Manz	(외무성, 동구국장)
Josef Magerl	(외무성, 아주국장)
Poul Luif	(동연구소 연구위원, 동·서유럽전문가)
Woltraut Urban	(여, 한국·대만 등의 경제전문가)
Otmar Holl	(동, 분단국 통일문제 전문가)

나. 主要 討議內容

<김 달 중>

○ 동·서독 統合推進 상황은 直·間接的으로 남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統一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음.

o 현재 동북아정세는 유동적이며, 특히 『한·소정상회담』이후 韓國의 대중·소관계 증진이 예상되는 한편, 한국의 社會主義國家와의 經濟協力이 가속될 것으로 展望됨.

한국의 情勢는 다수여당의 출범으로 인해 安定되어 있으며, 이는 곧 經濟成長의 계기가 될 것임.

o 北韓이 아직까지 소·동구의 變革 趨勢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결국에는 開放政策을 취할 수밖에 없음.

<Josef Magerl>

o 고르바쵸프의 블라디보스톡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이후 소련의 대아·태지역 政策이 急變하고 있으며, 내년중 고르바쵸프의 일본 방문이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향후 일·소관계의 展望과 이에 따르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影響은 어떠한지?

<김 달 중>

o 고르바쵸프는 유럽정세가 東歐變革과 동서군축의 영향 등에 따라 대체로 自身의 의도대로 整理되어 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소련이 대아·태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o 몰타 미·소정상회담('89.12) 이후 미·소는 세계정세 運營에 대해 개략적으로 相互 合意하지 않았나 추측되는 바임.

o 日本은 현상유지정책을 추구하면서 미·일관계를 최대한 利用, 과거

『대동아공영권』의 구상을 재현시키려 애쓰고 있음.

○ 어차피 미·소간의 상호 군사력 감축 등으로 인해 이들의 아·태 지역에 대한 影響力이 減少될 것이므로, 일본은 ASEAN 등에 파고드는 한편, 美軍 減縮에 의한 힘의 공백을 대체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 影響力도 증가시키려 하고 있음.

<안 청 시>

○ 아시아지역에서의 군축이 東歐圈보다 훨씬 늦게 推進될 것이나, 韓半島 情勢에 있어서는 교차승인과 관계 정상화 기류가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북한이 赤化統一路線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은 대북한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北韓의 개방거부 자세가 障碍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는 소련이 북한에 대한 開放·改革壓力을 가중시킴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에 협력해 주길 바라마지 않음.

<Otmar Holl>

○ 東歐의 시장경제제도로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보는가?

○ 한국과 동구제국간의 經濟協力 展望은 어떤지?

○ 샌프란시스코 『한·소정상회담』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아닌지, 南北韓間의 經濟協力 전망은?

<김 학 은>

○ 韓國에서의 경제성장기간을 60年代, 70年代, 80年代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60년대 박정희대통령은 軍事獨裁體制를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문에 경제문제에 매달려 정통성을 認定받으려 하였으며 그 같은 결과 經濟成長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o 박대통령은 市場經濟體制의 육성보다는 산업구조 조정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誘導하였는데, 예컨대 시장경제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운용한 반면에 資本市場의 육성은 단기간에 걸쳐 推進하였던 것임.

o 이는 60년대 국내 貯蓄率이 극히 저조했기 때문에 外資導入을 통해 投資與件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70년대 이후 국내 貯蓄率이 15 ~ 20%로 上昇하기에 이르자, 중화학공업 投資를 통해 정부가 經濟成長을 주도해 나갔음.

o 6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이 重化學投資에 치중하다 보니 인플레 등 성장 부작용과 함께 海外市場開拓이 절실하기에 이르렀음.

- 72년 8.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을 통해, 政府는 대공산권 문호개방정책을 闡明, 해외시장 확대를 추구한 바 있음.

o 韓國의 경제성장은 基本的으로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나 80년대 이후 정부 개입을 縮小해 나가려는 경향 때문에 한국의 經濟構造 개편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임.

<김 달 중>

o 한국의 경제구조는 對日 依存度가 심화되는 문제점 때문에, Know how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東歐諸國과의 경제·기술협력을 추진

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增大되고 있음.

- 한국의 경제는 일본으로부터는 공작기계 등 생산재를 수입하는데 비해 美國에서는 商品販賣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對日 貿易赤字幅이 커지는데 비해 對美 貿易은 黑字를 나타내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 과거 한국은 저임금, 저환율, 저금리의 3 low의 장점(生産品의 저가)을 가졌으나, 이제 그 장점은 사라지고 새로운 經濟跳躍을 위해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을 발달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New Technology 보유국가들인 東歐를 주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임.

○ 소련은 방법상의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認定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기술이전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지어 東歐諸國들은 미사일의 고체연료(美國은 액체연료인데 성능이 뒤짐)에 대한 기술이전과 共同開發 등을 提議해 오고 있음.

○ 북한 경제에 있어서 技術의 공헌도가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 發展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되는 바임.

<서 진 영>

○ 『한·소정상회담』에 임한 고르바쵸프의 의도는 한·소관계의 正常化와 남북간 緊張緩和 支援에 있었지만, 미·일의 대북한 接近을 공식화 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하겠음.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加入하는 것이 우리 政府의 기본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라고 거부하면서 『1개 의

석에 의한 유엔공동가입』方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동·서독 統一에서 증명되듯이 2개 독일의 인정이 분단 고착화로 연결되지는 않았음.

우리는 남북한의 상호 교차승인을 통해 政治的 緊張緩和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한·소정상회담』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봄.

<김 달 중>

○ 남북한과 동·서독은 2次大戰後 분단되었으나, 현재 獨逸統一은 목전에 와있고 남북예멘도 統合되었는데도 남북한관계는 별다른 진전이 없음.

남북예멘도 유엔에 각기 가입하였어도 統一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北韓이 우리정부의 『유엔동시가입』주장을 『2개의 조선』책동이라고 非難하는 것은 논리상 일리가 있어 보이나,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음.

○ 그런데도 중국만이 북한의 主張을 지지, 한국과의 公式的인 관계개선 推進을 기피해 오고 있는데, 이는 中國指導層이 金日成과 같은 혁명원로세대인데다 대만과의 政治的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 이는 중국이 『1국가 2체제』를 主張하는데 비해, 대만은 『1국가 2정부』론을 주장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승인은 南北韓政府의 동시 승인을 의미, 대만측 주장을 수용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임.

<Hanspeter Manz>

○ 소련이 한·소정상회담을 계기로 北韓開放을 促進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原油供給을 減縮내지 중단했다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 소·북한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면, 이 같은 상황이 중국·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향후 亞·太地域情勢는 어떻게 될 것인가?

<최 맹 호>

○ 소련이 북한에 대한 原油供給을 감축했다는 報道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오히려 군사사절단의 교환 등 軍事的 側面에서의 유대관계는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안 청 시>

○ 소련이 한국과의 經濟·外交的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드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협조관계는 계속 維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북아에서의 급격한 情勢變化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더욱이 북한은 군사동원체제이기 때문에 體制維持에 따르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됨.

결국 북한은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변혁수용 가능성은 극히 稀薄하며, 장기적인 側面에서만 가능할 것임.

○ 한반도 정세의 緊張緩和를 위해서는 소련뿐만 아니라 미·일이 북한과의 關係增進을 통해 북방개방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方法이 가장 合理的이라 할 수 있음.

o 북한은 현재 한국과 같은 동적 사회의 經驗이 전혀 없는데, 일제 지배후 곧바로 스탈린제도가 이식되어 獨裁體制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북한 住民들은 비교감각이 完全히 없는 상황임.

특히 東歐와 같은 외국 TV시청, 情報交流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체제유지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反對勢力이 성장할 수 없는 분위기임.

o 따라서 김일성정권이 북한을 『사회주의 낙원』이라고 主張하면서 住民들에게 무한대의 충성을 강요하고 있어도, 실제 과거 日帝時代에 비해 생활향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住民들의 불만은 적다고 볼 수 있음.

o 북한은 東歐變革과 한·동구권 관계증진이 급진전되자 작년이후 동구 유학생 3,000여명을 불러 들였으며, 심지어 소련에서 조차 소환, 同盟國들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음.

o 북한의 변혁모델은 ①대부분의 東歐諸國에서와 같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변화 ②루마니아와 같은 民衆暴發에 따른 政權 崩壞 ③중국과 같이 政治的 변화를 거부한채 經濟的 改革만을 시도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군부 쿠데타 가능성도 排除할 수 없어 예측 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음.

o 유럽통합이후 스위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중립국의 意味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특히 유럽주둔 미·소군의 撤收問題는 어떻게 정리될 것으로 보는지?

< Hanspeter Manz >

- 고르바쵸프의 經濟改革 성공여부는 함부로 속단할 수 없지만 소련 체제의 경직성과 보수파의 반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심지어 고르바쵸프의 실각사태까지도 예상할 수 있으나, 共産主義 體制로서는 현 난국을 타개할 별다른 뾰쪽한 대안이 없다는 데에 소련의 고민이 있음.
- 폴란드가 충격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物價暴騰(“살인적인 인플레”)을 잡은데 반해, 소련은 점진적인 改革을 추진하고 있으며, 헝가리는 이미 서방측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으나, 세가지 경우 모두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露呈하고 있음.
- 헝가리와 폴란드의 改革이 평화적인데 비해, 루마니아가 아직까지 混亂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政治的 정통성의 문제라 할 수 있음.

< Plattner >

-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을 가속화 시킬 것이나 東歐가 빠진 西歐만의 統合은 역시 유럽정세의 安定에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EC, EFTA는 물론이고 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도 변화될 것이며, 窮極的으로는 CSCE(전유럽안보협력회의)도 새로운 유럽공동체 形態로 재편되리라 보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統一獨逸의 중립 가능성은 稀薄하다고 하겠음.
- 통일독일이 NATO에 殘留하드라도 소련의 주장대로 타국 침략이 불가능할 程度의 規模, 최소한 독일내 미·소 주둔군(39만명으로 合意 상태임) 규모로의 독일군 減縮問題가 새로운 현안과제로 부각되

고 있는 실정임.

o 통일독일은 European Community의 建設에 努力을 경주, 東歐 재건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려 들 것임.

<Poul Luif>

o 유럽이 統合되면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중립국가의 意味가 退色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이겠지만, 世界平和와 安全의 維持라는 측면에서는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음.

o 92년에 실현되는 EC통합은 더 나아가 EFTA(유럽자유무역기구) 組織까지 吸收할 것이며, 결국 强力하고 통합된 서구는 동구 지원을 통해 유럽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것으로 보임.

<Urban>

o 東歐는 상대적으로 西歐에 비해 GDP, 인구 등이 적기 때문에 일종의 開發産業國家(Industrial Countries)라 할 수 있으며, 동구에 대한 서구의 지원정도는 각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수 밖에 없음.

따라서 서·동구의 中間路線을 걷고 있는 헝가리의 정책방향이 주목되는 바이며, 유고·불가리아 등의 經濟狀況은 극히 나쁘기 때문에 서구의 東歐支援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서구의 사업가(Businessman)들은 동구시장 開拓을 상당히 낙관시하는 경향이 있음.

o 오스트리아의 중앙은행이 行政的으로는 재무성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대기업과의 관계도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政治圈으로부터

完全히 독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Josef Magerl＞

○ 북한이 소위 『사회주의 천국』이라고 宣傳하는 것은 Nonsense에 불과하며, 世界의 정보체계로부터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환상에 지나지 않음.

또한 북한이 住民들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군사우위체제를 통해 주민들을 抑壓하고 있기 때문에 體制維持가 가능한 것처럼 보일 따름임.

○ 북한이 남북대화나 대미접촉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對外宣傳에 불과할 뿐이며, 실제로는 내부통제의 유지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韓國이 좀 더 自信感을 가지고 의연하게 북한을 상대해 나가다 보면, 북한도 조만간 동독과 같은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임.

2. 뮨헨대 總長 主催 리셉션

가. 概 要

○ 日 時 : 7. 2 10:00 ~ 12:00

○ 場 所 : 뮨헨대 세미나실

○ 參席者 : 17명

- 韓國側 (7명) : 김달중, 정구현, 박태규, 안청시, 서진영, 김용재, 설 충
- 西獨側 (10명) : Steinmann (뮨헨대 총장), Gumpel, Kinder-

mann Schonfelder, Liliana, Scholz, Strassner 및 성명미상 교수 3명

나. 行事內容

○ 제11차 한·독학술회의 참가차 西獨을 訪問한데 대해 감사 표시 (Steinmann총장)

○ 서독측 환대에 대한 사의 표명 및 한·독학술회의 論文集과 기타 延世大 동서문제연구원 발간 책자 증정 (김달중 교수)

○ 學術會議 參加者 소개 및 회의 진행관련 협의

3. 제 11 차 한·독학술회의

가. 概 要

○ 日 時 : 90. 7. 3 ~ 4 (2일간)

○ 場 所 : 뮨헨근교 Wildbad Kreuth

Hanns-Seidel 재단 연수원 대회의실

○ 會議 主題 : EC통합 및 소련·동구의 변혁과 분단국 통일문제

○ 主 管 :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달중)

뮨헨대 동남유럽 경제사회연구소 (Gumpel)

뮨헨대 국제정치연구소 (Kindermann)

○ 後 援 : 국토통일원, 서독내독관계성

Hanns-Seidel 재단

○ 參加者 : 45 명

- 韓國側 (11 명) : 김달중 (연세대), 정구현 (연세대), 김학은 (연세

대), 박태규(연세대), 서진영(고려대), 안청시(서울대), 민충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용재(통일원), 설 충(통일원), 박광기(뮨헨대 박사과정), 김용구(마르부르그대 박사과정)

- 西獨側(32명)
  - o Prof.Dr. Wulf Steinmann (뮨헨대 총장)
  - o Prof.Dr. Werner Gumpel (뮨헨대 교수, 동남유럽 경제사회연구소장)
  - o Prof.Dr. Gottfried Karl Kindermann (뮨헨대 교수, 국제정치연구소장)
  - o Prof.Dr. Franz-Lothar Altman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 o Prof.Dr. Mihael Checinski (미군 및 소련연구소 연구원)
  - o Dr. Herman Clement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정세분석실장)
  - o Dr. Josef Deckers (Hans-Seidel 재단 서울사무소장)
  - o Dr. Liliana Djekovic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 o Prof.Dr. Joachim Glaubitz (정치과학재단)
  - o Dr. Rudolf Gruber (남아프리카재단 이사장)
  - o Sheila Gruber (남아프리카재단 이사)
  - o Dr. Marlies Jansen (내독관계성 연구원)
  - o Dr. Manuela Kligler (뮨헨국방대학 연구원)
  - o Renate Lehner (한스자이델재단 정치아카데미)
  - o Dr. Bernd Lemser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o Prof.Dr. Wolfgang Nicolai (동독 세계경제연구소 연구원)

o Prof.Dr. Franz Peterson (미군 및 소련연구소 연구원)

o Brian Rampp (뮨헨대 국제정치연구소)

o Dr. Bruno Schonfelder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o Dietrich Schonfelder (외무성 한국담당)

o Brigitte Scholz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연구원)

o Wolfgang H. Steinicke (Messerschmitt 회사 지배인)

o Renate Strassner (뮨헨대 국제정치연구소 연구원)

o Dr. Barbara Walter (고려대 교환교수)

o Dr. Horst Brezinski (파다본대 교수)

o Prof.Dr. Gunter Hedtkamp (뮨헨대 동남유럽연구소 실장)

o Prof.Dr. Peter Knirsch (자유베를린대 교수)

o Prof.Dr. Peter Eisenman (Hans-Seidel 재단 정치연수원장)

o Dr. Klaus Lange (Hans-Seidel 재단 정치·이념담당 이사)

o Dr. Andreas Polkowski (함부르크 경제문제연구소 연구원)

o Klaus Schneider (유럽공동체 대외관계실장)

o Dr. Fritz Franzmeyer (독일경제문제연구소)

o Dr. Eduard Gloeckner (베를린주재 저널리스트)

o 성명 미상자 1인 방청

나. 會議 進行 順序

日 時	會 議 內 容	備 考
7. 2 (월) 18:00 - 19:00	○ Hans-Seidel 재단 주최 리셉션	회의참가자 전 원
7. 3 (화) 09:00 - 09:30	○ 開會辭 - Steinmann (뮨헨대 총장) - Gumpel (뮨헨대) - 김달중 (연세대)	
09:00 - 12:00	○ 제1분과 회의 : 유럽統合에 있어서 懸案問題 - 사회 Gumpel (뮨헨대) ①유럽의 經濟統合 현황 : Franzmeyer (독일 경제문제연구소) ②EC의 대동독 및 社會主義諸國과의 관계 : Schneider (유럽공동체 대외관계실장) ③한국과 유럽공동체의 장래 : 민충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30 - 14:00	○ 中 食	
14:00 - 16:00	○ 제2분과 회의 : 東歐의 경제변화 - 社會 : 김달중 (연세대) ①소련의 經濟改革 동향 : Polkowski (함부르크 경제문제연구소)	

日 時	會 議 內 容	備 考
	②東歐의 정치·경제개혁이 동·서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Knirsch (자유베를린대)	
	③동구의 經濟改革과 동아시아지역과의 관계 : 정구현 (연세대)	
16:00 - 16:30	○ 休 食	
16:00 - 18:30	○ 제3분과 회의 : 獨逸統一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	
	- 社會 : Hedtkamp (뮨헨대)	
	①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상의 문제점 : Brezinski (파다본대)	
	②南北韓間 경제협력 전망 : 김학은 (연세대)	
18:00 - 20:00	○ 晩 餐	
7. 4 (수) 09:00 - 12:00	○ 제4분과 회의 : 독일통일에 있어서 政治·安保的 側面	
	- 社會 : Lange (한스자이델재단)	
	①독일통일운동의 國際的 영향 : Kindermann (뮨헨대)	
	②동북아의 勢力均衡과 한반도평화 전망 : 김달중 (연세대)	
	③통일독일의 軍事·安保的 側面 분석 : Lehner (한스자이델재단)	슬라이드로 설 명

日 時	會 議 內 容	備 考
12:00 - 14:00	○ 中 食	
14:00 - 16:00	○ 제5분과 회의 : 최근 유럽統合의 영향과 한반도 - 社會 : 정구현 (연세대) ①北韓體制의 變化展望과 金日成의 고독한 選擇 : 서진영 (고려대) ②韓國의 北方政策과 南北關係 展望 : 안청시 (서울대)	
16:00 - 16:30	○ 休 食	
16:30 - 18:00	○ 綜合 討論	
18:00 - 19:00	○ 晩 餐	

다. 主題發表 및 討論要旨

(1) 유럽의 경제통합 현황(EC 중심) : Dr. Fritz Franzmeyer

(독일경제연구소)

○ 독일통일이 進行됨과 더불어 유럽의 단일시장 형성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순수한 경제적 觀點에서 보면, EC의 단일시장은 3억2천만명의 거대인구를 包容하고 있기 때문에 1,600만명의 人口를 가진 동독보다 서독의 企業人들에게 더 큰 매

력을 주고 있음.

o 따라서 이들 서독 기업인들이 不實企業 등 危險要因이 많은 동독보다는 더욱 安全하고 큰 規模의 시장이 될 수 있는 유럽시장에 대한 投資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어차피 獨逸이 EC의 일부로서 統合되는 한 단일시장형성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o 또한 資本의 자유화, 재화 輸送에 있어서의 시의성, 통합된 재정 서비스부문 시장에 대한 法的 裝置, 대학간 학위의 상호인정, 共同體 차원에서의 기업합병과 取得 등을 統制하기 위해서도 단일시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o 1985년 EC의 핵심그룹이라 할 수 있는 서독,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주도하에 『단일시장백서』가 發表됨으로써 1990년 EC 經濟統合이 觸發되기는 하였으나,

①국가를 초월하여 개별 정치단체 등 利益集團間의 협력을 극대화함에 따라 야기될지도 모르는 內部安全의 필요성

②개별회원국에 있어서의 負債, 投資 등 재정문제, 청산단위(VAT) 지분율 결정, 담세율 減縮, 예산상의 수지 均衡 등 각종 경제적 문제의 조화여부

③단일시장 이전에 에너지, 수송, 전송, 수자원개발 계획 및 장비등 公共部門 조달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主張

④유행병과 汚染物質의 수입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방역체계 및 이를 위한 EC집행위의 강제력 부족에 대한 補完 주장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문이 상당히 남아 있음.

(2) EC의 對東獨 및 社會主義 諸國과의 관계 :

Klaus Schneider (유럽공동체)

○ 동구에 있어서의 政治·經濟的 改革運動은 유럽공동체에도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戰略은

①단기적으로 볼 때 食糧, 醫療器具의 긴급수송 및 동구의 통화체제 개편지원 등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對備하는 한편,

②중기적으로 볼 때는 조심스러운 技術支援과 投資 조정 등을 통해 東歐의 경제복구를 支援해 나가되

③長期的으로는 동구제국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安定的인 相互關係를 수립해 나가는 것임.

○ 이를 위해 EC 共同體와 동구제국간에 쌍무 貿易協力協定을 체결함과 동시에 政治·經濟的 지원을 포함한 聯合協定(Association Agrements)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 협정은 自由貿易, 정치적 대화, 다방면에서의 協力 등을 圖謀해 나갈 수 있는 영구적인 기본틀(Framework)이 될 수 있을 것임.

- 즉 이 협정을 통해 自由貿易地帶 設置, 경제통합 및 통화협력, 財政投融資, 정치·문화협력, 制度的 정비 등을 規定하며, 『상호협력위원회』와 같은 고위급 協力體制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임.

○ 이러한 일련의 협력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으려면 우선 東歐諸國이 ①자유무역과 시장경제제도의 시행 ②환율안정, 화폐의 태환화, 투자보장협정 체결 ③농산품 공급구조 재건 ④환경보존운동에의 참여 ⑤경영기법의 연수 ⑥『유럽지붕』하에서의 統獨推進에 대한 인정 ⑦EC와 코메콘간의 관계 定立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⑧東歐改革을 지원하기 위한 西歐의 경제적 안정성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임.

(3) 한국과 유럽공동체의 장래 : 민충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 지난 20여년동안 韓國은 급격한 經濟成長으로 인해 세계 10대 交易國家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이 무역파트너로서 아직 成長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認定하고 있음.

o 한·EC간 경제규모나 潛在的 시장규모를 보아 상호 매력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交易規模는 사실상 적은 편인데, EC가 한국의 3번째 무역상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規模는 美·日에 비해 극히 저조한 편임.

- 예컨대 1988년 미·일의 한국과의 교역은 33%, 21.6%였으나, EC의 比率은 11.8%에 불과하였으며, 한국은 EC의 24위 수입국가에 지나지 않음.

  특히 같은 競爭國인 대만과 홍콩에 비해서도 EC시장에 있어서의 한국비중은 너무 저조한 편임.

o 92년의 EC統合을 앞두고 한·EC간의 經濟協力을 위해서는 EC의 貿易障壁과 상호 무역마찰요인을 해소해야 할 것임.

EC는 한국을 러시아·태평양연안국가에 浸透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도 EC와의 交易關係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신속한 經濟成長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o 따라서 양자간의 교역증진을 위해 EC는 선별적 대한국 輸入障壁 減縮, 성장하고 있는 한국시장에 대한 관심제고, 韓國産業構造의 다

양화 및 成長을 支援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도 EC에 대해 輸出對象國으로서 뿐만 아니라 급성장하고 있는 大規模 시장으로 認識해야 할 것임.

○ 동시에 韓國은 소수의 商品으로 EC내 일부시장에 집중하는 輸出戰略에서 벗어나 輸出商品 및 시장구조의 다양화에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임.

(4) 소련의 경제개혁 동향 : Dr. Andreas Polkowski

(함부르크 경제문제연구소)

○ 그간 소련·동구에서의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計劃經濟制度를 補完하는 水準에서 간헐적으로 提起되어 왔으나, 근본적으로 중앙집중원칙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음.

○ 이같은 과정이 累積되어 소련의 경제상황이 점차 깊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으나, 브레즈네프 사후에야 소련경제 自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認識하게 되었음.

○ 80년대 1단계 경제개혁 작업에서는 주로 체제자체에 대한 變化없이 경제적인 效率性을 증가시키는데 주요 목표가 주어졌는 바, 안드로포프는 腐敗防止와 알콜 추방에 관한 캠페인을 導入하였으며, 고르바쵸프시대에 이르러서도 經濟의 效率性 증진과 社會主義 經濟建設의 가속화에 중점목표를 두었음.

○ 1986년이래 使用되고 있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용어는 주로 개혁을 指稱하는 의미로 이해되었으나, 最近에 와서는 정치개혁문제에까지 파급되고 있음.

o 고르바쵸프의 政治改革을 『급진개혁』이라 부를 수 있는데, 보수파 및 급진파들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는 것은 그 만큼 소련체제의 問題가 심각하다는 점과 그 解決方法의 모색이 결코 쉽지 않음을 시사해 주고 있음.

o 소련정부는 올 가을까지 改革을 促進하는 각종 계획을 提示할 것이나 소련국민의 2/3가 自由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고르바쵸프는 정치적 危險負擔이 큰 급진개혁(폴란드식의 충격요법)과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완만하며 소극적인 개혁 중에서 택일해야 하는 기로에 처해 있음.

o 결국 소련전체의 경제개혁은 不可能하다고 판단되며, 소연방은 해체될 것이고, 각 共和國은 제각기 상이한 方法에 따라 각자의 경제체제를 재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5) 東歐의 정치·경제개혁이 동·서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 Prof.Dr. Peter Knirsch (자유베를린대)

o 80년대 전반기 동구의 경제개혁은 社會主義의 테두리내에서 推進되었으나, 1989년말 이래 대부분의 東歐諸國은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改革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政治體制의 변화를 모색하기에 이르렀음.

o 과거 동·서 양진영은 사회주의경제체제와 資本主義經濟體制라는 경제체제상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경제권으로 행세해 왔으며, 社會主義 國家에서는 외국무역과 外貨의 국가독점원칙에 따라 政府가 각 分野의 대외무역관계를 장악해 왔음. 그러면서도 사회주의제국은 서

방측이 일방적인 COCOM LIST를 통해 무역금지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음.

- 결국 東歐諸國이 對外貿易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수출입 均衡을 맞출 수 있었으나 서구제국과 같은 무역주도의 경제성장을 圖謀할 수는 없었으며, 對外競爭이 排除됨에 따라 상품의 질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파생하게 된 것임.
- 이에 따라 동구 사회주의제국에서의 政治·經濟體制가 동시에 변화, 共産黨 일당지배체제 종식과 議會制度와 다당제의 定着 등 서구제국의 정치·경제체제에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동구제국의 변화가 순조롭게 展開된다면 NATO와 WTO를 대체하는 다국간 共同安保體制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92년에 실현되는 EC統合에 이어 유럽질서의 개편계기가 될 것임.
- 아울러 동구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는 世界經濟에서의 동구권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변화시켜, 결국 동·서 경제관계도 세계경제구조내에서의 통상적인 競爭關係로 突入하게 될 것이며, 서구입장에서는 또 다른 개발도상국을 상대하게 되는 셈임.

(6) 동구의 경제개혁과 동아시아지역과의 관계 : 정구현 (연세대)

- 지난 2년간에 걸쳐 일어난 東歐 및 獨逸의 변화는 한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시점에서 이루어졌음.

  왜냐하면, 1987년이후 한국의 民主化過程을 통해 임금상승, 노사분규, 환율변동 (원화절상) 등이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韓國企業의 國際競爭力 약화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

었음.

- 이러한 우리 내부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가 EC 統合과 동구변혁 등에 대해 최소한 經濟的 側面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채 세월을 浪費한 셈임.
- 과거 동구와 동아시아의 관계는 매우 미약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① 1989 년전에는 外交關係도 없었으며, ②더욱이 경제거래의 經驗도 없었고, ③物理的 및 기타의 협력사업을 위한 基盤이나 유대관계가 조성되지 않았음.
- 그 결과 소련을 除外한 한국의 동구 8 개국과의 交流는 한국 전체 交易의 0.2 – 0.3 %수준밖에 되지않고 있으나, 동구제국의 立場에서는 ①한국의 경제성장 모형 ②저렴하고 적정한 製品과 技術 ③자금공여 가능성 ④시장다변화 등의 理由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한국도 시장다변화와 政治的 이유로 인해 동구에 관심을 쏟고 있음.

  아울러 直接投資에 있어서도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으나, 삼성전자의 헝가리 投資 등의 예에서 보듯이 앞으로의 展望은 비교적 밝은 편임.
- 東歐變化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해 본다면,

  ①社會主義의 沒落은 좌경세력을 갖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程度의 안도감을 주었음.

  ②效率과 복지면에서 모두 우월한 체제를 갖고 있는 서독의 동독통합은 韓半島에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認識을 가져왔으며, 결국 남북

한간에도 窮極的으로 하나의 경제체제로 통합할 때 어떠한 경제체제가 더욱 바람직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음.

또한 통일에 對備한 체제정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점도 자각하기 시작함.

○ 소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는 이제 시장경제제도가 資本主義體制의 독점물이라고 보지않으며,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없이도 시장체계를 導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실로 시장체계를 가진 사회주의체제가 더이상 『사회주의』인지는 의심할 여지가 있음. 적어도 자원분배측면에서는 시장체계가 中央計劃體系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임.

○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국가경제체제가 가격시장경제체제에 의한 자원배분방식으로 收斂되어 가고 있다 할 수 있음.

반면에 사회주의국가에서의 社會福祉制度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은 더욱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이제 사회주의국가는 完全雇傭, 敎育, 사회보장제도, 건강제도 등 사회보장제도를 불가피하게 縮小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는 많은 서구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주의 국가보다 뒤떨어진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는 西獨이나 스웨덴을 보다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規定할 수 있으며, 동·서진영의 경제체제를 동시에 收斂하는 중간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동아시아의 복지체계는 유럽국가와는 너무도 다른데, 國家的인 制度로써 保障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家族制度에 依存하고 있다

는 점이 特徵임. 예컨대 중·고등교육 費用은 家族이 부담하며, 일부 무능력한 성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老後를 돌보아줄 것을 기대하기도 함.

○ 더욱이 남북한간의 사회보장제도는 너무 차이가 심한데, 北韓이 國家保障制度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家族福祉制度가 우세한 반면 국가보장측면은 아직 未洽하다고 볼 수 있음.

(7) 동독의 경제체제 전환상의 문제점 : Horst Brezinski (파다본대)

○ 동독이 서독으로의 통합을 進行하는데 있어 가장 큰 問題는 역시 경제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個人所有 許容에 따른 소유권 이전문제와 함께 體制差異로 인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調整이라 하겠음.

○ 그간 동독은 성장율 저하, 인플레, 대외채무, 환경 破壞 등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게 되어 민주적인 節次에 따라 價格制度 도입 등 경제개혁을 推進해 왔으며, 대다수 동독인들은 歷史, 經濟, 文化的 이유 등으로 서독의 『사회시장경제제도』를 모델로 선택하였음.

○ 이제는 경제체제 전환작업의 일환으로서 사회주의 計劃經濟制度에 대한 수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바, 예컨대 대다수의 동독인들은 시장경제제도의 精神과 理念 등에 관해 친숙해 지도록 再教育을 받고 있음.

○ 동독 경제체제를 變革하는데 있어 제기되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사유재산권의 복원

②시장가격과 경제적인 競爭關係의 도입

③새로운 화폐체제와 金融體系의 시행, 個人投資를 보장하며 적절한 하부구조를 建設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이들이 동독 經濟構造에 미치는 영향 조정 등

④하부구조와 環境汚染問題

⑤다수 실업자의 양산으로 인한 勞動市場과 사회보장문제

⑥國際的인 노동력의 분배측면

(동독노동자의 採用으로 인한 외국인 추방 분위기 등)

⑦사회주의식 분업체계의 崩壞 등으로 인한 새로운 동·서관계 정립과의 연계문제

○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혁이 계속 進行됨에 따른 부작용도 급속도로 擴大될 것이며, 동독의 경제·사회문제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것임.

○ 따라서 동독은 段階的으로 완만하게 사회주의체제를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西歐의 投資를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 구조를 安定시켜야 하며, 서독국민에게도 나쁜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서독당국이 보다 유의해야 할 것임.

(8) 남북한간 경제협력 展望 : 김학은 (연세대)

○ 북한이 閉鎖的인 自力更生原則下에 중공업우선정책을 추진한 결과, 기계·전기제품·의약·화학제품 등 기술집약적 製品의 生産에서는 크게 落後되어 있음.

○ 또한 1차상품에 의한 對外貿易과 기술집약적 제품 부족현상은 북

한경제 全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다른 나라들과의 交易에 障碍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지어 동구국가들은 북한이 자국과 마찬가지의 重工業優先政策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환이 不可能한 소련 루블貨에 의해 교역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바터(구상)무역을 점차 기피하는 경향이 증대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북한이 총교역량 중 바터무역량이 1/3에 달해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技術進步가 정체된데다 국제태환성외화(달러 등)가 不足하고 COMECON기구마저 해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더이상 바터무역을 지속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소·동구제국과 현찰교역을 한다는 것은 商品種類나 품질문제 등으로 인해 더욱 制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결국 북한은 경제적인 개혁·개방과 국내개혁을 觸發시키는 제반요인에 대한 정치적 統制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는 바임.
- 社會主義諸國에 있어서 집권층의 정치적 安定性이 경제제도의 개혁에 依存해야만 한다는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라 할 수 있으나, 경제개혁에 失敗한 동구제국의 共産黨이 자유총선에서 집권기반을 상실한 것은 이를 잘 立證해주고 있음.
- 북한이 장래에 이르기까지 權威主義的인 體制를 유지해 나가려면 국내 개혁을 상당부분 許容해야 하는 바, 북한은 당분간 중국식 모델을 답습,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제도를 擴大해 나가면서도 정치적 변화는 抑制할 것임.

○ 결국 남북한간의 경제협력 可能性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北韓體制의 存立問題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입장에서는 점진적일 수 밖에 없으며 어느 程度의 準備期間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9) 독일통일의 국제적 영향 : Karl Kindermann (뮨헨대)

○ 동구의 변혁과 독일통일에는 소련의 對內外政策 調整이라는 이면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동구제국은 스탈린時代에 군사력과 共産黨 독재체제에 의해 구축되었으나, 이제는 다방면으로 해체되는 過程에 있음.

○ 독일통일은 2 년전 고르바쵸프가 100 년안에 成就될 것이라고 展望했을 정도로 아무도 豫測하지 못하였으며, 최근에 이르러서도 통독의 速度와 역동성은 상상할 수 없을 지경임.

동독의 개혁요구 시위가 고조되었을 때 호네커 政權은 1953 년과 같은 군사적 진압을 구상하였으나, 고르바쵸프의 지시를 받는 라이프치히 주둔 바르샤바조약군 (동독군은 바르샤바조약군에 편재되어 있어, 동사령관의 命令만 따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 한스 모드로브 전동독총리가 소련이 통독에 反對하지 않는다는 메세지를 제일 처음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는 여전히 『환상적이고 危險한 독일통일』論議에 대해서 경고하기까지 하였음.

○ 금년 3 월의 동독총선 결과 기민당총재 드마이지에르를 總理로 하는 非共産 연립정권이 출범, 연정참여 정당간의 『연합각서』를 통해 서독기본법 23 조에 의한 조기통합원칙에 合意함으로써 통독작업

이 가속화된 것임.

○ 지난 6월 소련지도층간에 있었던 對外政策에 관한 秘密會議시 일부 보수파들이 동구를 잃은데 대해 강력히 批判하자,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탱크나 暴力을 쓰는 것은 사회주의 뿐만 아니라 우호선린관계도 해친다"고 경고하였다고 함.

아울러 세바르드나제 외상은 아프가니스탄事態의 教訓, 56년 헝가리 및 68년 체코사태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련군의 인기상실로 연결되어, 헝가리, 체코, 폴란드, 몽고로부터의 소련군 撤收事態로 歸結되었음을 지적하였음.

○ 현재 『2+4』會談 등을 통해 통일독일의 나토殘留問題 등 군사적 위상문제를 協議하고 있으나, 통독완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西獨의 막강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한 對外政策 조정 방향이 獨逸問題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임.

(10) 동북아의 세력균형과 한반도평화 전망 : 김달중 (연세대)

○ 東西軍縮이 진행됨에 따라 한국에서의 美軍減縮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군에 대한 작전 指揮權도 95년에는 한국군에 이양될 것이며, 이미 판문점 군사정전위 유엔사측 首席代表는 한국군을 임명키로 韓·美 양국간에 合意되었음.

결국 한국군에 대한 軍事的 地位向上은 주한미군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周邊의 군사정세에도 중요한 변화를 惹起시킬 것임.

○ 또한 경제적 側面에서 남북한간 총 交易量이 440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에는 미미한 水準일지라도 머지않은 將來에는 상당

한 량으로 발전할 것임.

이는 1995년까지 한·소 교역량이 60억불에 이를 것으로 展望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님.

○ 한국의 東歐諸國과의 公式修交에 이은 교역증가는 몽고수교 등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의 變化는 韓半島問題의 한국화와 동시에 국제적 解決努力이 공동 모색되고 있음이 特徵的이라 하겠음.

○ 아울러 6.4 센프란시스코 『한·소 정상회담』은 한반도 情勢 변화에 있어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임.

美·日 등 우방국가들은 한·소 頂上會談의 기본정신에 따라 한반도 정세 安定과 북한의 개방유도에 협력해 나가고 있음.

○ 이러한 국제적 趨勢는 결국 『두개의 한국』이라는 현상유지정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統一은 한국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論理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음.

○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開催, 6共和國 樹立이후의 점진적인 정치민주화 추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經濟安定 등 모든 상황은 한국의 對內外政策을 자신감있게 해주고 있음.

이제 우리의 주된 관심은 한반도정세 安定인데 남북한간의 相互協力 및 한반도에서의 『2+4회담』(남·북한 및 미·일·중·소)을 통해 한반도의 統一與件도 성숙될 것임.

○ 북한 指導層은 현재 이 모든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

이 상황을 외면한채 體制維持에 집착할 것인지에 대한 기로에 처

해 있는데, 독일통일을 아무도 豫測할 수 없었듯이 한반도의 통일도 예측할 수 없음.

(11) 北韓體制의 변화 展望과 金日成의 고독한 선택 : 서진영(고려대)

○ 중·소에서의 第2革命이 진전되고 있지만, 집권층의 權威가 損傷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金日成은 개혁보다는 체제유지에 주력하고 있음.

○ 金正日은 金日成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북한 住民의 生活水準을 높임으로써 指導力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일련의 過程이 북한변화의 주요요인으로 作用할 것임.

○ 비록 북한 지도층이 主體思想이나 사회주의체제를 抛棄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內外情勢의 변화에 適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制限된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음.

○ 실제 北韓指導層은 主體思想이 지도하는 계획경제로는 窮極的으로 현대화나 경제발전을 成就할 수 없다는 상황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

父子世襲體制로의 이행과정에서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는 대신에 경제를 犧牲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국주의자들의 문화, 사상적 浸透』에 반대하는 캠페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立證해 주고 있음.

○ 1989년 들어 金正日에의 權力承繼作業은 백두산중의 일봉을 정일봉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광적이며, 금년 4월 앞당겨 開催된 제7기 最高人民會議 大會를 계기로 金正日이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새로운 지위에 오름으로써 명실상부한 후계자로 부상하고 있음.

○ 이렇게 본다면 북한은 主體思想이 指導하는 이념, 정책을 고수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革命的인 개혁조류를 거부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나, 北韓이 개혁저항 움직임을 언제까지 持續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임.

○ 소련의 대한 관계 변화는 韓·蘇頂上會談이 상징하듯이 金日成이 "자기식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것을 그냥 놔둘것 같지 않으며, 金日成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음.

(12) 韓國의 北方政策과 남북관계 전망 : 안청시 (서울대)

○ 한국은 최근 權威主義的인 군사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화를 推進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民主化過程은 아직도 勞動者, 學生, 貧困層이 소외되고 있어 混亂狀態에 있으며, 潛在的으로는 폭발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政治發展과 외교적 성과에 따라 현 韓國 政府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보다 강한 정통성과 보다 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

특히 현 韓國政府는 법과 질서를 강화해 나가면서 정치적 改革·發展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民主主義를 꽃피우려 努力하는 한편, 北方政策을 통해 새로운 歷史의 章을 열어나가고 있음.

○ 北方政策의 추진 결과, 한국은 東歐와의 修交에 이어 한국 민항기의 중·소 영공통과, 貿易事務所 개설 등에 성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國際的 지위가 향상된 것도 사실임.

北方政策의 두번째 主要目標라 할 수 있는 남북한간 平和共存關係

구축 및 民族共同體 회복은 향후 점차적으로 결실을 맺을 것임.

4. Gerhard Kunze 西베를린市 政治擔當 國務相 主催 午餐

가. 概 要

○ 日 時 : 7. 5 13:00 — 14:40

○ 場 所 : 호텔 Intercontinental Dachgarten

○ 參席者 : 20 名

— 韓國側 (8 명) : 김달중, 정구현, 박태규, 서진영, 안청시, 김용재, 설 충, 박동규 (駐伯林總領事)

— 西獨側 (12 명) : Gerhard Kunze (西베를린市 政治擔當 國務相), Gumpel, Kimdermann, Schönfelder, Liliana, Scholz 및 西베를린 駐在 聯邦 공무원 6 명

나. 主要 談話 內容

○ 獨逸統一에 이어 韓半島統一도 머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며, 韓·獨間 유대가 지속되길 희망 (Gerhard Kunze)

○ 어려운 與件을 헤쳐 나가면서 獨逸統一이 추진되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며, 베를린이 統獨의 수도가 되드라도 分斷國問題를 가장 잘 理解할 수 있을 것이므로 앞으로도 韓國에 대한 配慮를 요망함.

(김달중)

○ 獨逸統一問題와 경제통합 등에 관해 個別的인 의견 交換

5. Holzweissig 全獨問題研究所 西베를린분실장과의 懇談會

가. 槪 要

○ 日 時 : 7.5 15:50 — 17:00

○ 場 所 : 全獨問題研究所 西베를린分室 會議室

○ 主 題 : 東·西獨 統合過程의 諸側面

○ 參席者 (13 명)

- 韓國側 (7 명) : 김달중, 정구현, 박태규, 안청시, 서진영, 김용재, 설 충
- 西獨側 (6 명) : Dr. Gunter Holzweissig (분실장), Gumpel, Kindermann, Schöfelder, Liliana, Scholz

나. 會議內容

＜Holzweissig＞

○ 全獨問題研究所는 1969 년 창립한 이래 내독관계성의 指導, 監督下에 독일문제를 綜合的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며, 특히 동독문제에 관해 체계적으로 分析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음.

○ 12 월 2 일 全獨合同總選에서는 어느 정당이 勝利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이는 콜 總理의 기민당 주도로 統獨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不作用의 측면도 서서히 드러나기 때문에 동독주민들의 심리적인 반발감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考慮해야 할 것임.

○ 1949 년이후 약 400 만명이 東獨을 떠났으며, 1989 년이후에도 約 100 만명이 西獨으로 脫出해 왔으며, 독일통일후에도 東獨出身의 서독체

제 有經驗者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復舊作業을 主導할 것으로 예상됨.

o 그간 全獨問題硏究所는 서독내 저널리스트, 敎師, 청소년 등에 대한 政治敎育에 注力해 왔으며, 작년 서독 청소년 360만명이 東獨을 방문, 실질적인 政治敎育을 받았음.

따라서 全獨問題硏究所는 독일통일된 후에도 東獨人에 대한 정치적 재교육을 담당할 것으로 믿으나, 베를린에 있는 정치교육센터 등과의 業務調整이 있어야 할 것임.

o 1,700만명의 동독인이 全體主義體制로 인해 고생하였기 때문에 서독체제를 동경한 나머지 共産體制를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미 공산주의 生活方式에 젖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동독인에 대한 政治敎育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임.

o 그러나 東獨의 靑少年層은 동독 기성체제에 대해 反撥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독의 여러 곳을 旅行한 관계로 비교안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한 政治敎育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임. 단지 군인, 교사 등 中堅管理者들에 대한 政治敎育을 실시할 計劃임.

o 이제 獨逸統一이 된다면 東베를린은 공산주의에 관한 博物館(Museum)이 될 것이며, 곳곳의 공산주의 유적도 後世에 좋은 史料가 될 수 있을 것임.

o 7월1일을 기해 通貨·經濟·社會統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일통일의 기반은 構築되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兩獨은 연방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美國처럼 지방(Land)

정부의 權限을 강화함과 동시에 窮極的으로는 社會民主主義(Social Democracy)를 指向해 나갈 것임.

○ 한가지 재미있는 점은 맑스 레닌주의를 가르치던 教授·教師의 再就職이 문제인데, 만약 韓國學生들이 관심이 있다면 독일정부에서 資金을 支援해서라도 보내줄 用意가 있음.

- 어차피 統一獨逸政府는 東獨의 실직 노동자들에게 失業手當을 支給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재활용하거나 再教育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안 청 시>

○ 독일통일후 東獨經濟를 부흥시켜 나가려면 연방정부의 機能이 강화되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동독지역 Land의 지방 自治權과 어떻게 調和를 이룰 수 있겠는가?

聯邦制度와 地方自治制와의 조화문제는 한반도 統一에 있어서도 좋은 연구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임.

<Holzweissig>

○ 東獨에 대한 經濟支援은 서독뿐만 아니라 日本, 韓國 등 관심있는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美國의 州(State)처럼 독일의 개별 주(Land)들이 對外經濟協力을 추구할 수도 있음.

○ 全獨合同總選後 새로이 소집되는 議會에는 동독에서 당선되는 聯邦議員도 생기게 될 것이므로, 東獨側 입장을 수용하는 새로운 憲法이 제정되리라 믿으며, 상당한 지방자치권이 保障될 것으로 전망됨.

○ 사실 西獨基本法 23條에 따라 동독 Land들이 서독연방에 加入하게 되면 정치적 統合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 이후에라도 持續的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12월 兩獨合同總選에 대비, 동독의 소수정당들이 西獨政黨과의 統合作業을 벌이고 있는데, 순수한 東獨政黨이라 할 수 있는 SED(전 공산당)은 서독 사민당(SPD)과 聯合戰線을 구축하고 있음.

<김 달 중>

○ 12월 兩獨總選時 동독의 선거행정은 어디에서 管理하는가? 서독 선거법에 따르는가? 제3의 法에 따르는가? 適用하는 선거법에 따라 선거양상이나 結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임.

<Holzweissig>

○ 원칙적으로 憲法이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 선거법이 決定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해가고 있는 중이며, 『정치통합조약』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다루어질 것임.

○ 사실 全獨總選이전에 동독주들이 西獨聯邦에 가입하게 된다면 西獨 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루면 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연방의회 진출요건이 總有效投票의 5%로 결정되어 東獨의 群小 정당들에게는 致命打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서독 연방의 각 Land는 그 나름대로 특성이 강한데, 西베를린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東獨人들에 대해 被害者的인 동질성(Identity)을 가지고 있음.

○ 비록 東獨 정치인들이 서독 政黨에 흡수 統合되어 그 정당의 공천후보자가 되드라도, 그들이 共産黨이었거나 유사한 행적을 가졌다면, 政黨 支持와는 별개의 선거행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임.

<박 태 규>

○ 東獨에서는 동독정권 수립시 剝奪한 재산권을 原主人에게 돌려주기로 서독측과 協約을 맺었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 西獨이 東獨에 비해 월등한 경제력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北韓에 비해 강한 經濟力을 유지하고 있음. 세계적인 共産主義 위기를 계기로 韓半島의 統一도 가능하다고 보는 바임.

<Holzweissig>

○ 자꾸 동독이라고 언급하는데 더이상 東獨은 存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제부터는 그냥 독일로 불러주기 바람.

○ 독일통일은 유럽통합에 重大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지만, 서독의 경제적 能力이 통합된 유럽에 있어서 主導的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東歐諸國에 대한 經濟支援을 도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프랑스나 덴마크가 未來에는 주도적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임.

○ 유럽통합이 된다면 中·東部유럽에 있어서의 環境汚染, 教育問題 등이 제기될 것이므로 獨逸은 統獨作業과 병행하며 이러한 문제도 검토하고 있음.

○ 西獨이 통독정책을 꾸준히 전개해온 것은 사실이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동독자체가 쉽게 崩壞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國民에게 體制 선택권이 돌려지게 될 경우 共産支配體制는 도태된다고 할 수

있음.

韓國도 統一에 대비한 構想과 작업을 폭넓게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임.

6. 東베를린地域 워크샵

가. 槪 要

○ 日 時 : 7. 6 09:30 - 14:00

○ 場 所 : 東베를린 그랜드호텔

○ 參席者 : 25 명

- 韓國側 (7 명) : 김달중, 안청시, 서진영, 정구현, 박태규, 김용재, 설 충
- 西獨側 (7 명) : Gumpel, Kindermann, Knirsch, Liliana, Scholz, Gumpel 부인, Schönfelder
- 東獨側 (11 명) : Axel Osenberg (西獨人, 獨逸銀行 東獨地域 調整役)

  Edgar Most (東獨人, 獨逸銀行 東獨側 責任者)

  Dr. Dube (東獨經濟省 國務擔當 秘書)

  Dr. Dubrowsky (東獨經濟省)

  Dr. Thomas Neubert (東獨對外協力省)

  Dr. Heinzmann (IFA 콤비나트)

  Dr. Niemann (東獨外務省)

  Dr. Wolfgang Krause (東獨外務省)

  女子 通譯 1 名, 姓名未詳者 2 名

나. 會議 內容

＜Osenberg＞

○ 東獨建設에는 많은 장비와 막대한 資金이 必要한 실정이나, 이를 동독주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벅차며, 西獨政府가 지원(15년 豫想)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韓國과 같은 나라들이 協力해 주기 바람.

○ 이러한 문제들을 解決하기 위해 독일은행은 東獨地域에 銀行을 재건함으로써 자본협력을 도모할 計劃이며, 東獨銀行에게 은행경영의 Know how, 經營기술(Managemt Skill), 營業方法(Business)등을 전수해주고 있음.

○ 결국 西獨立場에서는 정치적 통합은 빨리 추진하드라도 經濟問題는 통일 비용의 과다, 동독의 水準未達 등으로 인해 漸進的으로 동독건설을 支援해 나가길 바람.

예컨대 동독에는 小規模의 은행조차 없는 小邑이 많은 만큼 銀行을 건설하고 金融事業을 推進해 나가려면 막대한 재원이 投資되어져야 할 것이며, 銀行建設에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한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 서독은행이 동독지역에 銀行支店을 開設하고 온라인체제를 갖추려면, 우선 통신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등 實質的인 문제는 산적해 있음.

＜Edgar Most＞

○ 동독은 새로운 獨逸貨幣의 도입을 成功的으로 이끌기 위해 동독화폐 가치로 평가된 자산에 대해 精密 재평가 作業을 실시하고 있음.

o 東獨의 재건설, 동독자산에 대한 평가 등은 많은 問題點이 있지만, 특히 銀行 관계에만 촛점을 맞춘다면 과연 누가 막대한 資金을 조달할 것인가 하는 問題와 더불어 현 동독 住民들중 50%가 自意半 他意半으로 銀行預金을 갖고 있는데 그중 4,000 마르크까지만 西獨貨幣로 환전이 되니 無效化되는 預金과 자산 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점도 問題임.

o 또한 여러가지 Kombinat (종합공장단지)도 문제인데, 갑자기 消費財를 생산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需要·供給의 原則을 따르자면 중간규모의 새로운 공장단지를 건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統一問題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며, 새로운 世代가 새로운 價値觀에 의해 육성되어져야만 최종적인 評價가 나올 수 있을 것임.

o 資本市場經濟構造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電子, 觀光, 流通 등 下部構造의 건설이 필요하며, 한국을 비롯한 西方側의 협력과 參與가 있기를 바람.

한반도의 상황은 東·西獨의 경우와 類似한 점이 많으므로, 지금 여기에서 토의되고 있는 경제·금융문제는 韓國에게도 똑같이 適用될 수 있을 것임.

<김 달 중>

o 現 東·西獨간의 統合은 體制統合 (System Unification)의 실험이자, 새로운 複合構造의 탄생과정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注視되며, 總體的인 학문간 협력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이 필要하다고 봄.

○ 독일 신용은행 (Deutsches Kredit Bank) 은 서독의 국가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東獨에 새로운 支店을 만들게 된다면 그 所有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가?

<Osenberg>

○ 東獨에 市場價格構造가 도입됨과 동시에 Banking System (銀行制度)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동독에는 현재 2개의 國家銀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개의 은행을 신설해야 할 것임.

특히 동독건설에는 수백억마르크이상이 所要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자본의 導入과 회전·운용을 위해서는 銀行制度가 긴급히 요망되는 바임.

○ 現 동독의 國家銀行은 서독연방은행의 東獨支店 形態로 바뀔 것이며, 7월1일자로 경제·통화통합의 첫단계인 통화의 單一化가 이루어졌으나, 제2단계인 銀行建設은 今年 여름부터 시작될 것임.

따라서 우선 東獨에는 신용금고 (Sparkasse Bank) 와 같은 小規模 은행부터 設置해 나갈 計劃임.

아울러 國際的인 은행간 협력 (Banking Cooperation) 도 필요하다고 봄.

○ 동독의 신용경제가 定着될 때까지에는 서독에 의한 銀行建設이 추진될 것이나, 그 이후에는 국제적인 金融協力이 가능해질 것이며, 經營諮問 (Management Consulting) 도 받을 수 있을 것임.

<Dr. Dube>

○ 7월1일자로 完了된 통화 單一化에 이어 經濟統合의 제2단계는 주

택건설, 通信網 구축, 유통시설 확충 등 基幹産業의 발전을 통해 동독이 서독과 여러분야에서 협력관계를 圖謀해 나가는 한편, 기술 집약산업의 발전, 자본시장의 育成 등에도 努力을 경주해야 할 것임.

○ 1972년까지 동독은 사실상 고속성장을 達成해 왔으나, 80년대에 접어들어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음.

한국의 産業構造는 중화학공업의 수준도 높고 소비재 生産技術도 뛰어났기 때문에 동독과의 經濟協力을 추진하는데 좋은 점이 상당부분 있음.

- 20개의 東獨 Kombinat는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규모(1개 콤비나트는 20개의 工場으로 構成되어 있음)이기 때문에 좋은 경제협력 파트너가 될 것임.

○ 유럽統合에 있어서 독일의 역할이 확대될 것은 분명하며, 특히 소련군의 철수 등에 따라 중부유럽에서의 蘇聯影響力이 크게 감소하게 되면 그대신에 獨逸의 영향력이 相對的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그렇게 될 경우, 동독에 대한 支援과 EC내의 다른 국가 支援問題 등으로 獨逸이 二重負擔을 안게 될 것임.

○ 東獨建設을 위해서는 10 - 15년이 걸리며 綜合的인 지휘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부(Ministry of Construction)와 같은 특수한 獨自的인 행정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믿는 바임.

동독의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독일연방정부의 指導로 추진될 것이나, 統一되기 전에라도 각 州가 自治政府形態로 존재할 것이며, 여기에 속하는 관료들이 東獨建設問題를 推進할 것임.

○ 東獨에 있어서 가장 성급한 문제는 역시 Telecommunication 인

것 같은데, 이는 각 부문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므로 全獨逸聯邦 次元에서 조정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東獨의 현 經濟狀況을 서독의 70 %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데 15년이 걸리겠지만, 西獨의 발전 및 동독에 대한 投資 등을 考慮할 때 결코 樂觀만 할 수 없는 立場임.

○ 東獨은 지금까지 군사지배 文化였기 때문에 이를 전부 是正하기에는 事實上 불가능하며, 실제 동독주민들의 所得水準은 서독주민의 30 %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

그간 동독은 效率性이나 安全性은 도외시한채 物量爲主로 가장 값싼 차를 供給해 왔기 때문에(그나마 사려면 10여년이상이 걸렸지만) 현재는 公害問題로 상당수 車輛이 세워져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7. 신동원 駐獨大使 面談

가. 概 要

○ 日 時 : 7. 9 10:30 - 11:30

○ 場 所 : 大使館 大使執務室

○ 參席者 : 大使, 政務課長, 김용재, 설 충

나. 面談 內容

<大 使>

○ 현재의 獨逸統一過程은 사회·경제·통화통합 및 國境開放과 같이 가

시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 2 + 4 』회담, 관련국 頂上會談, CSCE 및 EC 頂上會談 등의 對外的 側面도 있으며, 裏面 交涉이라든지 경제적 支援 등 秘密的인 부분도 적지 않음.

○ 우리의 경우에는 과거의 양독간 接觸交流에 대한 精密分析이 필요한데, 그 원인 및 관점이나 各種 法規定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예컨대 人的·物的交流에 있어서 그 實際內容도 親知訪問이냐, 단순한 觀光이냐에 따라 규정하는 법조항이 다를 것이며, 물적교류도 물건, 金錢 등 目的이나 대상에 따라 규제사항이 다를 것임.

동·서독교류의 50 - 60 년대 過程을 살펴보아야 80 년대 현상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며, 독일통일작업이 飛躍的으로 추진되는데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이같은 作業을 위해서는 막대한 資金과 尨大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도 나름대로 독일인들과 接觸, 협력을 구했으나, 소위 독일문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때를 만나서인지 자기일에 너무 쫓기다 보니 제대로 지원해 줄수 없다고 하고 있음.

○ 단지 언제 發表된 무슨 자료라는 식으로 具體的으로 지적하면 도와주겠다고 알려왔음.

예컨대 양독이 37 만명 規模의 통합군을 發足한다고 할 때 美·蘇兩軍의 철수시기, 規模 뿐만 아니라 동독군의 減縮計劃, 軍編制의 變動 및 무기체계 등을 硏究해야 할 것이며, 소련의 입장변화에 대한 추적도 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하는 것은 추후문제이며, 우선 당장에는 각 要所 要所를 추적·정리해야 한다는 점임.

아울러 兩獨間 군사력이 60만명인데 이를 37만명 水準으로 줄인다면 관계되는 法令, 豫算, 편제, 제대군인의 職業保障, 재교육문제 등 숱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關係專門家가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음.

○ 이에 따라 駐獨大使館의 業務體系를 당분간 바꾸었는데

① 政務室은 각종 정부간 協定, 條約, 對外關係, 국내외 政治變化, 각 政黨의 통독관련 公約 등을 調査·追跡·分析하며

② 經濟部는 經濟·商工·農業·科學·技術 등을 擔當하고

③ 武官部는 國防·安保關係를 다루며

④ 文化·公報部는 정부보조금 支給關係, 교육입법, 방송통합 등을 다루고

⑤ 영사부는 國境開放, 사증면제협정, 臨時訪問客 등 영사업무를 管掌하며, 이밖에 KOTRA, 國內企業의 外國支社, 해외특파원등도 獨逸統一過程의 연구에 協調해 오고 있음.

○ 結局 주독한국대사관이 統一院의 해외연구기관으로 생각하여 支援해 주고 業務協調關係를 도모해 나가길 바라며, 통일원의 업무편제도 통독자료수집을 고려하여 適宜 調整해 주었으면 함.

8. Detlef Kühn 全獨問題研究所長 面談

가. 概 要

○ 日 時: 7. 9 14:00 - 15:30

○ 場 所: 큔소장 執務室

○ 參席者 : 큔소장, 김용재, 설충, 김명숙 (通譯)

나. 面談 內容

＜Kühn＞

○ 독일통일과 관련하여 몇달동안 經驗한 바에 의하면 共産主義란 밖에서 볼 때는 견고한 철옹성으로 보이나 實際 내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北韓과 함께 共産主義의 最後要塞인 알바니아나 쿠바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北韓도 가까운 將來에 변화될 것으로 믿는 바임.

북한도 共産圈의 沒落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樂觀과 미래의식을 가지고 南北韓間 통일문제를 推進해 나가길 바람.

○ 사실 7월1일에 시행된 東西獨間 화폐·경제통합은 世界에서 類例가 없는 대수술이며, 과거 獨逸帝國時代에 화폐전환은 있었으나 어느 일국이 自國 貨幣使用을 전면 폐지하고 他國 貨幣만을 사용한 事例는 없었음.

○ 東西獨 화폐통합의 特徵은 크게 나누어

① 실제 東獨이 아직도 엄연히 存在하는 主權國家인데도 서독화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통화주권을 포기한 점.

② 東獨에는 서독의 연방은행에 상응하는 國家機關이 없으며, 2개의 동독은행도 서독은행의 東獨支店으로 格下된 점

③ 동독이 國際資本市場에서 외자를 導入하려 해도 서독재무성의 許可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화폐가치의 安定責任을 완전히 서독에서 移讓함으로써 사실상 東獨이 독자적인 金融政策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점

④ 이러한 동독측의 화폐주권 포기는 事實上 國家主權의 양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

○ 貨幣統合은 상대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하겠으며, 이는 화폐자체에 의한 문제라기 보다는 經濟全般에 걸친 總體的 문제라 하겠음.

예컨대 東獨에 시장경제체계가 公式的으로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商業部門에서는 供給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問題가 되고 있는데, 한 例로 경제구조는 그대로 있으면서 낡은 공산주의 의식을 가진 상업요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機能이 마비상태에 있음.

즉 黨性에 의해 任命된 상업요원들은 자신의 특성이나 趣味와 상관없이 가진 직업이기 때문에 計算能力도 없을 뿐만 아니라, 商品販賣를 위한 아이디어 개발에도 關心이 없으며 오로지 보신주의, 無事安逸한 태도에 젖어 있다고 하겠음.

○ 이러한 二重的인 경제구조나 市場體系로 인해 물가만 높지, 실제로 시장 기능은 마비되고 있음.

예컨대 西베를린이나 서독에 가까운 住民들은 물건도 풍부하고 多樣한 서독지역에 와서 쇼핑을 하고 싶어하며 각종 써비스를 받으려 하고 있음.

반면에 서독 물건을 살 수 없는 地域에 사는 자들은 높은 價格으로 물건을 사거나 질낮은 東獨製品을 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불만을 가지게 되었으며, 분노하고 있는 실정임.

○ 결국 市場經濟體系가 동독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동독 國營商店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適期에 제대로 된 물건을 供給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東獨社會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結論에 도달하게 됨.

○ 그러나 이 문제를 단기간내에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상 不可能한데, 東獨의 노동생산성이 西獨이 30 - 40 % 水準이어서 東獨 工場들이 倒産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몇개의 東獨企業이 살아남더라도 동독경제의 西獨隷屬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 東獨人들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헤엄을 배우지도 못한 어린이에게 헤엄을 치라고 强要하고 있다'고 하지만, 물에 빠져 溺死할 지경인 사람은 살기위해서 헤엄을 치려고 하거나 빠져 죽거나를 擇一할 것임.

오히려 지금 동독인에게 모진 苦難과 시련을 안겨주어야 그들이 더 빨리 강해지고 富强해질 수 있다고 생각함.

<김 용 재>

○ 그러나 문제는 東獨人의 意志나 生活態度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서독정부나 서독인들이 잘 處理해 줄 것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으며, 별로 초조해 하거나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음.

<Kühn>

○ 동독인의 依存的, 非獨立的인 정신상태는 共産主義 敎育에 의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40 여년간 직업, 주택, 사회보장 등 모든 것을 國家가 처리해 주었으니 東獨人들이 굳이 힘들게 살려고 하지 않

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음.

○ 東歐諸國이 開放化되면서 西歐에 들어온 東歐人들이 힘든 일을 하려들지 않고 너무 무기력한데 대해 率直히 놀랐으며, 東歐女性들의 性風潮가 西歐보다 더욱 문란하거나 離婚率이 높은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음.

○ 지금까지 全獨問題硏究所는 서독인에 대해 공산주의나 東獨에 관한 敎育을 실시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동독인에 대해 自由民主主義 敎育을 實施해야 할 것임.

동독인에 대한 敎育問題는 12 월 全獨議會에서 決定이 되겠지만,어차피 內務省의 傘下機關인 베를린의 정치교육센터나 全獨問題硏究所 등 특수 연구기관 등에서 專擔하게 될 것임.

○ 현재 全獨問題硏究所는 ①동독에 대한 1 차 자료의 調査·分析인데 자체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개개학자나 政府機關 등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②동독을 訪問하려 한다거나 동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最近에는 東獨에 있는 재산권 回復問題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해 전화나 書信으로써 諮問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내독관계성에 보내고 있음.

③또한 자체적인 세미나를 開催하거나 支援함으로써 政治敎育을 擔當하고 있으며, 책이나 필름을 제작하여 支援하는 기능을 擔當하고 있음.

○ 現 東獨의 國家企業을 주식회사나 有限會社로 전환하거나 外國과의 合作事業(joint venture)을 추진하기 위해 過渡期的으로 동독정

부가 信託處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자세한 규정 등을 成案中이라 알지 못하며, 私有化된 개인 기업도 西方企業에 研修를 시켜 Management를 교육시키거나 西方企業에서의 諮問·顧問을 받을 수 있도록 計劃하고 있다고 함.

o 그러나 결국 동독 企業이나 기관의 中間管理는 사회적 市場經濟體制에 익숙한 서독인들로 대체되지 않을 수 없으며, 東獨의 중요기관에는 전문가 중심으로 西獨人을 大擧 파견, 급격한 변화를 追求하는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實情임.

o 이 과정에서 도태될 수 밖에 없는 無能力한 자들은 社會保障制度를 통해 구제하되, 職業再教育 등을 통해 活用할 수 있는데까지는 적극 배려해야 할 것임.

o 反面에 東獨에 대한 經濟的·社會的 지원은 상대적으로 西獨人들의 福祉를 犧牲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均衡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o 한마디로 말해 東獨人들은 重病에 걸린 환자가 살아보려고 일단 수술에는 同意했으나, 막상 수술대에 오르려니 수술에 대한 恐怖心때문에 수술하기를 두려워하는 狀態와 같다고 하겠음.

o 8월에는 東歐諸國을 방문하는데 이어, 소련도 가볼 計劃인데, 소련은 마지막 남은 식민국가로서 解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多民族國家로서의 소연방은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설 충>

o 東·西獨 統一時 동베를린에 있는 北韓大使館은 어떻게 되며, 통일

독일은 동독의 國際的 條約을 계승, 북한을 承認할 것인가?

<Kühn>

○ 統一獨逸과 북한간의 관계는 북한측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北韓이 두개 朝鮮論理를 수용하지 않는 한 北韓이 東베를린에서 撤收해야 할 것임.

그러나 北韓이 領事關係라는 의미로 현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좋을 것이며, 이러한 실리적인 外交關係를 채택할 것으로 믿음.

○ 西獨은 東獨이 맺은 조약중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 이는 國際法上의 일반원칙에 입각한 것이며, 統一獨逸이 동독과 全世界가 맺은 條約까지 무조건 受容해야 하는 義務가 없기 때문이라 하겠음. 예컨대 동독이 現在는 공산주의를 포기했지만 과거 호네커政權이 國際共産主義 입장에서 쿠바나 이디오피아를 支援했는데, 이를 統一獨逸이 그냥 답습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東獨이 東歐圈과 소련간에 維持해온 국제관계를 우리가 통독후에도 繼承하겠다는 정치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임.

○ 東·西獨 군대의 통합은 군조직의 生理上 명령에 복종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東獨의 비밀경찰인 슈타시의 解體는 그들이 各界各層에 퍼져있으며 상당한 地位와 權力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이 豫想되며, 그들을 癌的存在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獨逸統一에 필요한 基金(統一基金)은 국민세금이나 國債에 의해 造成될 것이나, 개인부문, 회사차원에서도 造成될 수 있으며, 東獨에서 市場經濟體制가 기능할 정도로 充分한 규모를 摸索하고 있음.

Ⅲ. 主要 面談者 名單

訪問國別	姓 名	所屬 및 職位
오스트리아	이 장 춘	駐오스트리아 韓國大使
	Dr. Hanspeter Neuhold	오스트리아 國際問題研究所長
	Dr. Otmar Holl	〃 同 研究員
	Dr. Poul Luif	〃
	Dr. Woltraut Urban	〃
	Hans Plattner	外務省 西歐課長
	Hanspeter Manz	〃 東歐課長
	Josef Magerl	〃 亞洲課長
西 獨	Dr. Wulf Steinmann	뮨헨大 總長
	Dr. Werner Gumpel	뮨헨大 教授, 東南유럽 經濟社會 研究所長
	Dr. G. K Kindermann	뮨헨大教授, 國際政治研究所長
	Dr. Schonfelder	뮨헨大 教授
	Dr. Mihael Checinski	美軍 및 蘇聯研究所 研究員
	Dr. Josef Deckers	한스자이델 서울事務所長
	Dr. Joachim Glaubitz	政治科學財團 研究員
	Dr. Rudolf Gruber	남아프리카財團 理事長
	Dr. Marlies Jansen	내독관계성 研究員
	Dr. Manuela Klingler	뮨헨國防大學 研究員
	Dr. Renate Lehner	한스자이델財團 研究員

訪問國別	姓　　名	所屬 및 職位
西　　獨	Dr. Wolfgang Nicholai	東獨 世界經濟研究所 研究員
	Dr. Franz Peterson	美軍 및 蘇聯研究所 研究員
	Dr. Horst Brezinski	파다본대 教授
	Dr. Gunter Hedtkamp	뮨헨大 教授
	Dr. Peter Knirsch	자유베를린大 教授
	Dr. Peter Eisenmann	한스자이델財團 政治研修院長
	Dr. Klaus Lange	한스자이델財團 政治·理念 擔當 理事
	Dr. Andreas Polkowski	함브르크 經濟問題研究所 研究員
	Klaus Schneider	유럽共同體 對外關係室長
	Dr. Fritz Franzmeyer	獨逸 經濟問題研究所
	Dr. Eduard Gloeckner	저널리스트
	Gerhard Kunze	西베를린시 政治擔當 國務相
	Dr. Gunter Holzweissig	全獨問題研究所 西베를린 분실장
	신　동　원	駐獨 韓國大使
	Dr. Detlef Kühn	全獨問題研究所長
東　　獨	Axel Osenberg	獨逸銀行 東獨地域 調整役
	Edgar Most	獨逸銀行 東獨側 責任者
	Dr. Dube	東獨經濟省 國務擔當 秘書
	Dr. Dubrowsky	東獨經濟省

訪問國別	姓　　名	所屬및職位
東　　獨	Dr. Thomas Neubert	東獨　對外協力省
	Dr. Heinzmann	東獨外務省
	Dr. Wolfgang Krause	東獨外務省

Ⅳ. 評價 및 建議事項

1. 綜合評價

○ 금번 제 11 차 韓·獨學術會議는 獨逸統合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韓·獨 兩國의 분단국문제 專門家들이 共同 參與, 2 일간에 걸쳐 大討論의 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특히 獨逸統一에 비교하여 南北韓關係 개선 방안 등이 多角度로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큰 成果가 있었음.

○ 또한 오스트리아 國際問題硏究所와의 워크샵, 全獨問題硏究所 및 東獨 주요간부와의 懇談會 등을 통해 獨逸統一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그 解決樣相 등을 생생하게 토의할 수 있었다는 點에서 부수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음.

○ 특히 뮨헨大側이 西獨內獨關係省과 Hans-Seidel 재단의 協助下에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東·西베를린地域 視察을 실시한 것은 상당히 異例的이었으며, 韓·獨 友好親善關係 구축을 위해서도 좋은 先例가 되었다고 하겠음.

○ 따라서 政治的인 獨逸統一이 성취되더라도 그 세부적인 問題解決은 오랜 時日이 소요될 것인 바, 持續的인 韓·獨學術會議를 통해 남북한 문제 解決方案을 여러 측면에서 多角的으로 모색하는 한편, 獨逸統一의 敎訓을 活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建議 事項

○ 獨逸統一의 분야별 연구를 體系化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在獨留學生과 독일문제 전문가를 效果的으로 活用할 수 있는 방안을 講究해야 할 것임.

○ 獨逸統一過程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이의 解決方案을 면밀히 파악, 南北韓關係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組織(기구)을 統一院內에 설치(특별작업팀)하거나, 더 나아가 統一院의 職制改正作業時 이를 勘案해야 하겠음.

○ 東·西獨의 統獨過程 참여자 내지 전문가의 訪韓 기회를 擴大, 民間團體·企業 등과 協力하여 韓·獨間 민간차원에서의 紐帶를 강화하는 한편, 그들의 전문적 見解를 통일정책에 反映하도록 노력해야 함.

○ 獨逸統一作業에 대한 本格的인 연구가 일천할 뿐만 아니라 各部處나 민간연구단체에서 산발적으로 推進되고 있다는 사실을 勘案, 통일원에서 主導的으로 독일통일문제를 包括하여 整理·統制하는 역할을 遂行할 수 있도록 考慮해야 함.

○ 各 部處의 독일어 解得者 및 독일 長期研修者에 대한 活用方案 강구, 전 정부차원에서 獨逸統一問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Ⅴ. 蒐集資料目錄

<獨文冊子>

1. Deutschland Ganz Rechts (獨逸의 主權回復
   —最近 7개월간의 東·西獨關係)
2. Aufbruch in eine andere DDR (또다른 東獨에의 출발)
3. Zur Rechtslage Deutschlands (獨逸의 國內外的 권리상황)
4. Artikel 23 des Grundgesetzes (西獨基本法 23條 解說)
5. Aktuelle Situation und dringenste Probleme im Schulwessen der DDR.
   (東獨의 학제상의 實際狀況과 急先務)
6. Innerdeutsche Wirtschaftsbeziehungen Ansprechpartner für auskünfte und Beratungsdienste in der BRD und DDR.
   (東·西獨間의 西獨經濟關係에 있어서의 案內와 協議에 필요한 法律相談 파트너)
7. Dokumentation zur Entwiklung der neuen Parteien und Sürgerrechtsgruppen in der DDR (東獨의 새로운 政黨과 社會團體의 發展과 關聯한 文件, 1989,11 — 1990, 2)
8. Dokumentation zur Politischen Entwicklung in der DDR und zu den innerdeutschen Beziehungen April 1990
   (東獨의 政治發展과 내독관계와 關聯한 文件, 1990, 4)
9. Dokumentation zur Entwicklung in der DDR
   (東獨情勢變化와 關聯한 文件, 1989, 10. 7 — 1989, 11.19)

10. Die Entwicklung des Hoch — und Fachschhulwessens der DDR seit der Wende vom Herbst 1989.

(1989年 가을이래 東獨의 學生運動 發展樣相)

11. Neutrale in die EG ?

(유럽 共同體에 있어서의 中立主義)

12. Handbuch zur Rüstungskontrolle

(軍備統制 要綱)

13. Grundmuster lateinamerikanischer Aussenpolitik

(라틴아메리카의 外交政策 기본모형)

14. Radioaktivität und Strahlung (라디오와 放射線)

15. Forum Politik Unterricht (政治教育廣場, 89. 1)

16. Politische Studien (政治研究, 1989, 11 — 12)

17. Politische Studien (政治研究 — 東獨과 東歐改革 特輯 1990, 5-6)

18. Zur Geschihte der DDR (東獨歷史)

19. Jugend in der DDR (東獨의 青少年)

20. Der Freie Deutsche Gewerkschaftsbund

(東獨自民黨의 역사와 組織)

21. Die Verfassung der DDR, Ein Machtinstrument der SED ?

(東獨社會民主黨의 權力體制와 東獨制度)

22. Die Familiengesetzgebung der DDR (東獨의 家族法)

23. Zur Kulturpolitik in der DDR (東獨의 文化政策)

24. Die Nationale Volkarmee der DDR (東獨의 人民軍)

25. Politische Studien (政治研究, 1988, 1 특집)

26. Sondderband DDR (東獨特輯 — 年表)

27. Vorteile der Wirtschaftlichen Einheit Deutschlands

(獨逸 經濟統一을 위한 先決問題)

28. Berlin von A bis Z (베를린 A에서 Z까지)

29. Der Tropen wald — Aktionsplan (熱帶森林 復元計劃)

30. Chronik der Ereignisse in der DDR (東獨年表)

<英文冊子>

1. Berlin (베를린소개 小冊子)

2. The Leading Hotels of the World (世界主要호텔 — 1990)

3. East Berlin (동베를린)

4. Berliner Forum 1/90 (베를린광장)

5. Berlin for Young People (청소년을 위한 베를린소개 冊子)

6. Berlin outlook (베를린觀光 案內 책자)

7. 東·西獨間 經濟, 貨幣, 社會統合條約 英文本

8. Potsdam (포츠담市 案內冊子)

9. Confidence Building and East — West Relations

(信賴構築과 東西關係)

10. Current Financial and Monetary Proble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e World Capitalist Economy

(世界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 開發途上國의 財政通貨問題)

第二部

韓·獨 學術會議 主題發表文

유럽의 經濟統合 現況

F.Franzmeyer
(獨逸經濟研究所)

<토론의 추세>

지금껏 유럽에서 가장 重要한 관심사로 여겨지던 단일시장(The Single Market)問題는 독일의 經濟的 재통합이 進行됨에 따라 주된 관심사로부터 밀려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濟的인 觀點에서만 볼 경우, 만일 단일시장추진계획 덕분에 인구 3億2千萬의 EC市場이 전보다 더 나아진다면, 이것은 인구 1,660萬名의 동독(GDR)이 경제패러다임을 變化시킴으로써 일어나는 급속한 發展보다도 서독기업에게는 훨씬 더 큰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양자가 서로 兩立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派及效果를 창출하기 때문에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 서독기업의 立場에서는 유럽지역에 직접 投資할 선택권이 많아지고 活動市場이 넓어진 것 뿐이다. 그러므로 동독이 EC의 한 부분으로 統合된다면 단일시장의 經濟的 成果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러나, 단일시장을 完成시키는 論議가 잠잠해진 데에는, 獨逸統合보다는 덜 극적인, 또 다른 理由가 있다. 즉, 委員會가 애초에 내세웠던 內容中 대부분이 協議會의 過半數 贊成을 얻거나 만장일치를 통해 合意됨으로써 실행되고 있고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건들 중에서 重要한 것은 資本의 自由化, 재화이동자유화 일정, 金融市場統合을 위한 法的體制, 大學學位의 상호인정, 합병 및 인수의 통제등이다.

그러나, 단일시장이 效率的으로 잘 運營되기 위해서 重要하지만 아직까지

는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案件들도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의 역내국경 자유왕래, 間接稅率의 調整 問題가 속한다. 이 두가지는 물리적 장애의 철폐를 뜻하는데, 이것은 유럽인이라는 감정을 공유하는데 있어 가장 重要한 상징적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남아있는 네가지 주요 문제>

統合을 進展시키기 위한 政治的 움직임이 활기를 되찾고 위원회가 단일시장백서(White Paper on the Single Market)를 提示하였던 1985年에 EC國家들중 主要 國들(서독, 프랑스, 베네룩스 國家들)은 1990年 1月1日까지 상호국경통제를 철폐시킬 것이라는 1차 센젠조약(Schengen treaty)에 선뜻 同意하지 못했다. 센젠조약에 서명한 각 國家들의 內部保安問題는 개별국가의 경찰기관, 정보기간, 이민 및 피난민을 관장하는 機關들이 協助를 강화하고 各國의 法과 規程을 調和시킴으로써 해결하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이런 問題들중 大部分은 적시에 適切히 解決될 수 없었다. 동독을 어떻게 統合시키는가 하는 問題가 1989年 末에 發生했다. 센젠조약은 아직까지 施行되지 않고 있다. 2차 센젠조약에 署名함으로써 관련 정부들이 最近에 同意한 새로운 시한은 1991년 말이다. 이 條約이 各國의 國會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때문에 이러한 合意에 대한 반응은 기쁨과 슬픔이 混合된 것이다. 왜냐하면, EC역내 國家들의 國民들이 앞으로 더 自由롭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동전의 한 쪽면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면이란, 컴퓨터를 利用한 個人資料에 대한 接近이 점점 더 용이해지고 一般化됨에 따라 第3國으로부터 보호를 要請하

는 사람은 以前보다 더욱 커다란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이다. 이 條約이 施行되어 이 分野 最初의 결속기제가 된다면, 지금 막 시작된 '유럽의 요새화'에 대한 論議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다.

재정적으로 조정을 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회원국 정부들은 國家豫算에 미치는 財務的 影響이 크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委員會가 提案한 意見을 따랐다. 위원회의 제안은 제일 먼저 부가가치세율의 下限과 上限을 導入하고, 두번째로는 부가가치세율의 數를 두개로 그리고 國內特別物品稅를 다섯개로 줄이고,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원칙을 행선지원칙(principle of destination)에서 원산지원칙(principle of origin)으로 變更함으로써 중간투입물에 대한 조세감면을 허용하며, 마지막으로 국가간 청산시스템을 통해 조세수입의 財政的 均衡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해 덴마아크 政府는 국가조세수입이 아주 심각하게 낮은 水準으로 떨어질 것이며 담배와 주류에 稅金을 부과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입을 통해 消費者政策을 實施하는 것이 不可能해진다고 주장했다. 영국 政府는 생필품에 대해 稅金을 부과하지 말 것을 要求했고 프랑스는 사치품에 대해 高率의 附加價値稅를 適用하자는 주장을 했다. 더욱이, 청산시스템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되었다. 會員國들의 이러한 반대의견을 제외하더라도 委員會의 제안에 체계적인 결함이 있음이 나타났다. 즉 국내물품세가 ECU (유럽통화단위) 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物品稅를 EC 換率에 맞추어 환산해야 함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모든 국경을 넘는 거래가 마케팅 구조의 多角化보다는 재화의 移動을 하도록 設計되고 運營되고 있었으므로, 몇몇 品目에 대해서는 행선국가원칙이 계속 남아있어야 했다.

결국, 委員會는 두차례에 걸쳐 제안을 수정하였다. 현저한 變化는 부가가

치세 상한의 철폐였다. 이로인해 各 國家別로 부가가치세율의 차이가 계속 남아있게 되었으므로, 국경을 넘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不利할 경우에는 競爭의 왜곡이 발생할 危險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자동차와 같이 유동성이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행선지원칙이 完全히 되살아났다. 마찬가지로, 郵便을 통해 타국소비자에게 販賣를 하는 것도 행선국가의 세제에 適用되어야 했다. 그러나, 자동차는 소유자가 거주하는 곳에 登錄을 해야하기 때문에 첫번째 경우는 財務當局이 比較的 쉽게 통제할 수 있지만, 두번째 경우는 企業의 신고여부에 따라 稅金賦課對象去來로 파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먼저 경우에 비해 統制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몇몇 國家들은 委員會가 수정한 計劃안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1992년 12월 31일까지 물리적장벽을 除去한다는 內容을 變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計劃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計劃에 따르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과도기에는 이전에 사용하던 행선지원칙이 계속 使用되지만, 국경통제가 必要치 않도록 最終的으로 販賣가 되는 나라에서 稅金을 부과하도록 되었다. 이로인해 財務當局은 企業들이 販賣國家를 밝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統制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委員會는 수정된 最初計劃에 집착하고 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수익을 줄이는 문제, 즉 附加價値稅의 상한을 내리는 問題는 會員國家들 사이에서 다시 論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論議의 핵심내용은, 몇몇 國家에 있어서는 재정적 충격이 너무 커서 현재 維持하고 있는 體制가 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일시장이 成立되기 전에 아직도 많은 自由化가 이루어져야 하는 세번

째 分野는 정부조달분야이다. 보상율, 기만행위에 대한 對應策, EC 입법안의 시행 등의 分野는 상당한 진전이 있으나 에너지, 교통, 통신, 물(水)에 관계된 工場 및 設備와 같은 重要 分野는 아직도 요원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競爭者가 없어 이익을 누려왔던 강대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안한 자유화지시조치들은 입법화단계에 있으며 EC條約 100a조에 따르면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되기 때문에 곧 議會를 通過할 可能性이 높다. 한편, 公式的인 法律上으로는 모든 會員國들을 包含하여 공공조달시장의 完全한 자유화가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問題시되고 있는 製品들의 경우에 있어 完全한 사유제품부문처럼 競爭的인 市場環境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硏究開發投資에 많은 資金을 지원한 分野의 生産效率性에 따라 정부의 이해가 左右될 뿐만 아니라 공공재시장이 독과점적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조달부문은, 各 地域政府가 독자적인 財政權을 부여받아 企業들을 유치하기 위한 政策을 運用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全體的인 效率性의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지만, 政府次元에서의 공공조달부문은 經濟活動의 보다 평등한 분배에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제출한 백서를 施行함에 있어 아직도 進行이 덜된 統合政策의 네번째 分野는 유행성이 있거나 汚染된 製品 輸入에 대한 식물위생법상, 동물위생법상의 제재조치에 관한 分野이다. 최근에 프랑스와 독일이 영국으로부터의 고기수입을 禁止한 것은, 각 국의 건강규제법이 모두 동일한 수준이라는 가정하에 各 國의 건강규제에 대한 法을 상호 인정한다는 委員會의 提案을 會員國家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1993年 1月1日부터 施行될 예정인 EC法案의 입법화가 가능한 최

종시한을 감안할 때, 이 分野에 있어서의 조정작업이 내년말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예측되는 동향>

단일시장문제에 관한 立法活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시장백서내용 중 많은 部分은 공동체 水準에서 입법화하기로 되었다.
- 소수의 部門이 최근 몇달동안 급진전되어 國家水準에서 통과했다.
- 의회에서 만장일치를 얻어야 하는 內容 55개중에서 아직 決定하지 못한 것이 30개나 남아 있다.
- 만장일치가 必要한 내용중에서 稅率의 조정과 移動의 自由라는 두가지 問題에 대해 適切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국경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만일 조세문제와 移動의 自由問題에 대한 조정노력이 失敗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통제가 철폐된다면 국경의 統制는 단지 관리적 節次에 의해서만 유지될 可能性이 높다. 이렇게 되면 '체키니 조건(Cecchini conditions)'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체키니그룹은 재화나 서비스, 자본이동의 完全한 自由化와 노동자, 기업가, 학생, 연금생활자, 여행객 등 모든 사람들의 移動의 完全自由化를 通해서 발생가능한 최대의 비용절감액을 非유럽 비용(Cost of Non-Europe)이라고 계산해 냈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자유화를 통해 얻은 運用의 여지를 利用하여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모든 價格은 평균 6% 下落하고 全體成長率은 4.5%

에서 7%로 上昇하게 된다. 체키니 조건이 발생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費用節減效果와 成長效果도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效果 自體와 유럽이 統合되었다는 소식으로부터 發生할 심리적인 기대효과와는 명확하게 區分을 해야 한다. 消費者團體의 水準 以上의 자유화 조치 대부분이 아직 實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현상으로서의 체키니效果는 아직까지는 약간 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會員國內의 經濟活動은 급속히 증가하였고 최소한 기대 이상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또한, 會員國간의 交易도 1975년과 1985년의 EC총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比重의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상호직접투자액도 이전에 비해 급격히 增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단일시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생긴 일이다. 물론 이러한 變化는 市場의 國際化 및 國際的인 노동의 분화증가라는 일반추세와 방향이 같고, EC지역외의 國家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EC 內部에서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너무나 명백하므로, 1992년 以後 競爭이 더욱 치열해질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企業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유리하게 確保하려는 움직임으로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럽경화증(eurosclerosis)'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이것은 유럽지역에 있어 經濟를 完全히 統合하자는 생각에 새로운 活力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동시에 지금껏 좌절되어온 유럽의 정치적 통합이라는 主要問題를 자극할 것이라는 일련의 사건들의 연결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유럽지역 단위의 자유화와 규제철폐 效果에 대한 수 많은 硏究調査를 通해 낙관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유럽통합위원회는 企業家들의 기대행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였다. 따라서, 경

제통합과정은 원래 豫想했던 모델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자신의 궤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단일시장에 관련된 새로운 움직임은 통화동맹이나 정치동맹의 設立과 같은 '측면정책(flanking politics)'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을 자극하였다. 통화동맹을 주장하는 것은, 공용화폐의 使用이 論理的으로 볼 때 경제통합의 최정점이기 때문이고, 정치동맹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各 國家에 대한 財政意思決定의 양도나 委員會의 民主的인 통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동맹을 이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일시장과 관련된 위험요소>

그러나, 단일시장의 도래와 關聯해 위와 같은 기대 이외에도 몇가지 위험요인들이 있다. 이중 특별히 두가지만 確認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만장일치를 要求하는 主要問題들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發見하지 못하면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것이다. '채키니조건'만이 現在 움직임에 作用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단일시장의 完成이라는 目標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 잠재적 최대 利益과 比較해 볼 때 비례적으로 利益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統合에 대한 기대가 經濟活動의 기반으로 作用하고 있다면, 統合을 이루지 못할 경우의 실망으로 인하여 유럽통합의 政治分野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심각한 後退가 발생하는 과격한 반응이 야기될 수 있다.
- 둘째, 現在 經濟活動分野에서 볼 수 있는 급속한 統合過程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獨立的으로, 노동의 분화의 심화와 競爭의 치열 뿐만

아니라 加速化된 成長과 關聯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단일시장의 근본취지가 規制의 철폐인 반면, 더욱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영향의 예로서 重要한 것으로는 도로전용수송수단으로 인한 公害, 企業의 합병으로 인한 競爭의 회피, 큰 임금격차와 높은 요소이동성으로 인한 사회적 덤핑問題 등이 있다.

政治人들은 특히 이러한 狀況에 대해서 커다란 責任感을 느껴야 한다. 기대가 무너져내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어떤 경우이든 역내국경통제를 철폐할 수 있는 方法을 모색해야 한다. 공해통제에 관해서는 시장백서가 단일시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치적 행위들의 範圍를 너무 넓혀놓았기 때문에 그 증대하는 危險性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못했고 정확히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公害問題는 단일시장문제와 분리시켜서보다는 같이 다루어 처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여하튼, 環境政策은 유럽단일화법안에 의해 EEC條約에 包含되어 있는 한은 공동체를 위한 活動分野中 最終的으로 가장 重要한 分野가 될 것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

사회적 덤핑의 위험성은 高賃金國家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作業場所를 移動시킴으로써 저임금국가에 거주하는 企業이 임시직에서 저임금조건을 받아들이는 자국의 노동력과 高賃金國家에 位置한 자회사의 資本財를 結合할 수 있는 수송이나 건설업 같은 特定分野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作業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賃金과 社會費用에 基盤을 두고 計算을 하는 方法을 會員國들이 규정할 수 있도록 權利를 부여받기는 했다. 그러나, 첫째, 供給者들은 임금관세 이상의 賃金移動은 무시할 수 있다. 둘째로, 최종적으로 지불되는 賃金이 낮아서 공급기업들은 자

재원가를 낮추거나 마진을 낮추어 計算할 수 있고, 세번째로 豫算契約下에 있는 공공계약자들은 供給價格을 여러 計算의 한 세부항목으로 여기기보다는 供給價 그 자체만을 重要視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송부문이나 건설부문의 特殊한 競爭狀況과는 달리 단일시장복표와 관련된 규제해제조치로 인해 企業의 競爭樣相에 새로운 要因이 생겼다. 즉 지금껏 要素의 投入과 利益率에만 영향을 미치던 競爭이 法的 體制까지 세금, 사회안보조건들, 정부강령에 의한 外部發生費用의 내부화 정도와 같은 경제체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한 나라에 있는 供給者들이 特定한 分野에서 競爭的 우위를 保有하고 있다면, 그래서 다른 國家에 있는 企業들이 열위에 처해 있다면, 모든 國家들이 包含된 自由貿易下에서는, 이처럼 열위에 처해 있는 國家들의 供給者들은 基準을 下向調整하라고 정부에 壓力을 行使할 것이다. 政府가 이러한 壓力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國家에 있는 供給者들이 높은 生産性과 같이 자신들의 열위를 補完해 줄 우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企業들은 占有한 시장을 잃거나 파산하게 되어서, 그 결과 發生하는 실업문제 때문에 종국에는 해당정부가 調整하는 것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다른 국가에서 만연한 낮은 水準의 규제비용으로 適應을 해가면, 例를 들어, 벌어들이는 높은 收入으로 낮은 社會的 移動을 보상할 수 있게 되어 成長을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은, 政府가 自身들이 行하던 옛날 기준에 맞추는 政策을 施行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을 결코 完全히 대체할 수 없다. 80年代에 볼 수 있었던 전세계적 규모의, 세금감소의 國際的 擴散은 以前에 企業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켜 가던 現象과 아주 유사한데, 이러한 企業補助金 增加는 비판을 받아왔고 또 그래야 마땅하다. 그리고, 수요의 탄력성은 착취되고 擴大의 나머지 部分들

이 '인근궁핍化(beggar-thy-neighbour)'일 뿐인 한 모든 國家에 있어 終局에는 非效率性을 보일 것이다.

企業集中에 관해서는, 공동체 水準에서 기업합병을 규제하려는 10 여년간의 努力이 허사로 돌아간 시점에 단일시장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게다가, 委員會의 提案이 수차례 수정을 거친뒤 議會를 통과하기까지 4～5년의 시간이 더 걸렸다.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합병 및 기업매수가 늘어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단일시장추진계획만이 議會의 태만한 意思決定態度를 깨뜨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많은 관찰자들은 경쟁규제에 대한 獨逸法의 높은 基準에 비추어볼 때 기업집중규제의 최종 결과는 기껏해야 차선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計劃된 합병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形態를 비판하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産業政策의 순수경쟁 관련측면과 다른 보다 상위의 측면을 합하여 위원회 組織 內에서 意思決定을 내려야 할 것인데, 獨逸法에서는 이 양자가 명백히 區分되어 있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獨逸法이 適用될 可能性은 아주 희박하다. 하지만, 어떤 나라는 完全한 統制手段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전혀 統制를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모든 會員國家에서 합병을 統制할 수 있는 공동체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낫다. 이로 인하여, 유럽지역에 합병통제수단 없이 단일시장계획이 시작된 것은 一種의 '목숨을 내건 승부(va-banque game)'였다는 사실이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측 면 정 책>

合併統制措置는 단일시장문제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네가지 자유'

창출과 함께 하는 '支援政策'의 한 構成要素이다. 이에 대한 보충조치는 技術協力政策과 중규모기업에 대한 支援政策이다. 여기에는 많은 措置들이 생겨날 수 있다. R & D政策을 잘 나타내는 수치를 예로 든다면, 1991년 EC의 총예산은 13% 정도 증가한 반면 R & D 支出豫算은 18% 增加하였다.

두번째 支援政策은 構造的 問題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地域政策을 移轉시키는 결합정책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1988년에서 1993년 사이에 예산이 두배로 增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移轉政策의 目的은 단일시장을 推進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중력효과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豫算을 두배 增加시키는 決定은 1988년 2월에 發生했던 委員會의 '適正收入 改革(proper-income reform)'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그때부터 단일시장의 成長效果가 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成長의 추진이 地域的으로 미치는 영향은 그리 명백하지 않다. 構造調整資金(structual fund)로부터 혜택을 받는 國家들은 이 資金을 보다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해 왔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세번째 支援政策은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의 구축이다. 이것 없이도 네가지 自由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일시장을 위해 반드시 必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면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투자자들이 보다 安定的인 예측을 할 수 있다. 通貨政策에 있어 보다 집권화된 의사결정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각국의 인플레이션율의 차이가 환율의 불확실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므로, 80年代에 이루어진 접근은 70年代의 경우에 비해 더욱

높은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政治的 도약을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된다. 지난 3年間 회원국들 經濟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불안의 주요요인이었던 독일과 프랑스의 차이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따라서, 제도적인 조치를 취할만큼 시기가 무르익은 것 같다. 이러한 制度的 조치의 가이드라인은 EMU에 대한 델러(Delors)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이 報告書의 세단계 접근법에 따르면 첫번째 단계는 올해 7月 1日까지 완료될 것이다. 이것이 완료되면, 상호상담이나 비강제적 추천, 남아있는 가능성의 재조정 등에 기반을 두고 완만한 형태이기는 하나 역내 자본이동의 완전한 自由化와 보다 나은 政策調整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유럽통화제도(European Monetary System:EMS)의 공식사용화폐인 ECU사용에 대한 모든 장애가 없어지고, 모든 회원국들은 EMS의 환율기제에 기꺼이 참여하게 된다. 실제로, 영국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가까운 시일 내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리이스만이 외부에 남아있을 것이다. EMS참여 國家들이 환율의 安定性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영국의 참여 소문이 나돌자 마자 파운드화의 價値가 절상된 사실을 보면 추측할 수 있다.

EMU를 이루기 위한 첫번째 작업에 대해 합의를 본 것 이외에, 회원국들은 EEC조약 236조에 의거하여 올해 12月 정부대표자 開催에도 의견일치를 보였다. 이 會義에서는 EMU 제2단계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條約의 개정에 관하여 의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번째 단계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제도(European Central Bank System) 가 설립되고, 점점 더 집단의사 결정 형태를 띠기는 하지만 통화 및 환율政策의 최종책임은 각 國家에 남아있게 된다. 델러 委員會는 이 단계를

좀 더 상세히 모형화하지는 못했다. 물론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는 두번째 단계가 불필요하므로 EMS를 강화하는 장기간이 지난 후 첫번째 段階에서 곧장 세번째 段階로 이행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많은 國家들은 두번째 段階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국은 가을회의에는 참석하지만 巨視經濟政策에 관한 자율권한을 양보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발표했다. 이러한 태도는 共同體의 제도적 발전에 기본적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發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올해 12月에 제 2차 정부대표자 회의를 열기로 한 EC의 다른 政府들의 目標이다.

강경발언을 하기는 했으나, 내부정치적 이유때문에 대처 수상이 영국을 가입시키려는 압력을 계속 견뎌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또한 東-西獨 통화연합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EMU의 전망이 나아졌다. 한편 이렇게 된 데에는 政治的 이유가 있다. 즉, 너무 거대해지고 자꾸 동쪽을 향해 움직이려는 통일독일에 대한 EC참가국들의 관심을 없애기 위해서 聯邦政府는 서유럽통합을 이룰 용의가 있음을 강조해야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EMU의 經濟的 전망은 나아졌다. 경제활동을 강화시키면서 동독에 대한 輸出과 輸入을 재조정함으로써 서독이 현재 누리고 있는 큰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독의 흑자폭 감소 可能性은 EMS 내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적자국들이 이자율정책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운영의 여지를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의 여지를 얻은 것이 EMU 구축에 결국 도움이 될지 안될지는 후에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프랑스푸르트에서 일어나는 통화정책에 의

해 자신들이 더이상 좌우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상, 聯邦銀行(Bundes Bank)을 共同體 구조에 포함시킬 必要性도 느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 종 결 론>

요약하자면, EC의 統合現況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은 市場統合을 상당히 많이 進展시켰다. 自由化段階中 많은 內容들이 공동체법, 國家法이 되었으므로 되돌릴 수는 없다. 절차상으로 볼 때는 단일시장문제에 대해 과반수 贊成制를 導入했기 때문에 進展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 유럽법정(European Court)이 EEC條約 100a條에 의거하여 면제를 決定하는데 최고의 重要性을 지니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경장벽을 完全히 철폐하고자 하는 議會의 努力이 失敗한다면 심각한 장애에 당면할 위험이 있다. 이것은 經濟的 이유라기보다는 心理的인 이유때문일 것이다. 우선, 단일시장 열정에 대한 疑心 때문에 企業의 意思決定者들은 투자하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둘째, 각국 政府들은 資本移動과 같은 보안규정을 더 자주 사용하거나, 공공조달과 같이 공동체법이 유예부문으로 認定한 분야에서 자국중심적이 될 것이다. 세째, 유럽정치동맹이라는 최종목표를 위한 제도적 통합에 필요한 最小限의 사전조건으로 여겨지는 단일시장계획을 넘어서는 內容도 包含하고 있는 측면정책을 開發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질 것이다.

EC의 對東獨 및 社會主議諸國과의 關係

Klause Schneider
(유럽共同體)

<새로운 도전>

중·동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以前과는 比較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정치적·경제적 改革운동을 향한 도전은 G 24 속의 서구 상대국들과의 긴밀한 協力 속에 공동체(the Community)로부터 광범위한 經濟的 반응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의 戰略은 세가지 目的을 의도하고 있다.

① 短期的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긴급한 식량과 의료를 供給함으로써, 그리고 동유럽 通貨를 支援 (폴란드와 헝가리에 대한 대부) 함으로써, 經濟的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

② 中期的으로, 기술지원 그리고 PHARE조치와 궤를 같이 하는 신중한 직접투자를 通해서 經濟面의 재구조 조정과정을 지원하는 것

③ 長期的으로, 동유럽 國家들의 독립을 도울 목적으로 양측의 합의결과를 通하여 安定的이며 자주적 관계, inter-alia의 기초를 닦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政治的·社會的·文化的 관련 속에서 발전하기 위해 段階的 措置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 그러나 여기서는 관계

들 중 경제적 측면에 주안점을 두기로 한다

<相互交易과 協力에 관한 協定>

상호 交易과 協力에 대한 협정은 공동체와 헝가리(1988年9月, J.O.L 327/1, 1988.11.30), 폴란드(1988年9月, 89年11月22日, J.O.L 339/1), 소련(1989年12月, 90年3月15日, J.O.L 68/3), 체코슬로바키아(1990年5月7日), 동독과 불가리아(1990年5月8日) 사이에 이미 조인되었다. 이와 비슷한 協定이 루마니아와도 1990年7月8日에 始作되었다. 이와 같은 協定을 통해 전에 없었던 위 國家들과 공동체관계 형성을 위한 基本骨格이 만들어지고 있다.

교역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提供한다.

① 관세와 關聯分野에 있어서의 최혜국 대우
(몇몇 相對國들은 이미 GATT體制下에서 이런 權利를 갖고 있었다: 다른 國家들과의 協定에 있어서, 우리는 特許와 태환지폐 割當에 관한 問題에 있어서, EC가 차별없는 대우를 해 줄 것을 持續的으로 주장해 왔다.)

② 때때로 다소의 몇몇 민감한 生産物에 대한 例外는 있지만, 1994年이나 1995年까지(다른 GATT國家들로부터가 아니라)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수입물에 특히 適用된 양적 제한규정의 제거
(實際로 폴란드나 헝가리에 적용된 모든 量的인 제한규정은 PHARE 조치하에서 이들 國家에 대한 시장개방의 일환으로써, 1990年1月1日

로부터 철폐되거나 중지되었던 同時에 그들 國家에는 제조업과 농산물에 대한 GSP혜택이 주어진다.)

③ 만약 이러한 자유화 조치가 공동체 生産者들에게 피해나 그에 대한 위협감을 준다면, 우리의 産業을 保護하기 위한 보호조항을 마련한다. (우리는 과도기 段階라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편으로는 市場에 대한 자유롭고 公正한 접근을 할 수 없는 狀況에서 經濟改革을 이루기가 곤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改革이 充分히 遂行되지 않고서는, 價格이 비용함수로서 기능하지 않는 곳에서, 즉 外國貿易體系가 中央으로 집중되고 침체된 오랜 관습을 가진 國家들에 있어서는 그들 國家가 덤핑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외의 協定部分은 중·동부유럽에서 과거 및 現在의 조건하에서 많은 問題들을 안고 있는 한 分野, 즉 企業의 商業的 기능에 대해 다루고 있다. (經濟와 貿易情報에 관한 조항 ; 관세에 대한 협조문제, 사적 재산과 지적 소유권의 保護問題 ; 중재 ; 이들 國家에 대한 企業人들의 출입, 체류, 활동문제 ; 사업을 위한 접촉방법 ; 사무소의 設立, 서비스 조항 그리고 참모(사원) 모집 ; 미디어와 公的인 계약의 申請方法)

經濟協力에 관한 이 장에서는 inter alia, 즉 相對國들의 投資를 장려하고, 그들이 市場經濟體制가 갖는 機能과 친숙하도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통계표와 標準規格 : 工業 ; 農業과 원료 ; 은행업, 보험 및 서비스 ; 환경 ; 에너지 및 수송 ; 교육과 학술연구 등과 같은 分野에 있어서 공동체와 그 상대국들 간에 協力을 증진한다.)

<聯合協定을 향하여>

이것은 共同體 協定의 소위 「첫세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1990年 4月28日에 열린 특별한 모임인 유럽회의(European Council)에서는, 基本的으로 정치적·경제적 조건들이 이루어진다면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s) 속에서 후세대에 관한 討論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協定은 점차적으로 자유무역을 지향할 것이며, 政治的 대화 및 그 외의 다른 分野에서의 協力을 위한 長期的인 基本骨格을 제공할 것이다.

協定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즉(궁극적 目標로서, 그리고 처음 段階에서는 반드시 상호 이해의 基盤 위에 있지는 않더라도) 자유무역부문; 經濟·貿易 協力의 새로운 형태들; 몇 년마다 契約上의 기본골격에 입각하여 보조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재정기구; 政治·文化面의 協力 그리고 현재의 協定下에서의 연석회의(Joint Committees)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는 協力會議(Cooperation Council)와 같은 제도의 정비 등

<PHARE 프로그램>

반면, 위원회(Commission)는 폴란드와 헝가리-그리고 現在 또 漸次的으로는 다른 동유럽 國家들에게도 마찬가지로-에 대한 G24의 支援과 궤를 같이 하는 임무를 繼續的으로 遂行한다. PHARE措置는 폴란드·헝가리 당국과 合意한 우선권(priorities)을 기초로 하여, 협의된 措置를

通해 몇몇 分野에도 同一하게 적용되어 왔다.;

① 交易과 市場接近 ; 나는 위에서 이미 공동체의 市場開放措置들 - 즉 特定部門의 量的制限을 점진적으로 제거하고, 최혜국 대우와 GSP특혜를 부여하는 - 이 폴란드와 헝가리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취해졌음을 설명했다. 또한 나는 貿易政策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計劃들(projects)을 설명하고자 한다.; (장비를 포함하여) 통관체계의 현대화; 관세체계와 명명법의 개혁 ; (檢査裝備條項을 包含하여) 표준규격에 대한 협력 등

② 財政과 投資(finance and investment) ; 통화안정화와 중기적 조정을 위해 필요한 대부(폴란드와 헝가리에 각각 10억$씩)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공동체는 下部構造, 수송,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유럽투자은행으로부터는 3년기치 10억$ ECU상한, 産業政策을 위해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는 2억ECU에 달하는 대부를 받을 것이다. 물론 런던에 위치한 유럽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에도 역시 참가하고 있다. EBRD는 IMF 및 세계은행과 협의하여 중·동부 유럽國家들에서의 시장지향적 경제로의 履行을 지원하고, 필요한 구조적 조정을 가속화하게 함으로써 生産的 투자증진을 모색할 것이다.
(ECU는 유럽공동체의 결제 단위임)

③ 보조금과 신용대부 등의 혼합된 計劃財政은, 1990年 3억ECU EC예산으로 편성된 PHARE 조치를 통하여,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제구조 조정을 目的으로 집행되고 있다. 이것은 1992년까지 총10억$로 늘

어날 것이며, 다른 國家들로 확장될 것이다. 우리는 1991年에 8억 5천만 ECU와 1992年에 10억ECU를 요청했다. 이러한 표제 아래 우선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農業供給과 재조직 ; 이미 言及한 긴급 支援을 제외하고, 農作物 보호와 살충제 (이미 割當된 5천만 ECU) 와 같은 생산 投入物의 供給, (2천만 ECU프로그램이 遂行되고 있는) 가축사료 및 농업기계화와 關聯된 長期的 지원프로그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農作物 보호프로그램의 결과만 놓고 볼 때, 금년 폴란드에서 저장될 농작물이 3억 ECU를 초과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② 環境 ; 이것은 환경조정능력을 발전시키고, 오염물질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硏究에 資金을 供給하며, 공기 및 물의 質的 向上과 더불어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開發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PHARE프로그램에서, 環境計劃에 대한 財政的인 總 實行費는 폴란드에 2천2백만 ECU, 헝가리에 2천5백만 ECU, 그리고 追加的으로 부다페스트 환경센터에 2백만 ECU 정도이다.

③ 職業教育과 관리경영 교육 : TEMPUS(the Trans-European Mobility Scheme for University Students)와 유럽 교육재단 (The European Training Foundation)의 설립에 관한 決定은 1990年5月7日 회의(the Council)에서 採擇되었다. 그리고 1992年까지의 기간동안 3억 ECU 정도의 資金募集이 기대된다. TEMPUS移動 보조금은 학생교류를 촉진시킬 것이고, 반면에 재단은 管理經營 教育을 포함하여, 최초의 그리고 持續的인

職業敎育 및 再敎育을 擔當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동체 企業에 있는 동유럽 經營者들이 敎育에 參與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UN-ICE의 교육계획과 같은 의안이 제출되어 있다. 또한 공동체의 ACE(Action for Cooperation in Economics)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大學이나 專門機關의 經濟學者들간에 경제전문지식의 교류증진을 모색하는 것이다.

「재구조 조정」이라는 표제하에서 진행되는 特定部門에 대한 공동체 계획들 중에는 때때로 世界銀行과 協力하여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해 技術支援 및 資金支援을 한다.

① 폴란드와 헝가리의 사립기관
② 헝가리의 公正競爭所(A Fair Competition Agency)
③ 헝가리의 企業 登錄
④ 銀行體系의 現代化(은행업법, 주식교환, 은행업자의 교육)
⑤ 또는 디자인, 品質, 마케팅 등과 같은 問題에 관해 技術支援, 신용라인 및 센터를 포함하여, 중·소기업들(SMES)에 대한 活動支援, 또 SMES가 존재하는 경우, 國家別 혹은 地域別 SMES의 연합으로 協力이 이루어지게 한다.

最近 사건을 보면,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루마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PHARE 支援 擴大計劃이 EC 수상회의 및 나머지 G 24에 제출되었는데, 최초의 반응은 肯定的인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計劃은(활발한 정치적·경제적·개혁운동과 관련된) 제약성과 (서로 다른 폐기능력과 관련된) 차별성이라는 조건에 제약을 받으면서, 7月4日 G 24

수상회의 以後에 處理될 것 같다.

<유럽지붕下의 獨逸統一과 以後 展望>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속한 變化 過程 속에서, 유럽공동체는 政治的 次元에서의 급속한 진전(접근)과 유럽대륙의 經濟的 동력이라는 地位面에서 스스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공동체는 EC世界와 近接해 있다는 條件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주변 동유럽 國家들에게 몇가지 事件을 통해 信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동유럽 사태가 공동체 자체 및 유럽의 미래 모습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첫번째 중요한 問題는 동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0年代의 위원회 및 共同體에 提起된 주된 도전 중의 하나이다. 1月17日에 열린 유럽회의 전에 DELORS議長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독일 統一은 독일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첫번째 과제이다." 하나의 統一獨逸에 대해 주권을 制限하는 것과 같은 問題는 없을 듯 하다.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하자면, 兩 獨逸國民들(의 意志)은 동독이 연방공화국으로 급속히 統合되고 있는 狀況에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共同體로의 統合을 의미하며, 獨逸의 두 부분과 東獨經濟의 構造的 취약성 간에 發生하는 차이점들로 인하여, 동독이 共同體로의 外形的 統合을 이룬 狀況에서도 중간조정기간을 必要로 할 것이다. 이것은 양 독일 國家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에게도 하나의 도전인 것이다. 實際로 共同體 活動 分野에서 독일의 統一에 의해 어떤 式으로든 영향받지 않는 것은 없다. 집중적인 統合過程은 東獨經濟가 이행기간 동안 피해당하지 않는 方向으로, 또 그 기간 말에 공동체의 규칙(rule)이 EC의 다른 地域에 適

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독영토에 공동체 규칙이 完全히 適用될 수 있는 方向으로 進行되고 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고, 서둘러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최종결과는 공동체 統合에 하나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獨逸統一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위원회 報告書를 보면, 1990年 4月 28日, 더블린에서 열린 유럽특별회의는 "공동체는 獨逸의 統一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리고 "유럽체제하에서 進行되고 있다."고 선언했다(Pressdency Conclusions).

法的 統一이 이루어지기전 기간동안 동독은 유럽투자은행, Euratom(유럽원자력 공동체), ECSC 등으로부터 貸付便宜 혜택뿐만 아니라 새로이 擴張된 PHARE프로그램의 一定 支援 등 충분한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는 當面한 어려운 狀況에 도움을 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공동체는 하나의 效果的인 政策協力(즉, 法令이나 共同體 標準規格 등)을 보장하기 위해 兩獨逸 當局이 취한 통합조치들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獨逸 統一은 도전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問題는, 만약 동유럽이 따라 잡는 것을 許容한다면, 1992年으로 向한 발걸음(여세)가 주춤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협상과정과 현재 동쪽으로 向할 지원들로 EC의 시간, 에너지, 자원 등이 얼마간 다른 方向에 쓰여질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일시장(Single Market), EMU 그리고 정치연합으로부터 EC의 주요관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 질 것인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이러한 政策들이 데탕트의 대안으로서 생각된 적은 전혀 없었다.; 그것들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공동체가 미치는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추구될

것이다. 「유럽경제구역」(European Economic Space) 規程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基本骨格인 EC-EFTA 協力의 결과로부터 폭넓은 유럽國家들간의 협력(제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동유럽 國家들은 어느 정도 資格과 能力이 생길 때가 되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재를 創出한 以後라 하더라도 現在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의 공동체 형태가 그 골간체계가 될 것이다. EC는 두가지 목표, 즉 안으로는 긴밀한 통일체 형성, 밖으로는 좀더 긴밀한 관계로 진군하는 데 필요한 資源을 不足하지 않게 갖고 있다.

EC-CMEA(COMECON)관계 : 코메콘 내부 交易의 위축 ;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改革 프로그램을 支援할 서부 國家들의 財政的인 안전망은 어떠한가?

<結 論>

최초의 EC 6個國은 초기에 이미 자체적으로 내적 發展을 이루고 있었다. ; 그후에 프랑스가 以前의 프랑스 植民地들과 親佛 第3世界 國家들을 주로 끌여들였다. 英國의 가입과 더불어 공동체는 美國과 캐나다, 연방국들과 영어를 쓰는 발전도상국들과의 관련 속에서 體系化되기 始作했다. 이제 우리는 EC가 (중부 유럽에서 傳統的으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재통일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게될 東方政策으로 발전될 時點에 이르렀는 지도 모른다. 무게의 中心이 아마도 동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리고 독일은 더 큰 영향력을 行使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EC國家들 즉 北部와 지중해, 대서양과 중부대륙 參與國들 사이에는 건전한 均衡關係가 維持될 것으로 본다. 결국, 歷史的인 안목을 가지고 전망해 볼

때, 우리 대륙이 인위적으로 分割된 것을 克服하고자 하는 것은 當然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지금 소위 東方政策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 유럽統合政策인 셈이다.

韓國과 유럽共同体의 將來

민 충 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머리말

지난 20여년간 한국의 經濟는 輸出指向的인 다른 新興工業國(NIEs)에 비해서도 急速하게 成長하여 이제는 世界 10위의 貿易國으로 부상하였다. 더욱이 韓國의 시장은 계속적으로 成長할 것이며 그 貿易相對國에게 계속해서 實質的인 기회를 提供할 것으로 一般的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韓國은 세계 최대의 貿易地인 EC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EC와 韓國이 모두 經濟規模와 시장잠재력이 매력적임에도 불구하고 양 무역파트너간의 무역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비록 EC가 韓國의 세번째 規模의 무역파트너이지만, 韓國과의 무역량은 美國과 日本에 비하면 매우 적다. 例를 들어 1988년 EC는 韓國 總輸出의 11.8%를 차지한데 비해 美國과 日本은 各各 33.0%와 21.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韓國은 EC의 스물 네번째 수입파트너로 기록되고 있다. 대만, 홍콩과 같은 아시아 新興工業國과 비교해 볼 때, EC市場에서 차지하는 韓國의 점유율은 최하위이다. 1988年 EC의 總輸入에서 차지하는 占有率은 韓國이 0.7%였음에 비해 대만과 홍콩은 各各 0.8%와 0.9%로 나타났다.

이 硏究의 目的은 韓國과 EC간에 존재하는 貿易問題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이 硏究에서는 1992년의 EC통합계획이 韓國의 對EC수출에 미

칠 多樣한 效果를 추정하고, 양 무역파트너의 經濟關係를 增進시키는 方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分析體系는 EC와 다른 아시아 新興工業國이 당면하고 있는 유사한 問題에도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硏究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에서는 지난 10년간 韓國과 EC간의 貿易發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두번째 부분에서는 EC의 對韓 무역장벽과 양 무역파트너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마찰을 分析할 것이다. 세번째 부분에서는 EC의 요구에 대한 韓國의 對應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네번째 部分에서는 1992년의 EC統合이 韓國의 對EC輸出增大에 미칠 영향에 대해 分析하기로 한다. 끝으로 마지막 부분에서는 韓國과 EC의 貿易關係 增進을 위한 몇가지 提案을 하기로 하겠다.

2. 韓國·EC間 貿易 槪觀

韓國과 EC간 貿易은 1970년대 중반이후 成長하기 시작하였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의 십수년간 EC와 韓國과의 貿易量은 7배 增加하였다. 좀더 정확히 보면 이 기간 동안에 EC의 對韓 수입이 EC 전체 수입량의 0.2%에서 0.5%로 증가하였다. 1984년과 1985년 등 몇 해를 제외하고 1976년 이후부터 EC의 對韓 무역적자는 꾸준히 增加하여 1976년의 4億 4千 9百萬 유럽통화(ECU)에서 1988년에는 28億 4千 2百萬 유럽통화가 되었다.[1]

1) Eurostat.

經濟企劃院에 따르면 1989년의 韓國의 對EC 輸出이 前年對比 약 9.1% 減少한 반면 對EC 輸入은 약 7.5%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必要가 있다. 따라서 韓國의 무역흑자도 1988年의 21억불에서 9억불로 급격히 減少하였다. 이러한 減少는 주로 무역노조에서 주도한 강력한 파업으로 인한 임금인상과 1988년이후 外國通貨에 비한 원貨의 평가절상에 起因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製造業部門의 명목임금은 1988년과 1989년에 各各 19.6%와 25.0%씩 引上되었다. 반면 韓國의 製造業部門의 노동생산성은 1989년의 경우 불과 6.7% 向上되어,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年平均 上昇率 14.0%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달러에 대한 원貨의 價値는 1988년과 1989년에 各各 11.0%와 8.2%씩 절상되었다.

1960년대 초반 이후 韓國의 수출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2] 그러나 現在까지 韓國의 對EC 수출품은 주로 의류, 신발, 가전제품, 완구류, 선박, 철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1988년에는 의류(22.7%), 가전제품(24.7%), 신발(7.0%)이 韓國의 對EC 수출총액의 約 54.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에 韓國은 EC로부터 주로 화학제품(28.9%), 일반기계류(21.6%), 전기·전자제품(10.5%)을 輸入하였는데, 이 세 부문은 1988년 總輸入의 약 61.0%를 차지하고 있다.[3]

---

2) 경공업은 1972年의 75%에 비해 1985년에는 輸出額의 50%에 해당되었다. 또한 중화학공업은 1972년의 20%에 비해 지금은 輸出額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European Information External Relation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86, 84/86, p.6.

3) 경제기획원의 자료에 의거함.

韓國의 EC내 主要 貿易파트너는 서독(26%), 영국(22%), 프랑스(12%)가 韓國의 對EC 總輸出의 60%를 차지하였고, 수입의 경우는 서독(32%), 이탈리아(17%), 英國(14%)이 63%를 차지하였다.

EC의 對韓 직접투자도 美國과 日本에 비해 적다. 1962년부터 1988년에 이르는 동안 韓國의 外國人 직접투자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였고, 美國과 日本은 각각 27.0%와 51.7%를 차지하였다.[4] 더욱이 韓國의 對EC 직접투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의 경우 EC에 대한 直接投資는 投資額을 基準으로 3.7%, 투자건수를 기준으로 8.6%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韓國의 對EC投資는 製造業이 아닌 주로 貿易業에 치우쳐 있다.

3. 韓國에 대한 EC의 保護貿易主義와 要求

적은 物量에도 不拘하고 韓國의 수출에 대해 EC는 많은 制約을 加해왔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먼저 韓國으로부터의 輸入에 대한 EC의 對外貿易政策과 韓國·EC간 무역마찰의 原因에 대해 分析하기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韓國에 대한 EC의 수입규제가 다른 新興工業國과 日本보다도 강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하겠다.

(1) 韓國의 輸出에 대한 EC의 보호무역 수단

EC는 GATT의 多角的 協定과 다양한 쌍무적 협정을 바탕으로 하여

4) 이에 덧붙여 1966年부터 1988年까지 韓國이 도입한 技術에서 投資件數를 基準으로 하여 볼 때 EC의 비중은 평균 16.5%로서, 美國과 日本의 25.0%와 52.6%보다 훨씬 적다. 資料 : 經濟企劃院.

非會員國에 대해 여러 가지 무역장벽을 適用해 왔다.[5] 名目的으로는 保護措置와 반덤핑 조치는 GATT조항 第14條(GATT 예외 조항)와 제6조(반덤핑 원칙)을 준용하여 適用한 것이다.[6] 그러나 EC는 非會員國家로부터의 수입을 規制하기 위해 자체적인 몇가지 保護手段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제3국과의 自律規制協定 및 市場의 불완전성으로부터 제기되는 現象에 對處하기 위해 고안된 로마조약 제115조의 適用 등이 포함된다.

EC의 保護措置의 適用은 여러 가지 조건, 특히 비차별적 적용과 보상문제에 따라 고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7]

따라서 1982년부터 1989년 동안 EC에 의한 보호조치는 단지 8건에 대해 取해졌는데, 이중 3건은 韓國의 수출주종품인 도자기(1982년 프랑스와 英國이 適用), 수정시계(1986년 프랑스가 適用), 신발(1987년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適用)이었다. 이러한 措置의 주요 대상국은 韓國과 대만이다.

특히 반덤핑의 움직임은 韓國의 對EC 輸出에 당면한 또하나의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EC의 對韓 반덤핑 제소가 1987년 이후 급격히 增加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89기간 중 韓國

---

5) 1968年 7月 이래 부과된 일반통관관세(Common Custom Tariff)는 여전히 EC의 對外貿易政策의 重要한 手段이다. 그러나 일반통관관세의 稅率은 GATT하의 國際協定에 의해 規定되어 있기 때문에 EC가 이를 일방적으로 變更하게 되면 이에 影響을 받는 主要 國家의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통관관세의 保護機能을 支援하는 意味에서 EC의 비관세장벽과 반덤핑 規制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 보다 자세한 것은 Bourgeois et al., 1983, p.19를 참조할 것.

7) 따라서 EC는 특히 아시아 신흥공업국과 일본에 대해 선택적으로 適用할 수 있는 기존의 보호규정을 개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선택적 適用이 주로 자국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 國家들은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資料 : Hine, 1985, p.97.

의 輸出品中 25品目이 EC에 의해 반덤핑 제소되었다.[8]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 1987년부터 1989년의 3년간 13品目의 韓國製品(例를 들면 VCR, 폴리에스테르絲, 비디오테이프, CD재생기, 선박류 등)[9]이 EC의 반덤핑 움직임의 표적이 되어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1987년 7월부터 EC가 (현지 부품률 40% 이하의) 海外 現地生産에 대해 반덤핑 절차를 履行한 것에 의하면 포르투갈과 서독에서 VTR과 전자렌지를 생산하는 삼성과 금성과 같은 韓國 企業의 EC내 輸出이 規制될 것으로 보인다.[10]

이 재고의 여지가 있는, GATT의 多角的 協定과 一致하는 유일한 수입물량 규제 방안을 構成하고 있는 保護措置의 適用을 피하기 위해 EC는 특히 의류와 철강의 경우,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輸出自律規制에 의지하고 있다. 1974년 이래 韓國과 다른 25개 開途國은 의류와 織物의 對EC 輸出物量을 다자간섬유협정(Multi Fibre Arrangement)을 통해 規制받고 있다.[11] 점차 저하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외상

---

8) EC의 반덤핑 규제는 1968年 7月부터 發效되었다. 1988年의 경우 日本이 EC의 56건 반덤핑 제소에 해당하여 가장 많은 부분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美國(47), 소련(43), 체코슬로바키아(42), 루마니아(38), 폴란드(35)가 뒤따르고 있다. 신흥공업국의 경우는 한국이 24건, 브라질이 22건, 대만이 15건이었다.
資料 : Van Bael, I. and Bellis, J-F., 1990, p.20.

9) 韓國의 經驗에 의하면 EC의 반덤핑 제소는 비회원국으로부터의 輸入에 심각한 影響을 미쳐 왔다. 예를 들면 반덤핑 手段으로 인해 韓國의 對EC 輸出은 반덤핑 관세 19.8%의 인상에 의해 VCR의 경우 1988년의 2億2千6百萬 달러에서 1989年에는 7千7百萬 달러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資料 : 經濟企劃院.

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167/9, 22, Jun., 1987을 참조할것

11) EC는 다자간섬유협정의 製品을 3個의 범주로 나누어 왔다. 그리고 특히 다자간섬유협정의 주요 4 공급자(즉, 홍콩, 韓國, 마카오, 대만)로부터의 직물수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EC는 이러한 製品을 8個 特別品目(소위 제Ⅰ그룹)으로 더욱 制限하여 其他의 제Ⅱ그룹 및 제Ⅲ그룹과 區別하고 있다.
資料 : Official Journal of the EC, L 387, Vol.29, December, 1986.

을 높이기 위해 1978년 EC는 韓國 등 主要 供給者 11國과 협정을 체결하였다.[12] 이 協定에서는 쿼터를 규정하였으며 다비그논 계획(Davignon Plan)을 통해 최저가격을 명시하였다.[13]

위에서 說明한 委員會 次元의 협상에서 設定된 두 개의 輸出規制와는 별도로 韓國의 신발 수출은 1982년 이후 韓國과 EC신발산업간에 제기된 협상에서 輸出自律規制로 통제되어 왔다.[14] 또한 韓國의 버섯통조림도 EC의 일방적인 쿼터로 제한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쌍무적 협정을 통하여 개별 會員國들은 TV, 라디오, 도자기, 칼, 수정시계, 스테인레스 식기류 및 기타 5種의 공산품의 韓國 輸出에 대해 保護措置를 취하였다.[15]

전술한 외적 장벽 이외에도 EC 市場 內에는 多樣한 內的 輸入障壁이 存在하고 있다. 일련의 내적 장벽은 會員國間 內的 障壁의 相異性으로부터 제기된다. 로마조약 제115조 하에서 EC위원회는 會員國이 수입규제가 부과된 EC國家로부터 유래된 輸入品일 경우에는 다른 會員國으로부터 輸入을 除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2) 1980年 10月, EC는 강화된 다비그논 計劃(Mark II)으로부터 기존의 수출자율규제를 강화함으로써 輸入에 대해 더 깊이 개입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이 協定에서 日本과 其他 세 선진국을 제외시키는 대신에 브라질과 베네주엘라를 包含시켰다. 따라서 5個의 코메콘(COMECON) 국가를 包含한 8個國의 對EC 철강 輸出이 지금까지 規制되고 있다.
資料 : Commission of the EC Service.

13) 이 최저수입가격제도는 部分的으로는 1977年 11月 美國에 제동가격제도(trigger-price mechanism)이 도입된 후 美國으로 輸出되는 철강이 EC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14) 이러한 協定을 통해 韓國의 對EC신발수출은 매년 약 10%씩 자율규제되었다. 그러나 1987年 5月 이러한 협상이 막히게 되어 이탈리아는 같은 해 6月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적용하였다.
資料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ervice.

15) 우리나라 상공부의 정보에 의함.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第115條를 가장 빈번히 使用하고 있는 會員國은 全般的으로 外的 規制가 심한 國家이다. 1980～88년 동안 프랑스는 668건을 적용하였으며 이중 499건을 EC위원회가 승인한 것이며, 아일랜드는 460건 중 324건, 이탈리아는 302건 중 196건, 영국은 152건 중 95건, 서독은 9건 중 9건, 그리고 덴마크가 4건 중 4건의 승인을 받았다. 이와 유사하게 第115條 適用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製品은 外的 規制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 즉 韓國, 臺灣과 같은 아시아 新興工業國으로부터의 직물(전체 適用 건수의 약 70%) 수입이다.[16]

다른 會員國으로부터 유래된 수입에 影響을 미치는 기타 장벽에는 국경의 장벽, 상이한 기술 표준, 서로 다른 수출자율규제 제도, 정부구매의 獨占性, 상이한 言語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장벽들은 종종 EC 외로부터의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差別的인 EC의 對外貿易政策과 韓國과의 마찰의 원인

1970년대 以後 始作된 EC의 수입장벽이 美國이나 日本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國家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은 사실이다.[16-1] 예를 들면 1985년 공산품에 대한 EC의 일반 대외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制限된 전체 수입량의 比率이 各各 6.4%와 22.0%였음에 비하여 美國은 6.3%와 43.0%, 日本은 6.0%와 12.0%였다.[17] 그러나 日本의 경우, 自國內의 마케팅과 유통시스템의 특이성이 나타내는 效果가 뚜렷하기

16) EC위원회의 정보에 의함.

16-1) Schultz, Schumacher, 1984, pp. 207～8 및 1981, p. 29.

17) Commission of the EC, 1987, Document, p.12 및 Nognes et al., 1986을 參照할 것.

때문에 日本의 保護主義의 程度는 이러한 一般的인 國際貿易障壁의 관행을 分析하는 것으로 完全히 나타낼 수는 없다.(Balassa,1987)

비록 대외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EC는 비회원국가와 매우 차별적인 貿易關係를 展開해 왔다. EC는 特別 貿易협정을 통해 호혜的 또는 비호혜적 基盤에서 貿易 파트너(즉 6EFTA, 66ACP, 12지중해 국가)에게 多樣한 우호적인 態度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EC는 비회원인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비관세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 특히 코메콘 國家들의 對EC輸出은 매우 규제되고 있으며 1,733개 製品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이 規制되고 있다. EC의 貿易 파트너와의 차별적인 무역관계를 피라미드로 표현하면 맨 위가 EFTA, 다음이 ACP와 지중해 國家들, 그리고 新興工業國을 포함한 開發途上國 日本을 포함한 先進國, 그리고 끝으로 코메콘 國家가 맨 밑에 자리하고 있다. EC에 대한 여러 專門家에 의하면 이러한 EC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新興工業國을 포함한 開發途上國이 先進國의 上位에 나타나는 것은 단지 이들 國家가 일반특혜관세(GSP) 制度 下에서 관세의 면세가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과 臺灣은 EC의 貿易關係 피라미드의 開途國 및 新興工業國 집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들 國家가 일반특혜관세 對象이 아니고 이들의 對EC 직물수출이 EC와의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해 크게 制限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韓國의 철강수출은 EC에 의해 제한되고 있으며, 이것은 臺灣은 물론 日本을 포함한 先進國에게 조차도 適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EC의 貿易關係 피라미드에서 韓國과 臺灣의 位置는 비회원 선진국의 밑에, 그러나 코메콘 國家의 위에 표시되어야 마땅하다.

왜 EC는 韓國의 輸出에 대해 이렇듯 심하게 차별하고 있는가? 이 질

문은 물론 EC와의 歷史的·政治的 問題, EC에 대한 韓國 輸出의 급격한 增加 및 1970년대 中盤 以後 계속되어온 EC의 對韓 무역적자에 의해 說明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說明은 왜 韓國의 輸出에 대한 規制가 무역규모나 貿易黑字가 韓國보다 큰 日本과 臺灣, 홍콩 등의 기타 아시아 新興工業國에 대한 規制보다 큰 理由를 설명하기엔 不充分하다. EC의 韓國 製品에 대한 강력한 規制를 설명하려면 韓國의 産業과 貿易政策에 관한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韓國의 輸出構造는 의류, 신발, 가전제품, 철강, 조선 등 EC 市場內에서 競爭이 강한 産業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품들은 회원국간에도 심각한 競爭樣相을 보여 왔다. 例를 들면 韓國의 의류와 신발은 그리이스와 포르투갈과 같은 저개발 會員國과 競爭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은 서독과 같은 先進 會員國과의 競爭에 强하게 직면해 있다. 이러한 狀況은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先進國에서 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의류, 철강, 신발과 같은 韓國의 많은 輸出産業은 EC내의 供給과 需要의 長期的인 불균형,[18] 生産量 감소, 그리고 1970년대 이후의 상당한 고용의 감소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결과적으로 韓國은 EC內 産業의 順位 調整 過程에서 외부 방해자로 認識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위에서 說明한 것처럼 少數品目으로 소수 시장(즉 서독, 프랑스, 英國)에 집중하는 韓國의 輸出戰略은 몇몇 産業과 EC내 몇몇 地域에서는 큰 影響을 미쳐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의 輸出戰略은 지난 10

18) 예를 들면 EC의 철강 산업의 가동율은 1983年에 불과 57%(1974年에는 87%)로 주로 철강수요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1974年과 1983年 사이에 고용도 약 40%감소하였다.
資料 : Commission of the EC, European File, 2/85, 1985, p.5.

여년간 日本이 특정 EC産業에 악영향을 끼쳐오며 輸出하던 바로 그 공산품을 輸出하기 때문에 日本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유럽인의 관점에서 보면 韓國은 EC 市場에 그토록 심각한 영향을 미친 日本이란 나라의 축소판인 同時에 동맹국으로 비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韓國은 EC보다는 美國에 더욱 近接하려는 차별적인 貿易政策을 계속해서 추구해 왔다. 이것은 美國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韓國에게 더 중요한 國家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이 美國에 우호적으로 市場을 開放함으로써 韓國과 EC간의 심각한 무역마찰을 불러오고 했다. 예를 들면 EC는 韓國이 1987년 7월에 미국에 대해 知的所有權을 許可해 주는 차별적인 협정에 보복하여 1988年 1月에 일반특혜관세(GSP) 下에서 관세혜택을 정지시켰다.[19] 게다가 EC는 韓國이 1987년 3월 美國에 대해서만 保險市場을 開放하는 것에 대해 强力히 비난하고 있다.

4. EC의 雙務的 要求와 韓國의 對應

貿易不均衡과 漸增하는 保護貿易主義에 직면한 韓國은 최근에 EC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EC와의 쌍무적 무역의 잠재적인 成長을 增進시키고자 韓國은 점차 EC의 要求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한 EC에 보다 쉽게 接近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양 무역 파트너간의 무역마찰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19) 大韓貿易振興公社(KOTRA)가 推定한 바에 의하면 韓國의 EC의 GSP 정지에 따른 관세 혜택에서 6천 7백만달러의 損失을 얻었다. 그러나 EC 시장에서의 價格競爭力 상실로 인해 韓國의 輸出이 받은 타격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절에서는 먼저 韓國에 대한 EC의 쌍무적 要求를 分析하고, 다음에 韓國의 대응과 이에 따른 몇가지 問題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1) EC의 雙務的 要求

EC는 韓國이 經濟的으로 開發段階라는 점, 産業構造의 비성숙성, 그리고 기타의 文化的·社會的 要因으로 인해 급속히 市場을 開放하는 데 몇가지 問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C는 短期的으로 補完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치를 마련하였다.[20]

1) 농산물 市場의 開放과 몇몇 EC製品에 대한 관세와 세금 인하

農産物 市場의 開放을 둘러싼 社會的·政治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韓國은 여전히 9種의 農産物(쇠고기, 버터, 치즈, 유제품 등)의 EC로부터의 수입을 規制하고 있다. 이것들은 1984年 7月 韓-EC 통상 대표위원회(Representative Committee)에서 EC가 韓國에 開放을 要請한 21개 品目에 包含된 것이다. 그 以後로 EC는 이들 농산물을 가능한 한 빨리 自由化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EC는 韓國에게 가공 농산물 몇가지에 대한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류에 대한 수입 관세와 주세 모두의 인하를 强力히 要請하고 있다. 韓國은 現在 맥주와 위스키에 대해 약 50%, 포도주와 브랜디에 대해 약 3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맥주, 위스키, 브랜디에

20) 經濟企劃院의 情報에 의함.

대해서 150%~200%의 消費稅를 賦課하고 있는데, 수입포도주와 국산포도주에 대한 25%~100%의 消費稅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게다가 韓國은 수입자동차에 대해 다른 國內 稅金과 더불어 25%의 관세와 25%의 특별소비세를 賦課하여 국산자동차에 비해 세율이 높다. 따라서 韓國에 수입된 자동차의 평균 가격은 CIF 價格을 基準으로 비교할 때 國産自動車에 비해 약 70%정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EC는 한국에게 자동차에 대한 關稅와 稅金을 인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2) 關稅構造와 輸入制度의 簡素化

輸入商品으로부터 국내 제조업자를 保護하기 위하여 韓國은 일시적 수입규제, 긴급 관세, 조정 관세, 쿼터, 반덤핑 관세, 상쇄 관세 등 많은 措置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EC는 일시적 수입규제나 긴급 관세와 같은 國際的으로 "희귀한" 관세와 輸入制度를 통한 規制를 철폐할 것을 강조해 왔다. 덧붙여 EC는 특히 화학 및 기계 부문에 廣範圍하게 適用되는 검사와 형식승인부여의 過程을 簡素化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金融서비스의 自由化와 金融서비스 규제의 철폐

韓國은 外國人銀行의 支社 設立을 통제해 왔다. 더구나 韓國에 所在하고 있는 外國人銀行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몇가지 규제를 가해 왔다. 例를 들면 韓國은 外國人銀行의 신규 설립 자본금을 12億 달러로 제한하였으며, 銀行서비스에 여러가지 제약을 두었다. 동시에 外國企業이 本國으로부터 資金을 유입할 경우 1백만 달러까지는 일반 상업은행의 그 以上의 金額에 대해서는 韓國銀行의 許可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EC는 外國人銀行 設立의 自由化 뿐만 아니라 韓國內 外國人 事業體에 대한

外換規制를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4) EC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美國에 대해서만 知的所有權 保護를 同意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EC는 1988년부터 韓國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철회하였다. 그 以後로 EC는 韓國이 知的所有權, 특히 "特許權과 著作權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호"해 주기 위한 法的 節次를 완료해 줄 것을 要求해 왔다. EC는 또한 韓國이 1988年 5月 美國에 대해 동의한 같은 조건으로 保險會社의 設立을 許可해 줄 것을 要求하였다. 덧붙여 EC는 韓國이 명백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로 美國製品을 구매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끝으로 EC는 韓國이 輸出産業에 대해 암암리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줄여줄 것을 要請하고 있다. 한편 EC는 韓國政府에게 輸出指向的인 일부 공산품의 生産을 제한시키도록 壓力을 넣고 있다. 특히 EC는 韓國에게 日本에 이어 世界 第2位에 올라 있는 造船業에 대해서 生産을 감축할 것과 최저 수출가격을 통제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2) 韓國의 對應과 市場開放의 딜레마

1960年代 초반부터 1980年代 中盤에 이르기까지 韓國 經濟政策의 目的은 수출신장을 통한 빠른 經濟成長이었다. 이 기간에 韓國은 수입이 경상수지 赤字의 규모를 제한하고 國內의 유치산업을 활성화하는데 핵심적인 要因이라 판단하여 이를 규제하였다. 이러한 政策의 일환으로 韓國은 輸出主導의 빠른 經濟成長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韓國 經

濟政策은 輸出伸張을 통한 빠른 經濟成長 보다는 생활수준의 向上과 所得分配에 주로 目的을 두어 왔다. 특히 韓國은 부분적으로는 美國과 EC의 강압으로 인해 수입을 擴大하기 위해 수입제도 개편에 착수하였다.

예를 들면 韓國의 對外貿易法에 따라 수입허가제하에서 수입이 금지되던 製品의 目錄이 축소되어, 1983년의 19.6%에 비해 1989년에는 전상품의 불과 5.3%만이 이 目錄에 包含되어 있다. 현재 수입이 규제되는 거의 대부분은 農産物 爲主의 1次産業 제품이다. 공산품 중에는 불과 0.6%만이 이 目錄에 包含되며, 보석과 같은 잡화류와 견직물 등이 해당된다. 同時에 韓國은 關稅率을 크게 引下하여 1983년의 平均 24%에서 1989년초에는 平均 13%(공산품은 11%)로 되었다. 1988년 韓國의 財務部에서는 5년간 관세율을 계속 引下하여 1993년까지는 선진공업국의 水準인 8%(공산품은 6%)로 끌어내리는 새로운 관세개혁안을 인준하였다. 韓國은 또한 品質檢査, 標準承認 등의 절차요건을 단순화하도록 수입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러한 공산품 시장의 開放과 아울러 韓國은 銀行業, 교통·통신 등의 서비스 업종을 自由化하였다. 덧붙여 韓國은 長短期 輸出信用과 세제감면 등의 政府의 輸出補助金과 誘引策을 계속적으로 감축하여 왔다. 최근의 改革措置의 결과로 韓國의 自由化 水準은 開發途上國 水準을 넘어 선진공업국의 수준과 비슷해졌다.

반면에 韓國은 주요 무역파트너와 심각한 貿易不均衡을 나타내고 있다. 韓國은 日本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依存하여 1980년대 中盤까지 全體輸入의 35%가 日本에 집중되어 있다. 이 기간 동안 韓國은 日本과는 貿易赤字幅을 늘리는 반면, 美國과 EC에 대해서는 꾸준히 黑字를 記錄하였다. 따라서 韓國은 이들 양대 서구의 무역파트너들로부터 수출자율규제와 市場

開放의 壓力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內的으로는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對日貿易赤字를 줄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美國과 EC로 수입선을 多邊化하기 위하여 韓國은 특히 이들 양대 서구 무역파트너에 대해 여러가지 수입장벽을 과감히 철폐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韓國의 수입제도의 改革은 이들 두 파트너의 要求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주로 完成되었다. 이에 대한 좋은 보기로 韓國 政府는 1987년에 對日 수입이 많은 100개 企業을 選定하여 金融支援을 弱化시키거나 혹은 이들 企業이 日本으로부터 美國과 EC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實績이 좋지 않을 경우 중과세할 것을 밝혔다.[21]

특히 EC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 韓國 政府는 産業體에게 "유럽제 구매"를 부추겼던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6년 이후 매년 EC로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EC의 要求를 반영한 韓國의 조치는 美國의 要求를 반영한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單純히 美國이 EC보다 韓國의 政治와 經濟에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C가 韓國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韓國은 EC에게 美國에 비해서 차등을 두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좋은 보기로 EC가 韓國에게 1987년 7월 韓國과 美國이 同意한 지적소유권 보호와 같은 水準에서 EC의 지적소유권을 保護해 줄 것을 계속해서 要求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韓國이 이에 同意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理解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은 EC와의 지적소유권의 問題는 1987년말 EC가 일반특혜관세(GSP)대

21) 매일경제신문, 1987年 5月 12日字.

상에서 韓國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終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韓國 政府의 努力의 結果 韓國의 全體 輸入에서 차지하는 日本의 比重이 줄어든 반면 美國의 比重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이러한 市場 多邊化 政策은 成功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EC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려는 韓國의 政策은 뚜렷한 實績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例를 들면 1986년부터 1989년에 이르는 동안 韓國의 全體 수입에서 차지하는 EC의 比重은 10.2%에서 10.6%로 거의 變動이 없다. 이와 비교해서 동기간 동안 美國의 比重은 22.7%에서 25.1%로 늘어났으며 반면 日本의 比重은 34.4%에서 28.3%로 감소하였다.

EC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려는 韓國의 努力이 效果的이지 못한 데에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몇몇 전문가들은 1985년 이후 유럽통화에 대해 미국의 달러貨가 평가절하되었고, 日本의 엔화의 평가절상 폭이 현저했기 때문에 韓國 市場에서 EC 商品의 競爭力이 상대적으로 弱化되었음을 指摘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韓國 政府와 貿易關係者들이 유럽인들은 韓國 市場의 成長과 별 관계가 없다고 主張하는 것이다.[22] 그들은 EC 역내시장과 EFTA나 美國과 같은 발전된 외부 市場에서의 貿易, 그리고 특히 수직적으로 통합된 開途國 市場(예컨대 ACP와 지중해國家들)에서의 貿易에 관심을 가지려 하기 때문이다.[23] EC는 日本에 대

22) 예를 들어 대한무역진흥공사가 調査한 바에 의하면 1,367個 EC産業 中에서 約 80%가 韓國 市場에 대한 情報가 없으며, 大部分이 韓國 販賣를 위해 韓國에 대해 배우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資料 : 大韓貿易振興公社.

23) 따라서 經濟學者들은 유럽국가, 특히 過去에 廣大한 식민지 市場과 事業을 소유했었던 國家는 海外市場에서 競爭하는 것을 實際로 배우지 않았다. 過去에 大部分의 유럽 企業들은 비교적 높은 收益을 目標로 설정하여 이 目標가 그다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競爭自體를 포기하였다. 보다 자세한 것은 Shinohara, 1982, p.11를 參照할 것.

해서는 관심을 보여왔으나 韓國에 대해서는 최초까지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면 EC는 輸出促進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많은 企業人들이 18개월 과정으로 日本에 대해 배우고 있다. 그러나 EC는 韓國에 대해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24]

그러나 韓國의 수입시장 자유화가 주로 美國을 위해 이루어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美國의 對韓 수출은 유럽에 비해 빠르게 成長하였다. 그러나 비록 韓國의 市場開放의 利益이 주로 美國으로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1980년대 중반 이후 韓國 市場의 追加 開放의 壓力을 점점 增加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韓國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韓國의 貿易政策이 美國과의 무역마찰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반대로 이를 차별적인 政策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EC와 日本에 대해서는 무역마찰을 오히려 增加시키는 딜레마를 초래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 1992年의 EC統合計劃과 域外國에 미치는 影響 : 韓國의 견해

韓國은 EC의 增大되는 輸入制限으로 인해 유럽시장으로부터 고립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다른 모든 EC의 무역파트너와 같이 韓國은 1992년 末로 豫定된 하나의 市場으로의 통합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1992년의 EC통합계획의 內容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韓國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

24) 예를 들면 1986年 3月에 170名의 젊은 企業人들이 이러한 企劃하고 日本을 방문하여, 12個月間 語學 硏修를 마치고 6個月間 日本 企業에서 실무를 익혔다.
資料 : Commission of the EC, 1986, Com(86),60 Final, p.17.

(1) 1992년의 EC統合計劃에 대한 簡略한 고찰

1968년 7월에 관세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국내관세는 廢止되었지만 단일시장을 完成하지는 못했다. 여러종류의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他國間의 商品, 자본 및 勞動의 자유로운 移動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에는 多樣한 국경통제와 감시, 國家間의 기술규정과 표준의 차이, 정부구매의 제한, 자본시장의 통제 그리고 國家間 세제의 차이등이 포함된다. 1992년의 EC統合計劃에서는 EC가 이러한 장벽의 많은 부분을 除去시키고 하나의 統合된 市場을 이룰 것을 약속하고 있다.

1992년의 EC統合計劃은 비관세장벽을 除去하기 위해 必要한 300항목의 조치(뒤에 282개로 줄어듬)를 제시한 1985년 6월 14일의 EC백서에서 처음으로 公式化되었다.[25] 이것은 1987년 7월 1일에 비준된 單一유럽議定書(SEA)에 會員國의 정상들이 서명함으로써 1985년 12월에 정식으로 착수되었다.[26] 백서의 이행에 관한 5개의 진척보고서에서 EC위원회는 각료이사회가 意思決定方式을 만장일치제 대신 단일법령(Single Act)인 조약 第8條 a(Article 8a of the Treaty)에 따라 특정다수결방식을 택함으로써 EC統合計劃의 推進이 신속화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EC 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 5월말까지 총 282개에 달하는 제안들이 이미 理事會에 제출되었고 그중 149개가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게다가, 理事會는

---

25) EC위원회,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Com(87) 203, final, 11, May, 1987.

26) SEA는 5個의 부수적 政策을 包含하고 있다.: (1) 경제와 貨幣政策의 통합 : (2) 勤勞條件의 改善에 특히 관심을 기울일 것; (3) EC국간의 經濟的 社會的 유대를 강화하는 行動規範을 開發하고 推進할것; (4) EC의 科學的, 技術的 기반을 튼튼히 할 것; (5) 환경과 關聯한 行動指針, 추가로 SEA는 공동체제도내에서 새로운 힘의 분배를 제시하고 있다.

7個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며 9개는 一般的인 견해가 되었다. 그러므로 1985년의 백서에 包含된 제안중 거의 60%가 현재 理事會에 의해 採擇되었다.

많은 分析에서 역내시장완성으로 因한 잠재적 利益을 提示하고 있다. 그 첫번째가 EC委員會가 完成한 "비유럽의 비용(The Cost of Non-Europe)"이라는 제목의 Cecchini의 報告書이다. 그 報告書에 따르면 市場統合으로 인해 나타날 5年以後의 중기 거시통제적 效果로 GDP의 4.5~7%成長, 消費者價格의 4.5~6.1%下落과 1.8~5백만명의 새로운 일자리창출등을 豫想하고 있다.(Cecchini, 1988, p.101) EC委員會는 더욱 세부적으로, 관세장벽의 제거로 因해 中期까지 EC의 GDP가 0.36% 增加할 것이며, 공공구매의 開放으로 0.55%, 金融서어비스와 資本市場自由化로 1.46%, 그리고 規模의 경제창출과 競爭壓力 때문에 생기는 X-非效率의 감소와 같은 공급효과로부터 2.14%의 GDP가 增加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27] EC委員會는 비록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따른 동태적 效果를 추산하지는 못했지만 매년 1%의 추가적 成長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合理的일 것이다.

Geroski(1988), Neuberger(1989) 그리고 Culter et al(1989)와 같은 사람들은 市場統合效果를 EC委員會가 提示한 것보다 낮을 것이라고 豫想한다. 물론 EC委員會가 추산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예를들어, Neuberger(1988)같은 경우는 Cecchini의 연구는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모든 硏究는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고 일

27) 더 자세한 事項은 Cotinat, M., E. Donni and Italianer, 1988. 을 볼 것.

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평하였으며, 심지어는 "Cecchini의 研究는 經濟學者라는 직업에 불명예스러운 것이다"라고까지 말하였다. Culter et al(1989,p.61)은 특히 Cecchini의 報告書에 대해 더욱 세밀하게 비평하고 있다. 그들에 따르면 EC統合으로 인한 直接的 효익(비관세장벽의 제거로 인한 효익)은 미세하며 間接的 效益(競爭力 向上과 規模의 경제 창출과 같은 공급측면의 效益)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그들은 비관세장벽의 除去로 인한 利得이 Cecchini의 分析에서도 인정했듯이 작다면(즉 2.2～2.7%의 GDP增加), 비관세장벽은 이미 대부분의 EC市場으로의 進出에 큰 장애요인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특히 Culter et al.은 規模의 經濟로부터 發生하는 잠재적 效益이 클 것이라면 그 효익은 오래전에 資本化되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거의 重要하지 않은 비관세장벽의 제거는 큰 規模의 經濟를 창출하기 위한 必要條件이 아니다.

그러나 EC委員會의 예측을 너무 신중하게 고려하는 이러한 研究들은 역내시장의 完成으로부터 기대되는 動的인 效果의 一部를 說明하지 못한다.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競爭力 向上으로 인해 效率性이 增加함으로써 투자를 促進하고 資金흐름을 증대시킨다. 그에 따라 經濟成長도 增大된다. 사실, 1992년의 EC統合의 效果는 1980년 中盤以後 EC經濟의 회복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肯定的이었다. 예를들면, 1980～1986년사이의 GDP成長率이 2.0%이었는데 비해 1986-1989년간의 연GDP成長率은 3.2%이었다. 投資와 雇傭成果는 지속적으로 增加할 것이다.[28] 비록 進展이 부분적으로는 世界經

---

28) 예를들면, 자본형성증가율이 1981-86사이에는 연평균 1.1%이었으나, 1986-89동안에는 연평균 5.4%로 증가했다. 또한 失業率은 1986年 10.8%에서 계속 낮아져 1989年에는 9.0%가 되었다.
資料 : EC위원회 "European Economy," No. 42, Nov., 1989.

濟의 好況과 1980년초의 經濟政策의 轉換에 기인하지만 EC의 현 經濟狀況은 1992년의 EC統合計劃에 의해 形成된 밝은 展望에 더 큰 原因이 있다.[29]

(2) 1992년의 EC統合計劃이 韓國의 觀點에서 볼때 역외국에 미치는 영향

自國과 相對國 두나라간에 관세동맹을 체결한다고 하자. 自國의 消費者들이 相互貿易協定에 따라 관세가 폐지됨으로써 높은 原價의 자국상품을 購入하는 대신 相對國의 저원가 상품을 구입할 때 兩國간에 追加的 交易이 發生한다. Viner(1950)는 처음으로 交易의 增加에 대한 이러한 原因을 입증했다. 그러나 관세동맹하에서는 交易은 또한 貿易轉換으로 인해 增加하기도 한다. 즉, 단지 相對國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關稅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消費者들은 동맹국이외의 國家로부터 저원가 製品을 購入하지 않고 相對國의 고원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經濟統合의 效果에 대한 實證分析에서 貿易轉換은 一般的으로 관세동맹국이외의 國家로부터 수입하는 製品의 價値가 동맹체결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때 發生하는 것으로 나타난다.[30]

1992년의 EC統合計劃이 관세장벽에 關한 것이 아니라 비관세장벽의 제

---

29) 더 자세한 事項은 EC위원회의 "Safeguarding the Conditions for a Successful 1992," Com(89) 101, final, 1989, and Giersch, 1989. 를 參照.

30) 많은 經濟學者들의 硏究에 의하면, 유럽시장통합으로 인한 교역창출효과는 무역전환효과보다 20배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資料 : Mayes, 1989, pp. 97-121.

거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비관세장벽의 제거가 관세동맹의 체결과 槪念的으로 完全히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992年의 EC統合으로 인해 域外國의 EC에 대한 輸出에 부의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를들면 Cawley와 Davenport(1988,PP.31～38)는 비관세장벽의 直接的 費用에 관한 부분균형계산에서 직접비용계산의 1段階로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2～2.6% 감소할 것이며(貿易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 2段階로 5.7～7.7%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生産에 影響을 미치는 장애요인)

EC委員會는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감소는 直接的이고 정적인 計算에 의한 것이며 역외국에게도 또한 利得이 되는 市場統合에 따른 간접적이고 동적인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經濟成長의 맥락속에서 고려된다면 輸入減少는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Italiner,1990,pp.24～25). 1%의 추가적 經濟成長은 製造業分野에서 5.5%의 수입증가를 유발하며 따라서 中期以後 追加的 EC역외국에 대한 輸入需要는 貿易轉換效果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豫測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EC내 供給業者의 國際競爭力向上으로 인한 동적인 무역전환은 經濟統合에 의해서도 또한 增大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992년의 EC統合으로 因한 貿易轉換效果 때문에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줄어들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輸入減少는 先進國에 있어서보다 開發途上國에게 훨씬 더 클 것이다. 그 理由는 선진국은 成功的으로 競爭할 수 있는 與件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Italianer,Ibid).

그러나 유럽통합으로 因한 轉換效果때문에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할 것이라는 可能性은 비회원국에게 단지 작은 問題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比較優位가 改善됨으로써 1992년부터 EC統合은 EC에 대한 輸出을 擴大할 機會를 提供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회원국에게 더 심각한 問題는 1992년의 EC統合 이후 역외국에 대한 새로운 비관세장벽을 形成하는 것이다.[31] 특히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EC로부터 상당한 차별대우를 받아온 新興工業國(NIEs)은 새로운 비관세장벽이 그들에게 집중되지 않을까 걱정한다. 다음의 잠재적 요소는 이것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1992년의 EC統合計劃에 따른 새로운 통일된 標準은 新興工業國들뿐만아니라 開發途上國이 특히 充足시키기 어렵다. 그 理由는 EC의 標準化 과정이 합의 또는 상호인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第3世界에 혼합된 祝福으로 다가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EC가 지나치게 높은 표준을 설정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Sapin, 1989, p.15) 둘째, 現在의 國別쿼터를 EC차원의 쿼터로 대치하고 조약 第115條를 삭제할 可能性이 있다. 그렇게되면 現在의 제약보다 훨씬 더 심각한 狀況이 될 것이다. EC차원의 쿼터대상으로는 첨예한 다자간섬유협정 관련제품, 신발, 가전제품, 도자기, 자동차 그리고 바나나등이 있다.[32] 만약 이 시나리오가 實現된다면

---

31) 특히 Sapir(1989, pp. 4-5)는 貿易效果를 決定하는 重要한 要素로 일반무역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인 외부장애요인이 충분히 줄어들기만 한다면 유럽통합은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키기보다는 오히려 增加시킬것이라고 主張한다.

32) 비록 그러한 시나리오가 GATT에 위배되는 것이긴 하지만 개별 위원들은 自動車에 대한 쿼터감축은 결국 없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이미 표명했다. 반면 EC위원회는 EC차원에서 도입된 정책의 다른 側面과 關聯한 提案은 現在 理事會에 상정중이라고 主張했다.

資料 : Commission of the EC, " Fifth Report of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conc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White Paper on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Com(90). 90, final, Brussels, 28 March 1990.

韓國은 相當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理由는 EC에 대한 韓國의 總 輸出品中 60%以上이 위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셋째, 배서에서 보듯이 EC는 1992년 유럽 統合으로 역내시장을 完成하는 것과 관련하여 비회원국과 거래할 때 호혜의 原則을 강조하고 있다. 우르과이 라운드가 특히 政府購賣[33]와 EC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에 相應하는 서어비스분야에 대한 조약을 제정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EC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회원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이 過程에서 購買力을 갖지 못한 開發途上國은 불리한 位置에서 협상을 하게 될 것이다.[34] 네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과 같은 新興工業國이 同一한 투자재원을 갖고 EC내에 投資하는 것이 비회원국에 投資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 그 理由는 한편으로는 接近의 용이성때문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資本形成을 위한 부양책으로써 저개발지역에 支給하는 구조기금때문이다.

마지막 보다 重要한 事項으로, 新興工業國을 包含한 非參加 開發途上國은 EC가 반덤핑규정, 원산지증명에 대한 부가가치요구 및 현지부품사용규정을

---

33) 政府購買市場의 개방은 역외공급자뿐 아니라 역내공급자에게도 重要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政府市場計定이 EC 總 GDP의 1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비회원국으로부터 통신, 운송, 에너지 및 술을 購入하고자 할 때 EC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要求하고 있다: 50%以上의 현지부품을 使用하고 현지공급업자와 비교해 價格差異가 3%이하일 것.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을 包含한 개발도상국은 GATT의 정부구매에 관한 협정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國家는 유럽의 政府購買市場開放에 參與할 수 없다.

資料: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y, L264, Volume, 16, Oct., 1989.

34) 예를 들면, Hine(1985, p.217)는 EC가 美國이나 日本등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에 대해 더욱 보호주의적 성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 理由는 개발도상국은 購買力을 갖지 못했고 선진국처럼 보호주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 强化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國家는 EC가 차별정책을 심화할까 걱정하고 있다. 이것은 自由貿易協定과 같은 EC와 동구유럽간의 급속한 關係의 進展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EC주변국과의 貿易增大傾向은 매우 빠르게 進行될 것이다. 과거의 經驗에 비추어 볼 때 특정국과 EC의 貿易이 增加할 때 다른 國家는 계속해서 EC내에서의 市場占有率을 喪失했다(Hine, 1985, p.128) 이러한 可能性은 이미 헝가리와 폴란드와의 일반특혜관세협정 체결, 다자간 섬유협정 쿼터의 增加등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회원국의 立場에서 볼 때 단일유럽시장의 展望을 세계무역환경과 관련한 樂觀과 混同을 同時에 가져오고 있다. 배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主要理由는 EC역내 市場自由化에 대한 計劃이 역외국과의 호혜성을 强하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EC의 역외국에 대한 一般貿易政策은 變化可能性과 不確實性, 그리고 槪念的 結合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외국들은 유럽의 요새화를 위해 역내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쌓으려는 유럽보호주의자들이 主張하는 바를 記憶해야만 한다.

6. 韓國과 EC사이의 經濟的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더 좋은 提言들

1992년의 EC統合을 통해 EC는 단일규모로는 世界 最大의 市場이 될 수 있는 틀을 完成시킬 것이다. 더욱이 EC와 EFTA간의 自由貿易協定의 豫想된 진전 및 유럽코메콘국가들의 신속한 革新을 통해 EC는 國內市場

에서 더욱 重要한 存在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유럽經濟統合計劃은 外部指向的 經濟成長을 추구하고 美國과 日本에 대한 依存性을 줄이기 위해 輸出市場을 다각화하고자 하는 韓國에 대해 重要한 의미를 갖는다.

EC에 대해서는 經濟成長이 世界에서 가장 역동적인 것으로 비추어진 태평양연안국가와 貿易關係를 擴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나라는 미래의 世界經濟成長을 선도하리라 豫測된 GNP와 貿易의 觀點에서 본 統合된 經濟力이 EC의 經濟力을 압도하는 나라들이다. 다른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비교할 때 韓國은 急速한 經濟成長으로 인해 최근들어 先進國의 重要한 輸出市場이 되고 있다.

태평양 연안국가로서 韓國이 提供하는 잠재적 자산은 차치하더라도, EC 자신의 역내경제問題로 因해 EC는 역내시장을 넘어서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 長期的 觀點에서 볼 때 EC統合計劃이 1992년에 完成된다고 하더라도 1990년대의 EC의 經濟成長率은 대략 3%程度일 것이다. 그러나 몇몇 國家들, 특히 韓國의 經濟는 높은 잠재력을 지닌채 파도처럼 밀려올 것이다. 따라서 EC는 輸出指向的인 자유무역 정책(Giersch,1987,p.31)을 통해 대외무역을 增進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內部에서 提起되고 있다. 게다가 EC는 對外貿易과 傳統的으로 會員國 및 美國, 日本과 같은 先進非會員國에 집중되어온 기타 다른 經濟的 關係에서 벗어나 다각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상태에 있다. 요컨대 EC와 韓國 두나라 모두는 經濟的 關係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두 무역파트너간의 經濟的 關係를 增進시키기 위해 EC는 먼저 産業構造와 技術開發등은 變更시키고 쇠퇴산업의 수명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輸入

에 대한 무역장벽의 擴張을 멈추어야 한다.[35] 이 問題와 關聯해, 韓國은 EC의 정책입안자들에게 保護貿易主義의 强化는 실업뿐만 아니라 競爭力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Balassa, 1980, p.427, Turner et al., 1980, p.14).

1992년의 EC統合計劃推進과 관련해 EC는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會員國에게처럼 역내시장을 自由化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努力해야 한다. EC는 또한 간접적으로라도 일반표준의 確立過程이나 R & D計劃에 대해 비회원국이 參與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특히 韓國은 EC의 수입규제를 제거하고 韓國市場에 대한 認識을 제고시킴으로써 EC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를 원한다.

한편, 두 무역파트너간의 經濟的 關係를 構築하기 위해서 韓國은 또한 美國과 比較해 볼 때 EC에 대한 차별적인 政策을 중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韓國은 지적소유권, 보험 서비스, 전기 통신 서비스등의 分野에서 美國과 協約을 맺었듯이 EC와도 協定을 체결해야 한다. 政府購買의 경우, 韓國은 먼저 GATT의 政府購買協定의 會員國으로 가입해야 하고 다음으로 EC의 정부구매시장에 참여하도록 努力해야 한다. 韓國은 美國과 日本의 標準化 대신 EC의 표준화규정을 채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HDTV와 같은 새로운 技術集約分野에 대해 유럽스타일의 기준을 채택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韓國은 그동안 새로운 유럽의 技術을 習

35) 예컨대 1973年에 26개의 개발도상국은 비록 섬유산업에 있어서 失業의 主要 原因이 수입할당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노동생산성의 向上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C가 會員國의 섬유산업에 대해 유지할 공간을 주기 위해 다자간 섬유협정을 적용하는데 동의했다. 資料 : Woolcock, 1982, p.31.

得하고 일반 표준화 確立過程에 參與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것과 함께, 物質的 資本投資의 교환과 기술이전이 계속되어야 한다. 더욱이 特定産業分野에서 EC가 겪고 있는 산출량의 급격한 감소를 막기 위해 두 무역파트너는 부분품, 요소품 및 부속품의 交換과 海外生産을 통한 생산과정의 國際的 分業化 틀내에서 내부산업의 특화를 增大시켜야 한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韓國은 그의 시장, 投資 및 技術에 대한 外國參與를 도울 準備가 되어 있다. 韓國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자유화와 外國人投資에 대한 開放이 그 좋은 例일 것이다. 韓國의 經濟가 外國人들에게 매력적인 또다른 理由는 숙련된 勞動力 提供과 다양하고 정교한 산업과 더불어 韓國의 大規模 흡수능력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理由로 지금이 EC가 韓國의 成長하는 市場을 利用할 最適時期이다.

7. 結　　論

韓國과 EC 모두가 그들의 貿易關係를 多角化 시키는 데 一般的인 관심을 갖고 있다. EC는 太平洋 연안국가로 進出하기 위한 발판으로 뿐만아니라 韓國이 지닌 잠재적 市場때문에 韓國을 利用할 수 있다. 한편 韓國은 EC와의 貿易關係를 개선하고 美國 및 日本과의 기존의 유대를 强化함으로써 迅速한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다. 韓國과 EC의 쌍무적 交易으로부터 상호효익을 增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貿易關係는 아직도 充分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두 무역파트너들이 서로에 대해 관심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즉 EC의 對外貿易은 다른 先進國이나 自由貿易會員國家에 집중되어 왔고 韓國은 주로 美國과 日本에 依

存해 왔다.

두 무역파트너간의 貿易關係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EC는 韓國에 대한 선택적 수입장벽을 줄이고 역동적인 事業活動을 통해 成長하는 韓國市場에 대한 關心을 고조시킴으로써 EC市場內에서의 韓國의 고립을 막아야 한다. 더욱이 EC는 産業構造를 개선하고 다각화하려는 韓國에게 많은 협조를 해야 한다. 한편 韓國은 EC에게 韓國이 EC의 수입국 일뿐아니라 EC의 輸出市場이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서 韓國은 韓國市場에 대한 EC제품의 接近을 容易하게 해 달라는 要請에 대해 肯定的인 결과를 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韓國의 日本에 대한 貿易赤字와 EC 및 美國에 대한 貿易黑字를 줄이기 위해 수입시장을 다각화하는 過程에서 EC에 비해 相對的으로 美國에 대해서 市場開放을 擴大하는 것과 같은 韓國의 차별적 태도는 수정되어야 한다. 同時에 무역마찰을 줄이기 위해 韓國은 EC내의 몇몇 市場에 집중하여 소품종의 製品販賣를 증가시키는 대신 多角化된 輸出商品과 市場構造로 輸出戰略을 變化시켜야 한다. 그러므로써 韓國은 日本의 축소판이 아니라는 事實을 EC에게 確信시킬 수 있다.

参 考 文 献

Bael, I.V. and Bellis, J.F., 1990, "Anti-Dumping and other Trade Protection Laws of the EEC," CCH Editions.

Balassa, B., 1980. "The New Protectionism and the International Economy," Word Bank Reprint Series : Number 70.

_____, 1987, "Japan's Trade Policies," Prepared for the conference on "Free Tread in the world Economy Towards an Opening of Markets," held at the Institute of World Econcmies, at Kiel, W.Germany on June 24-26.

Bourgeois, J. H. J., et al., 1983, "EEC Protectionism and the European Community," Kluwer Law and Taxation Publishers.

Cartinat, M., Donni, E. and Italianer, A., 1988,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 Results of Macroeconomic Model Situations," Economy Paper, No. 65, September.

Cawley, R. and Davenport, M., 1988, "Partial Equilibrium Calculations of the Impact of Internal Market Barriers in the EC," Economy Papers, No.73, October.

Cecchini, P., 1988, "1992 The European Challenge : The Benefit of a Single Market," Aldershot, Wildwood House.

Commission of the EC, 1985, European File, 2/85.

_____, 1986,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European Information External Relations, 84/86.

_____, 1986, "EC-Japan Relation," Com (86) 60 final.

_____, 1987, "Improving Competitiveness and Industrial Structure in the Community." Document.

_____, 1987,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Completing Market," Com (87) 203, final.

_____, 1989, "Safeguarding the Conditions for a Successful 1992," Com (89) 101 final.

_____, 1989, "Facing the Challenges of the early 1990s," European Economy, No. 42.

Cutler, T., Haslam, C., Williams, J. and Williams, K., 1989 "1992- The Struggle for Europe."

Geroski, P.A., 1988, "1992 and European Industrial Structure in the Twenty-First Century" mimeo, London, London Business school.

Giersch, H., 1987, "Internal and External Liberalisation," Economic Paper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54.

_____, 1989, "Europe's Prospects for the 1990s," Economic Paper, No.76, May.

Hine, R. C., 1985, "The Political Economy of European Trade: An Introduction to the Trade Policies of the EC," distributed by Harvester Press.

Italianer, A., 1990, "1992, Hype or Hope: A review," Economic Papers, No.77, February.

Mayes, D. G., 1989, "The Effects of Economic Integration on

Trade," in "The European Internal Market," edited by Jacquemin, A. and Sapir, A., 1989, Oxford University Press.

Neuberger, H., 1989, "The Economics of 1992," London, Socialist Group of European Parliament, Labour Group New Stateman.

Nognes, J., et al., 1986, "The Extent of Nontariff Barriers to Import of Industrial Countr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789.

Official Journal of the EC, L/167/9, 22, June, 1987.

_____, 1987, L 387, Volume 29, December.

_____, 1989, L 264, Volume 32, Oct.

Sapir, A., 1989, "Does 1992 come before or after 1990? On Regional versus Multilateral Integration," CEPR, Discussion Paper Series, No.313.

Schultz, s. and Schumacher, D., 1984, "The Re-Liberalization of World Trade," Journal of World Trade Law, Volume 18, No.3.

Shinohara, M., 1982. "Industrial Growth, Trade, and Dynamic Pattern in Japanese Economy," University of Tokyo Press.

Turner, L., et el., 1980, "Living with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London, The L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iner, J., 1950, "The Customs Union Issue," New Y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Woolcock, S., 1982, "Textile and Clothing," in Turner and Mcmullen,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Trade and Adjustment", London, Allen & Urwin for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蘇聯의 經濟改革 動向

Andreas Polkowski
(함부르크經濟問題硏究所)

동유럽에서의 改革은 긴 歷史를 가지고 있다. 改革을 통해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개선해야 할 必要性은 동유럽에서 計劃經濟가 실시된 이래로 줄곧 존재해 왔다. 19세기 자유주의적 資本主義의 부정적 성격에 대한 대응개념의 응집체인 社會主義 계획경제체제는 유연한 시장 메카니즘을 집중화된 행정계획으로 대체시켰다. 經濟過程의 폭발적이고 유연한 흐름을 방해하는, 經濟關係의 기계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社會主義 計劃經濟에는 시작초기부터 改革의 압력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10月 革命이 있은지 불과 몇년이 지난 후 소련의 발전은 막다른 골목에 다달았다. 레닌에 의해 1920 ~ 1921년 사이에 주도된 社會主義 計劃經濟의 첫번째 改革인 新經濟政策(NEP)은 재화의 공급과 國民所得의 현격한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선박과 무역-또한 국유화된 산업부문에서도-에서의 사기업의 한정된 許容과 시장메카니즘의 재도입을 시도하였다.(Osers J.1980,p.54.ff)비록 新經濟政策이 어떤 성공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改革'이라는 개념을 빌린 단지 '신중한 事故'일 뿐이었다. 오히려 新經濟政策期間은 소련경제와 사회의 革命的 變化를 위한 휴식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점이 重要한데, 이유인 즉 오늘날 소련에서의 많은 改革들이 아직까지도 新經濟政策을 선례로서 간주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2차세계대전이후 사회주의 計劃經濟에 적응해야만 했던 나라들과 마찬

가지로 소련에서도 改革은 절실했다. 소련형의 計劃經濟는 生産要素의 과도하고 비경제적인 사용을 불가피하게 했다. 가중화되는 생산요소의 부족, 기술도입의 어려움 그리고 낮은 생산성은 장기적인 면에서 동유럽의 생활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동유럽 제국가들은 정기적으로 체제(경제체제)를 實驗해 보아야 할 必要性을 실감하게 되었다. (Hensel, K.P., 1970, p.394). 實驗의 目的은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보다 效率的으로 만드는 것이다.(체제를 완성하는 過程) 經濟過程에서 개별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計劃과 經營에서의 새로운 方法이 도입되었다. 달성된 所得의 배분뿐만 아니라 計劃目標의 설정에 企業들이 參與하게 함으로써 잠재능력을 활성화 시키고 기업들의 革新能力을 고양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앙집중식 통제원리는 고려의 對象이 되지 않았다.

소련 경제는 계속해서 위기로 치닫고 있다. 브레즈네프 사후 조국이 직면한 비관적인 경제상황의 인식이 개혁의 진정한 동기가 되었다. 80년대에 있었던 개혁의 제1단계는 우선적으로 體制의 어떤 變化도 없이 效率性을 增加시키는 것을 目標로 하였다. 단기간내에 잠재된 생산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드로포프는 타락과 알코올을 반대하고 규율을 준수케 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고르바초프하에서도 역시 경제의 效率性 增大와 社會經濟的 진보의 가속화가 주안점이었다. "달리 방도가 없다"고 고르바초프는 선언했다. 이와같은 目標로써 作業態度를 改善하고 알코올중독, 타락, 그리고 규율의 부재에 대한 투쟁운동은 계속되었다. 1986年 이래로 '페레스트로이카'란 용어는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졌다. 처음에 이것은 양심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의미했다. 그 다음으로 이 용어는 경제에서의 페레스트로

이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으며(그러나 고르바초프는 '改革'(reform) 또는 '革命'(revolution)이라고 부른다), 마침내는 정치체제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주요 의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 페레스트로이카란 계획된 개혁들의 모든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인 것이다.(Brahm, H, Stagnation. Perestrojka, Krise ; Osteuropa, Nr. 5, 1990, p.398, ff).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와 사회의 동시적 재건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改革과 구별되며 바로 이점이 決定的인 特徵이다. 以前의 改革들과는 달리 社會 政治 體制에서의 變化가 더 以上 금기시되지 않는다. 民主化는 재건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는 經濟 領域에서도 마찬가지다. (Aganbegian in a discussion with p. Christ and N. Piper: "Dies sind die Jahre des Handelns" (These are the years of action) in : Die Zeit, No. 39, 18.9.87).

고르바초프는 글라스노스트-예컨대 보다 명료하고 냉정한 현존하는 악습에 대한 발언과 비판-를 통해 개인 각자로 하여금 책임의 막중함을 깨닫고 각자 맡은바 임무를 보다 충실히 하게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글라스노스트는 캠페인(社會運動)으로써 전개되었다기보다는 經濟와 社會의 民主化를 이끌어 나갈 규범으로 인식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고르바초프의 정책을 '급진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서방측의 많은 사람들은 中央集中式 管理經濟에서 市場經濟體制로의 전이를 '급진적 개혁'이라는 用語와 결부시킨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소련

의 지도층이 말하는 '급진적 改革'을 正確히 표현했다고 할 수는 없다. 아가베기안(Agabegian)과 같은 소련 지도층의 핵심인사들은 改革의 努力은 市場經濟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 고르바초프에게 있어서도 급진적 改革이나 재건은 소련 社會와 經濟全般에서 各 구성원들의 能力을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經濟 재건의 주안점은 管理와 計劃體制에 두어졌다. 1987년 "기초적인 재건의 주요 方向들"이라는 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目標들이 提示되었다.

1. 會社 및 企業의 獨立性 確保, 經濟 會計 體係 및 자기금융제도로의 전환, 그리고 勞動集團의 所得과 勞動生産性 간의 직접적인 의존단계 確立

2. 企業에게 經營活動을 위임하므로써 그 전략적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중앙집중식 經濟管理體制의 근본적인 재개편

3. 改革의 근본적인 改革, 金融과 信用體制에 의한 價格形成.

4. 새로운 조직구조의 創造(行政改革)

5. 黨과 國家 그리고 경제 단체의 活動 方式 및 수단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變化와 自己 管理의 계발.

<개편과정에 종속되지만 그 기초원리와 구조는 소련 공산당에 의해 정해지고 규율되는 체제개혁이 지금까지 이룩한 것은 무엇인가?>

現在의 經濟體制는 計劃經濟의 몇가지 구조들이 제거되어 수정된 잡동사니이다. 또한 여기에는 시장체제를 지향하는 경제기능의 본질적인 기본들의 대부분은 아직 결여되어 있다. 結果는 소련이 매우 불안정한 과도기

狀態에 있다는 것이다. 1989年1月1日을 기해 모든 企業들에 適用된 1987年 制定된 企業法(The Enterprises Law)은 기업이 經濟의 中心 單位임을 공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機能에 따라 企業에게 광범위한 經濟的 獨立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기업들의 獨立은 지면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구계획(舊計劃)에서의 목표들은 生産할 재화의 양과 범위를 결정하는 國家 契約에 의해 대체되어졌다.

1989年 8月 國營企業에 關한 法律의 수정안에 의해 정부계약은 제한되었다.(생산수단의 모든 제조에 政府契約이 적용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行政府의 各 部署들은 政府契約을 할당할 權限을 상실하였다. 그렇다고 기업들의 결정권이 증대된 것은 아니었다.

이와 함께 國家와 행정각부에 支拂해야만 하는, 利益에 대한 빈번하고 임의적인 중과세는 企業利潤을 企業에 適用시킴으로써 취할 수 있는 전술적 운동(책략)의 여지를 수축시킨다.(Reymann,S.:Halbherzige Reform-die UdSSR in der Krise in:Die Wirtschaft der Osteuropaeischen Laender an der Wende zu den 90er Jahren, Hamburg 1990.p.195ff).

이러한 측정은 社會主義的 착취-나태와 비효율성이 근면하고 능률적인 사람을 착취한다-원리가 改革에 의해 시정되지 못한 채 大部分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비록 行政各部의 權力이 部分的으로 제한되었다할지라도 경제체제에서의 고스플란(Gosplan)과 고스납(Gossnab)의 중요성은 상실되지 않았다. 아직도 企業들은 本質的으로 Gossnab에 의한 國家의 資源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이미 현존하는 도매업계는, 그 매매의 주요부분이 國家에 의해

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지는 한, 그 機能을 效果的으로 발휘할 수 없다. 1989년 生産手段의 20%가 자유시장에서 매매되었지만 동시에 불완전하고 마지못한 改革手段의 不利益은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여졌다. 즉, 中小企業들은 수요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대기업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졌다.

가격문제는 改革의 난제로 남아있다. 企業에 관한 法律에 따르면 價格은 소비자 契約에 있어서의 國家나 아니면 獨立的으로 企業에 의해서 책정된다. 그 중에서도 價格의 大部分은 國家에 의해 정해진다. 契約的으로 그리고 獨立的으로 定해진 價格은 오직 特定한 상품에 한해서 適用된다.(例를 들면 新商品들). 부족하고 강력하게 독점화된 市場條件下에서 企業의 價格決定 전술의 여지는 값싼 商品의 生産을 중시하므로써 그리고 생산비용의 상승은(賃金上昇, 非能率) 고가격 형태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므로써 市場에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현상이 소련경제에 있어서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그것들은 改革이 마지못해 수행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現象인 것이다.

소비재 시장이 직면한 廣大한 수요에 따른 거대한 價格 상승 때문에(지난 2년간의 임금상승은 대략 그 이전 7年間의 임금상승과 비견된다.) 1989年末 소련지도부는 최고 소비에트로부터 자유로운 가격형성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소비재 시장의 안정은 또다시 행정적인 수단에 의해 보장되었다.

근본적인 가격개편은 또한 현실적인 환율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앙에 의해 결정되고 과대 평가된 루블의 환율은 기업의 효율적인 대외 무역활동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다. 환율의 現實化를 위한

첫번째 조치로써 외국환 공매가 실시되어졌다. 공매에서 기업들은 외화를 自由롭게 매매할 수 있었다. 금년 5月에 있는 外國換 공매에서 142개 企業들이 外換을 구입하길 원했다. 그러나 外換을 팔고자 한 企業은 14 개에 불과했다. 980만루블어치의 外換이 팔렸다. 外國換 공매는 輸入을 위한 기금으로서는 매우 무의미한 것이다. 外換을 必要한 만큼 보유하지 못한 企業에게 있어 外國換의 공매는 기껏해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정도의 機能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外國換 공매가 換率의 現實化에 대한 確信을 주었다는 점과 國內에서의 화폐태환성을 도입하는 토대를 닦아 놓았다는 점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루블의 완전한 태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經濟的인 전제조건들이 조성되어야만 한다.

이처럼 현재의 조절구조는 그 규정 영역에 있어 아직까지 모순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제도적 장치는 어떤가?

生産手段의 社會主義的 所有는 經濟體制의 기초를 형성한다. 經濟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소유(state ownership)가 지배적이다. 열띤 논쟁을 벌인 후, 새로운 재산법이 소련에서 통과되었다. 그것은 國家財産과 더불어 동등한 權利를 가진 財産의 또다른 형태가 存在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經濟의 비국유화를 위한 법적인 장치를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재산에 대해 동등한 權利를 공식적으로 부여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과 조합재산에 대해 이전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새로운 재산법은 국가부문의 지배적 위치를 확신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을 공동재산의 다른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경제를 비국유화 하려하고 있다. 問題의 그 主要 형태는 사실상 제3의 方針인 獨立的으로 管理되는 모델이다. 사유재산은 소기업에 국한될 것이며 이처럼 예외적인 것으로 남

아 있을 것이다.

中央計劃經濟에서는 실질적인 銀行이나 信用 체계가 없었으며 자본시장이란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행정적인 통제 수단으로부터 다른 手段으로의 전환은 銀行과 信用體係의 改革이 必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8年 初에 特殊目的을 지닌 새로운 國家 銀行들이 설립되었으며 중앙은행(state bank)에는 발행은행(issuing bank)으로서의 기능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재구성)은 실제로 本質的인 變化를 유도하지는 못했다. 신용의 배분이 國家에 의해 이루어지는, 특수은행의 獨立的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Reymann,S.:Halbherzige Reformen…Op. cit.p.24).

3중 구조의 銀行體係는 소위 商業銀行과 組合銀行들의 설립에 의해 이루어졌다. 1990년 초 이미 200개 以上의 제3단계 銀行들이 存在했다. 商業銀行과 組合銀行들의 活動은 特殊目的 銀行들과 政府機關들에 의해 상당한 制限을 받는다. 國家銀行과 특수목적 은행들은 종종정부의 오른팔(long arm)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現在는 獨立的인 中央銀行과 여러 개의 商業銀行들로 이루어진 2중 구조의 은행체계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적절한 법적 규정들 이상의 것을 요한다.

外國貿易은 파산된 소련 국내 경제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987年의 신대외무역규칙- 그 이후로 더 확장되고 개선되어 왔음-은 수출신장과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대외무역에서의 의사결정권을 분산화 할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대외무역자유화(기업에 대한 一般 대외무역법)는 관료제의 감화(수출통제와 쿼터제)를 수반했다. 예컨대 1990年初 以後로 소련의 대 서방수출 전체액수의 約 95%가 政府에 의해 認可된 것

이다.

産業分野에 따라 다른, 外國換 보유 할당량은 루블 교환시 國家로부터 外國換을 되돌려 살 수 있는 權限을 企業에게 부여할 뿐이다. 이처럼 輸入基金은 國家에 의해 계속해서 규제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련에서는 계속해서 對外貿易과 換錢의 독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사회질서- 또한 완화된 計劃經濟에서의 시장-에 관한 근본적인 政策決定은 항상 計劃經濟를 위하여 취하여졌다. 가장 최근의 정부개편계획마저도 '관리되는 시장경제'를 그 목표로 삼고 있다. 政府는 計劃經濟와 市場經濟의 혼합체인 '시장'을 그 目標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행정형의 규제, 즉 行政各部署, 고스납(Gossnab), 행정가격, 政府契約, 生産品의 분배에 대한 규제에 강조점이 주워졌다. 규제는 과거 관료형에서 피하던 信用, 稅金 등의 다양한 經濟手段에 의해 달성되어졌다.(Bagomolow, O.: Dieser Weg führt in eine Sackgasse, 〈Moskau News, NO.7/1990, p.12).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있었던 이전의 改革들과 유사한 改革 프로그램에는 통화팽창구조가 있었다. 經濟改革에 대한 政府提案은 최고소비에트에서의 논쟁결과 거부되었다. 그 제안은 완전한 재정적 性格을 띠고 있었으며,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단지 물가상승만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내각은 돌아오는 가을까지 改革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計劃을 제시할 것이다.

實際로 이 計劃이 급진적 改革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고르바초프는 매우 조심스럽다. 소련국민의 약 3분의 2가 보조금형성과 저물가달성에 전력하며, 物品購入을 위해 기꺼이 줄을 설 것임을 선언했다. 이는 자유시장체

제를 거부했음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는 두가지 대안－1) 정치적 위험을 수반할 급진적 改革인가 2) 마지못한 改革의 지속과 불만의 증가인가－을 가지고 있으나 두가지 모두 좋은 방법은 아니다. 건정적인 전환이 소련에서 취해져야만 한다.

확대되고 있는 민족분규를 고려해 볼 때 結局 소련에서의 經濟改革 推進은 不可能하다고 생각된다. 각 공화국들은 서로 다른 方法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강도로 自身들의 經濟를 재구성할 것이다.

東欧의 政治·經濟改革이 東·西 經濟關係에 미치는 影響

Peter Knirsch
(자유베를린대 교수)

1980年代 후반에 대부분의 동유럽 國家들은 그들의 經濟的 후진성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社會主義的"經濟體制로 알려져왔었던 그들의 經濟體制를 變化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 이전에도 물론 그들의 經濟問題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몇몇 經濟改革들 즉, 기존의 經濟體制는 그대로 고수한 채 부분적으로 變化를 시도했었던 성격의 改革들이 시행되었었다. 1989年 후반이래로 이들 대부분의 동유럽국가들은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變化뿐만이 아니라, 經濟體制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變化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동유럽에 있어서의 그러한 체제변동이 동유럽국가들의 海外貿易關係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1. 해외무역관계에 있어서 해외무역체제의 중요성

과거 동서간 經濟關係에 있어서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관계가 본질적으로 상이한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행해져 왔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본질적'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각 國家들은 그 자신들의 經濟體制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海外貿易關係는 항상 다른 經濟體制들 사

이의 關係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기업법에 있어서의 국가별 차이점은 좋은 예이다. 東西經濟關係의 경우에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사실이다. - "동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생산수단의 社會的 소유, 國家經濟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관리의 성격을 가지는 "社會主義的" 經濟體制가 존재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구"(여기에서는 단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만이 그러한 海外貿易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진다)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市場을 통해서 조정되는 經濟的 절차를 특징으로 하는 "資本主義的" 經濟體制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경제관계의 경우에, 그들의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차이점의 존재는 貿易 참가자들 사이에 현저한 차이점이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관료적 조직을 가지고 있는 海外 貿易機構에 의해서 대표되는 동구측의 國家 企業들이 서방측의 사기업들과 거래를 하고 있다. 經濟政策에 대한 간섭의 가능성도 이러한 經濟體制的 차이점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社會主義 국가에서는 海外 무역거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간섭이 가능하다. 적어도 원칙상으로, 國家 海外貿易과 더불어 海外貿易과 국제 통화에 대한 국가독점으로 말미암아 동구에서의 모든 海外貿易과 국제 통화거래는 중앙집권화된 經濟政策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서방측이 COCOM 명단에 근거하여 통상 금지수단 혹은 輸出 금지의 형태로 貿易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동구측의 불만들은 극히 일방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동유럽의 貿易國家들이 海外貿易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서방측으로 하여금 輸出과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은 海外 貿易關係에 있어서의 개입이 서

방 經濟政策에 있어서의 한 요소가 되는 범위에 한에서만 타당성이 있다. 서방의 산업국가들이 자유시장 經濟를 원칙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海外貿易에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국제통화의 자본교류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는 努力과 함께 상당히 일반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東西 經濟關係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무역제한은 서방측의 목적에 따라 동서간의 政治的인 적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에서도 기인한다.

과거에 西歐文化에서의 지배적인 견해는 經濟體制에 있어서의 그러한 차이점들이 東西 經濟關係의 발전 가능성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인데 필자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體制間 차이점이 점차 중요성을 상실해가고 있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사라져가기도 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어느정도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이전에 社會主義 국가들이 행하였던 국가주도형 海外 貿易體制가 서방의 貿易 파트너에게 있어 많은 관료주의라는 장애물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상호간 거래가 완결되기까지 복잡하고 값비싼 협상들을 치루어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많은 서구의 企業들이 國家 주도형 무역국들과 貿易關係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방해하기 마련이다. 더불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값비싼 비용은 아마도 서방의 상품 가격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로 社會主義 國家에 의해서 지불된다는 사실이다. 이전의 經濟體制의 많은 요소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은 특히 소련의 경우에 해당된다.) 현 전환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전체의 지부들을 포괄하는 海外 貿易機關들에 海外貿易을 집중시키는 것은 서방의 貿易 파트너들에게는 어느정도 이득이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될 수 있다 : 특히 서방의 輸出國들에게는 舊 體制下에서 수요를 산출하는 것이 더 손쉬운 일이었다. 적어도 현 전환기 동안에 동구 유럽에서 잠정적인 購買者와 판매자들을 발견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이다.

2. 동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경제정책과 중앙집권식 계획의 영향

비록 내가 海外 貿易體制에 영향을 미치는 體制間 상이성들이 과거 동서 經濟關係의 발전에 강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느정도 의심할 수 있다고는 해도, 위에서 언급한 經濟政策 간섭의 여러가지 가능성들은 분명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80年代 초반까지, 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政策은 적어도 그러한 간섭의 가능성들을 서방과의 海外 貿易關係를 제한하는 수단으로써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자급자족의 경향들은 소련의 歷史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 제2차 세계대전 以後 소련은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世界에 의해서 "資本主義 封鎖"에 직면하게 되었던 유일한 공산주의 國家였으며, 소련은 서방의 産業國家들에 대해 政治的 종속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 최소한의 정도로서의 經濟的 종속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1945年 以後, 소련은 6개의 작은 중부와 남동부 유럽국가들을 포함

하여 그 政治的 영향력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에게 소련의 政治, 經濟體制를 강요하는 것은 그들이 世界市場으로부터 철수해서 그들 자신의 "社會主義 世界市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능하게 해준다. 스탈린은 이러한 목적으로 단일의 世界市場을 분열시키는 것과 관련한 그의 테제를 공식화시켰다. 과거에 서구와의 經濟關係가 지배적이었던 동구제국들에 있어서, 이는 소련과 다른 社會主義 국가들로의 재편성을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들은 1949年 以後로 CMEA 내에서 서로 서로 협력하고 있다. 넓은 市場領域을 가지고 있는 소련에 비교해 볼 때, 소련보다 훨씬 더 海外貿易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社會主義 국가들에게 있어 그러한 변천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특히 그들의 새로운 貿易 파트너인 소련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수입품들을 언제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국가들의 산업구조에 있어서 變化를 초래했다; 상당한 정도 그들은 국제적 노동분업에 의해서 제공되는 이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고, 대부분 그들의 貿易 상대자와 유사한 여러가지 종류의 재화들을 소량으로 생산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48年 以後에 동서 經濟關係를 위축되도록 만들었던 것은 이렇듯 政治的으로 강요된 자급자족의 경향만은 아니었다. 방금 언급된 구조적 變化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는 또 하나의 요소는 소비에트 모델에 따라서 모든 소규모 동유럽국가들에 건설된 經濟體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체제 자체의 영향으로써, 특히 과학기술 發展의 영역에 대해 언급하자면, 科學技術과 생산품의 품질에 있어서 서구와 社會主義 國家들간의 갭은 시간이 더해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世界市場에서의 수출기회 감소와 더불어 위축되는 수출량과, 경화부채 (hard currency debts)를 떠맡음으로써 이러한 추세에 대처하려는 동구제국의 노력은 단지 제한된 시기에 있어서만 問題를 완화시킬 따름이다. 더욱이 國內市場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불균형, 즉 동구제국에서 生産되는 대부분의 재화에 대한 국내수요의 초과현상은 일반적으로 輸出에 필요한 재화의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7]

추가로 여기에 우리가 잊지말아야 하는 것은 서구 산업국가들의 經濟政策 역시 부분적으로는 東西 經濟關係에 있어서의 이러한 퇴조현상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수단을 강구하도록 이끄는 것은 바로 東西間 政治關係의 악화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냉전 기간 동안, 특히 1948年부터 1955年에 이르는 기간동안 서방측은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COCOM 명단을 포함하여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고, 서방측의 輸出과 은행 신용대출에 대한 政府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비싸게 함으로써, 그리고 민감한 재화의 경우에 있어서 수입 쿼터제를 부가하고 ("反 덤핑정책"), 어떤 경우 社會主義 국가들로부터의 수출품에 대해서 최혜국 대우를 거부함으로써 東西 經濟關係의 發展 가능성에 대해 제한을 가했다.

그러한 제한적 수단들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구 산업국가들 각각에 있어 개별적으로 크게 變化하였고, 그러한 수단들은 점증하는 서구의 수출품을 위해서 貿易을 촉진시키려는 수단에 의해 거듭 좌절되었다. 그러나, 때때로 제한적 수단들은 東西 經濟關係가 불만족스럽게 發展하는 데 대해 부분적으로는 책임이 있다. 市場經濟와의 海外 貿易關係가 중앙집권식 經濟計劃에 대해 특별한 問題點들을 부과한 다른 사실 역시 영향을

미친다.--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關係는 經濟計劃 입안자의 영향에 종속되지 않으며, 그리하여 수입되고 수출되는 재화의 양과 價格에 있어서의 변동은 중앙집권식 經濟計劃에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을 야기시킨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아마도 어느 한 시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政治的 요소와 더불어서 社會主義 國家가 經濟的 자립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3. 동서 경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들

과거 수십년 동안에는 東과 西 양대진영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政治的 적대관계가 東西 經濟關係의 불만족스러운 發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간주되었었다. 양 진영은 그러한 經濟關係가 政治的 목적을 위해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 經濟的 종속으로 귀착될까 두려워했었다.[9]

나는 많은 경우 經濟的 상호 의존성의 政治的 결과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결과에 대한 간략한 요약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體制 상호간 經濟關係에 대한 政治的 요소의 영향은 일반적으로 과대평가되어왔다. 제한된 무역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經濟的 상호의존성은 정책기구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되기에 충분한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다. 이는 서방 産業國家들에 의한 어떠한 종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분명한 사실이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서방에 대해서 經濟的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견고한 計劃經濟 體制는 그러한 종속의 政治的 중요성에 제한을 두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1948年 부터 1955年 까지 '냉전'의 첫단계를 제외한다면, 政治的

요인으로 인하여 동서 經濟關係에 심각한 퇴조현상이 일어났을 때에는 東과 西 사이에 있어서 經濟關係의 發展과 政治的 關係의 개선 혹은 약화현상 사이에는 어떠한 상호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방측의 차관을 토대로 한 東西貿易의 發展이 1970年 부터 1976年 사이의 첫번째 政治的 데탕트 시기 동안에는 상대적으로 순조로왔지만 1985年 以後 두번째 데탕트의 시기 동안의 貿易은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1989年 以後 천천히 회복되었던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였고, 현재 政治的 환경이 완전히 다른 것 역시 사실이다.

매우 폭넓게 일반화 하자면, 비록 1955年 以後 貿易의 기본적인 양은 항상 유지되었다고 할지라도 東西間에 政治的 환경의 악화(두 지배세력, 소련과 미국사이의 關係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체제상호간 經濟關係에 점차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다른 한편, 政治的 관계의 개선에 의한 영향력은 보다 덜 중요했다.--부수적으로 이는 많은 서방기업들이 과도하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나의 견해로서는, 이렇듯 다른 반응들은 아마도 東西經濟關係의 發展을 위해서는 어떠한 經濟的 필수조건-- 무엇보다는 동구의 수출품이 世界市場에서 경쟁적으로 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必要性은 데탕트의 過程에 결코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데탕트 자체가 貿易關係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4.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변화

舊 體濟의 조건하에서 東西 經濟關係의 經濟的, 政治的 영향력을 먼저 서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로, 1985年 以後 일어난 變化들은 이러한 배경과 전망속에서만 고찰될 수 있으며, 둘째로, 현재의 전환의 시기에 있어서도 (1990年 봄) 改革을 위한 모든 計劃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社會主義 國家들에서는 "舊" 體制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언급들은 그 성격상 어느정도는 추론적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모든 동구제국들의 經濟體制 變化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경향들은 동일한 것이다.-- 행정부의 권위에 의한 이전의 經濟計劃 관리체제는 시장력을 통한 조정으로 대체되어질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그리고 과거에 만연되었던 생산수단의 社會的 소유는 사적소유를 포함한 다원적 형태의 소유권으로 대체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내용들이 소련에서 토의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은 다른 어느 곳에서 보다 적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舊 體制가 우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다른 社會主義 國家들에서, 특히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變化를 위한 법적인 기초가 세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改革을 향해서 가장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는 폴란드에 있어서도 그 經濟的 실체는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실정인 것이다.

東西 經濟關係가 염두에 두어지는 한, 그 關係를 빨리 확장시키기 위

한 제도적 필수조건이 여전히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만일 나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비록 현재 동독과 루마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이 세부적으로 中央集權式 計劃管理 體制를 형식적으로는 파기했다고는 할지라도, 이들 國家들의 대부분은 이전의 經濟管理 수단은 그 범위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그 결말이 뚜렷하게 가시적인 것이기는 할지라도 1990年봄의 동독과 소련의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사실은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적어도 1990年 1月 以後의 폴란드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價格이 더 이상 國家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중앙집권식 經濟計劃의 요소들이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經濟에서 약간의 市場經濟의 메카니즘이 작용하는 한도내에서는 경제상황--이 경우에는 輸出能力--에 있어서의 어떠한 개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극적인 인플레이션이 초래되어 필수적인 經濟의 호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생산수단의 社會的-주로 國家的- 소유로부터 다양한 소유권의 형태로 變化하는 동안 재화와 용역에 대한 새로운 私的 領域 生産은 經濟的 자극에 비해 좀 더 직접적인 자극을 제공하여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만성적인 재화부족 현상은 단지 소규모 私的 企業의 창설만을 허용해 왔을 뿐이다. 전체의 變化過程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따라서 東西 經濟關係에 대한 어떠한 거시경제적인 효과도 입증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사기업들과 협동조합들이 --후자는 특히 소련의 경우에 해당된다.-- 西方의 企業들과 거래접촉을 확립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종종 보고되기도 한다. 그 실제 국면과 지속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서방측에 輸出財貨의 제공과 더불어 대부분의 경우 동구의 잠정적인 貿易 파트너들은 합작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企業들은 보통 매우 적은 양으로 거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급 품목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많은 問題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유권 體制에 있어서의 變化와 연관하여 東西間 貿易의 發展을 자극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능성들중의 하나는 동일한 제도내에서 그렇듯 새로운 거래 제공품들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써, 貿易會社나 국제적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동유럽 國家들의 經濟體制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 근본적인 變化의 초기단계 동안 海外 貿易關係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가장 비현실적인 일일 것이다.--비록 국가에 따라서 상황이 어느 정도 變化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직된 경제상황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인 것이다. 앞으로 東西 經濟關係가 發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世界市場에 판매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충족시키는 것은 단지 동유럽 제국들의 經濟가 회복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개선된 東西 經濟關係에 대한 희망은 이전 社會主義 國家들의 개혁가들의 희망과 일치한다. --만일 經濟改革이 실행될 수 있고, 그 결과로 기대된대로 經濟的 상황이 개선된다면, 海外 貿易關係를 확장시키는 것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기존의 經濟體制의 근본적인 改革을 통하여 國內의 經濟的 정체현상을 극복하는 것은 世界市場에서 중부와 동부유럽 國家들의 무역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필수조건인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는 輸出能力에 있어서의 현저한 개선을 포함할 것이며, 貿易의 균형을 증진시키고, 世界市場에로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화폐가 태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채가 삭감될 수 있으며 (혹시 부채 해결에까지 도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수지균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전 모든 社會主義 國家內에서 이해되어 왔던 것이었지만,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 어떻게 그러한 體制變化들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體制의 최종형태에 대한 생각 만큼이나 불확실하다. 현재의 추세는 서구의 市場經濟와 매우 유사한 체제건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추세는 동독, 폴란드, 헝가리와 같은 몇몇 國家들에서 하나의 국가목표로서 공개적으로 간주되어지는 반면, 다른 국가들 특히 소련과 같은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종종 "社會主義 市場經濟"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중앙계획과 市場을 연계시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體制變化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보면 海外 貿易關係에 있어서의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종종 불확실해지기 마련이다. 위에서 지적된 것처럼 體制變化에서 기인되는 경제복구의 過程은 아마도 매우 장기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變化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일시적으로 經濟的 성과가 퇴조함에 따라 輸出能力이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만일 體制變化가 동유럽 國家들에 있어서의 경제상황을 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면, 그때에는 海外 貿易關係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필수조건 역시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科學技術과 生産性에 있어서 동유럽 국가들이 얼마나 서구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가를 고려해 본다면,

적어도 經濟的으로는 덜 발달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소련과 같은 동유럽 國家들은 아직까지도 당분간은 그들이 국제적 노동분업에 참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5. 동유럽 국가들의 해외 무역체제에 있어서의 변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동유럽에 있어서 改革努力의 현재 추세는 서구와 같은 형태의 經濟體制를 채택함으로써 그들의 經濟體制를 西方 産業國家들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 진다면 東西 經濟關係는 이전의 體制間 經濟關係로서의 그 특이한 성격을 상실할 것이며, 貿易 파트너들 사이에 어떤 난제들을 극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필수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다른 海外 貿易關係와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모든 동구 유럽국가들의 經濟體制에 있어서 토의되고 시도되어질 變化들이라는 것은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한 그들의 海外 貿易體制에서의 變化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적인 추세는 이전에 실행되었던 것과 같은 海外貿易에 대한 엄격한 국가통제를 포기하는 것이다. 海外 貿易을 담당하는 국가기관들은 현재 제거되거나, 아니면 진정한 중재기관으로써만 작용하고 있고, 대체로 海外貿易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企業들은 海外 貿易거래에 대한 허가와 독립적으로 海外貿易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왔다. 대부분의 경우에 企業들은 수출로부터 벌어들인 외화의 일부를 취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지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태환성있는 화폐의 소득만이 소용된다. 더우기, 이제는 모

든 동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海外 참가자들과 합작투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합작투자를 위해서 국내적 이익조정이 요구되었던 반면-- 이는 적어도 대규모 企業의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국가에 의한 이익조정을 의미하고 있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의 경우 생략되어져 가게 되었다. 東西 經濟關係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서구의 企業과 은행들이 그들의 海外 貿易體制를 재건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유럽 국가들내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져가고 있는 움직임이다.

대체로 동유럽 국가들의 海外 貿易體制에 있어서의 상당한 자유화는 그들 經濟體制의 變化와 연관되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의 견해로 海外 貿易분야에 있어서의 變化들은 종종 더욱 건고하고 그러한 變化가 창출해내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國內 經濟 體制에 있어서의 變化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것이다. 확실히 중앙집권식 計劃經濟의 전통체제하에서 만연했던 형태가 형식적이든, 실제적이든 계속해서 작용하는 까닭으로 해서, 海外 貿易體制의 變化가 가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영향들은 대부분 감지되지 않거나 단지 매우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시화될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東西間 貿易에 있어서 지속적인 하락현상- 혹은 아주 경미할 뿐인 증가-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 같다.

동유럽 국가들의 현재의 海外貿易 體制는 위에서 언급한 "상당한 자유화"라는 표현을 어느정도 도취적인 것으로 만드는 두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로, --이는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것인데-- 이들 국가들은 그들의 외환통제력을 유지해오고 있다.(이는 1990年 초반 以後 폴란드의 경우에는 거의 적용되기 어렵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輸出促進의 수단들로부터의 제한된 양의 화폐를 제외하고, 모든 경화수익은 이들 개개국가들의 국가은행으로 유입되는데, 이 銀行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외화를 할당해주고, 그럼으로써 적어도 모든 수입품과 수출품에 대해서 완벽한 통제를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긴급히 수입을 해야만 하는 절박한 必要性에 의해서 특징지워지는 貿易均衡과 부채용역과 더불어 경화국들에 대한 높은 부채가 이들 國家들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수지균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행해지고 있는 환율 조정은 理解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만, 아울러 그러한 환율에 대한 통제, 조정이 海外貿易關係의 바람직한 확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동구유럽의 國家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있으며, 화폐의 태환성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아마도 환율조정의 종말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CMEA (相互經濟協力機構) 내에서 협력하고 있는 國家들과의 經濟關係는 자유화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유럽 國家들의 海外貿易體制에 있어서 두번째 요소에 해당된다. 1988年 프라하에서 열린 評議會 會議에서 "共同市場" 창설에 관한 제안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CMEA 구성국가들 사이의 經濟關係는 國家的 수준에서 5개년 협정, 그리고 1年 협정을 토대로 하여 중앙집권적 計劃經濟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비록 體制改革의 과정속에서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중앙집권적인 經濟計劃의 구속력이 제거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CMEA 國家들에게 재화를 공급하기 위한 구속력있는 計劃目標와 국가계약들은 이전의 협정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었고, 아울러 이에 기인하는 計劃된 海外貿易關係들은 결코 "자유화" 되지 않았다. 그러나 CMEA 내에

서의 經濟的 關係의 본질은 그들 구성원들의 經濟體制가 變化함에 따라서 같이 變化하고 있으며, 과연 CMEA가 經濟的으로 의미있는 형태로써 계속해서 존재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현재 어느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쌍무적인 어음교환방식 대신에 태환성있는 화폐로의 지불방식과 현재의 世界 市場價格에 기초한 거래관계가 아마도 1991年 초반에 CMEA 國家들 사이의 經濟的 關係의 주요 형태를 형성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서방국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CMEA 내부의 關係에 있어서도 그와 똑같은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海外 貿易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 제도적 改革들은 CMEA 구성국가들 사이의 貿易을 위해서 점점 더 중요성을 띄우게 될 것이다.

6. 해외무역에 대한 동구유럽국가들의 개방

동유럽국가들의 體制變化와 관련하여 海外貿易에 있어서 직접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그들의 海外貿易體制에 있어서의 變化들이다. 동-서간 經濟關係의 심도있는 發展을 위해서 아마도 더욱 중요성을 가지는 또다른 요소는 이들 동유럽국가들에 있어서 海外貿易政策의 광범위한 재조정이 될 것이다. 최초에 동유럽국가들이 자급자족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에 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海外貿易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國家들에 있어서는 특히, 이러한 기본적 태도는 지난 몇년동안 근본적 改革의 물결이 동구유럽국가들의 기존의 經濟體制들을 휩쓸고 지나가기 이전에 이미 포기되었다. 이는 좀 더 적극적인 海外貿易關係에서 기인하는 국제적 노동분업의 이점

들이 國內的 경제침체현상에 대해 하나의 균형추로서 작용될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海外貿易에 대한 기본적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이러한 變化는 중앙집권식 國家計劃經濟의 體制가 우세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에서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중앙집권적 計劃經濟體制는 經濟的 정체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덧붙여서 침체된 國內 經濟가 世界市場에서 성공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하였다는 사실도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근본적인 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바람직하지 못한 國內的 경제상황들은 이들 國家들의 經濟體制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혁을 강화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어왔었다. 海外貿易關係와 관련하여, 그러한 변혁들은 동유럽의 수출품들을 世界市場에서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좀더 적극적인 海外貿易의 통합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었다.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락의 논점은 經濟的인 측면에서 충분히 옹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아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發展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과 관련된 問題點은 經濟的인 회복과정에 오랜시간을 필요로 할 것같다는 사실이다. 동유럽 國家들에 살고있는 사람들의 견해에서 본다면, 經濟的 상황을 개선시키고 더불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 이것이 그들이 국제적 노동분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目的이다. - 은 아마도 매우 긴 時間을 필요로 할 것이며, 그러한 접근방법을 수용하는 것은 이들 모든 國家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미 불안하기만 한 政治的 안정을 더욱더 위태롭게 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社會主義 國家들에 있어서는 그들 經濟體制의 기본적 성격만 變化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政治體制의 근본적인 변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비록 그들 國家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政治改革의 실제적인 양식들은 각자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추세는 각 國家에 있어서의 1당체제와 공산당에 의한 지배를 서구의 議會 民主主義를 모델로 한 다당제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중부와 동부유럽의 國家들이 經濟體制뿐만 아니라, 政治體制도 유사하게 채택함으로써 서구의 産業國家들의 기본구조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그러한 發展이 아무런 問題없이 진행된다면, 우리는 군사블럭으로써의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대체하는 다변적 토대 위에서의 공동안보체제의 건설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體制속에 美國과 캐나다 - 장기적으로는 태평양 地域의 國家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 를 포함시키는 必要性 때문에 내가 이러한 연관속에서 "유럽 공동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적어도 모든 소규모 동유럽 國家들은 이렇게 變化된 經濟的, 政治的 상황아래서 서부유럽 國家들과 좀 더 밀접하게 협력하려는 努力을 눈에 띄게 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극적인 예는 지난 몇 달동안에 걸쳐 서독과의 統一을 지향해온 동독의 움직이지만, 동유럽의 다른 國家들은 서구유럽과 좀 더 밀접한 關係를 수립하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공동체와 관련하여 특히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적어도 共同體와의 협력관계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共同體 구성원들과의 협력관계 - 가 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듯 진정 숨막힐듯한 상황에 직면하여서 냉정하게 남아있는다는 것

은 어려운 일이다. 전쟁의 歷史로 얼룩진 대륙위에서 平和共存을 위한 토대로써 범유럽 국가연합을 이루고, 國際的 기준에 의해서도 고도의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있는 國家들로 거대하고 번영된 市場區域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전망들은 모두 희망찬 꿈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비록 서방측이 도움을 주려는 의지와 원조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가능성들이 과대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할지라도, 동유럽의 몇몇 소규모 社會主義 國家들이 다소 신속하게 서유럽과의 關係를 성립시킴으로써 그들 國家들에 있어 바람직한 발전추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東西間의 협력의 目的에는 분명 安保가 강화되고, 安保가 강화된 그러한 상황이 서방국가들로 하여금 經濟援助를 제공하도록 북돋워 줌으로써 증대되는 번영이 포함될 것이다. 다른 한편, 비록 새로운 貿易 상대국들이 처음에는 經濟的 援助를 필요로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선호하는 근시안적 시각으로서, 그들이 서구의 輸出品을 위한 市場으로써 엄격하게는 간주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그들은 관련된 모두에게 혜택을 줄 새로운 組合의 生産要素들을 산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특수한 상황이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위와같은 사실이 동독에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서구 産業國家들과 밀접한 關係를 가짐으로써 풍부한 결실을 맺을 가능성은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고 크로아티아의 경우에 생각될 수 있다. 이는 많은 유보사항을 포함한다면 폴란드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상황은 소련의 경우 (이는 그 규모와 經濟的 問題들 때문에 그러하다)와 마찬가지로

불가리아, 루마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의 일부분에 있어서의 경우 (이들의 경우는 그들의 낮은수준의 經濟發展에서 기인한다)와 관련되어서는 더욱 복잡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유럽에 있어서 平和를 촉진시키는 새로운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련이 經濟的으로 복구되어야만 한다는 必要性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도를 가지고 분석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극히 제한된 나의 主題로 되돌아가 보자면, 동유럽 國家들에 있어서의 政治的, 經濟的인 變化들은 世界經濟 속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變化시켜왔다는 것이다. 만일 發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간다면, 西方産業國家들과 동유럽국가들과의 經濟關係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과거의 東西間 經濟關係로부터 世界經濟의 전체틀 안에서의 정상적인 經濟關係로 변형되어갈 것이다.

東欧의 經濟改革과 東아시아地域과의 關係

정 구 현
(연세대 교수)

1988年 以後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變化는 '革命的'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동유럽국가들에서는 지금, 一黨獨裁 專制主義的 政治體制로부터 다당제 민주주의 政治體制로, 그리고 중앙집권적 經濟로부터 시장경제로 옮겨가는 歷史적인 변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곳에 모인 독일분들이 발표자보다도 東歐國家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變化의 세부사항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발표의 目的은 이러한 모든 變化가 아시아의 新興工業國인 南韓에 어떤 시사를 주는가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첫번째로, 두 地域間의 교역 및 투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이러한 變化가 주는 의미에 대하여 논의하고, 두번째로는 최근 동아시아 國家들이 내적으로 당면한 問題點들의 관점에서 變化하는 동구경제체제가 이들 國家의 經濟體制에 어떠한 의미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點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동구국가들간의 경제관계>

南韓(앞으로는 韓國이라고 하겠다)은 동구의 變革과 EC의 통합이라는,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에 방심하여 虛를 찔려버렸다. 韓國經濟

는 1987年 以後 심각한 조정기를 겪고 있다. 1987年 以前 약 25年間은, 노조활동에 대한 政府의 권위주의적인 통제로 인해 韓國企業들은 노동조합과 거의 아무런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지만 1987年 以後 한국기업들은 과격한 노조와 파업 및 그의 여러가지의 심각한 노동 問題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勞動組合의 교섭력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지난 4年間 임금은 평균 15～20% 씩 상승했다. 게다가 미국달러화에 대한 한국원화의 가치가 30%나 절상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요소가 海外市場에서 韓國제품의 價格競爭力을 크게 손상시켰다. 결과적으로 1989年에 輸出은 증가하지 못했고 올해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올해는 무역수지도 약간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의 輸出業者들은 旣存海外市場에서, 특히 美國市場에서, 겨우 점위율을 유지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다.

韓國企業들의 국제경쟁력이 아주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버린 바로 그때 유럽의 變化가 들이닥친 것이다. 1992年에 나타날 새로운 유럽공동체를 예견하고 미리 많은 투자를 해 놓은 美國, 日本企業들과는 달리, 韓國企業들은 서유럽지역에 쏟을만큼 충분한 기술도 자원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韓國企業들은 國際市場에서 저임을 주로 하는 낮은 요소비용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유럽시장은 너무도 競爭力이 강해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企業이 해외투자를 행할 때, 國家에 귀속하는 저임금이라는 요인은 競爭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현재로 보아서는, 韓國企業이 서유럽에 직접투자를 하는 것은 효과적인 市場진입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은 技術이나 마케팅노우하우와 같은 企業 특유의 우위의 관점에서 볼 때 韓國企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韓國은 국제교역과 자본도입에 있어 전통적으로 美國과 日本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유럽지역으로의 市場의 다각화라는 것이 오랫동안 韓國經濟의 주요목표였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992年의 유럽공동체는 韓國經濟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우선 첫번째로,새로 탄생할 유럽공동체가 이전에 비하여 훨씬 더 보호주의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韓國人들은 유럽인들이 韓國을 '제 2의 日本'으로 보지 않을까 하여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는 韓國은 日本만큼 크지도 않고 競爭力이 강하지도 않다고 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기존의 다국적企業들이 이미 유럽으로 진출해 들어가 市場을 선점해 버리고, 韓國과 같은 후발진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강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1992年을 앞둔 EC외에, 동유럽에서도 혁명적인 變化가 발생하였다. 韓國은 동유럽國家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이 지역과 韓國이 맺은 외교관계는 1989年 2月에 와서야 최초로 이루어졌다. 이전까지는 韓國은 동유럽 國家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다.

〈표1〉과 〈표2〉에서 볼 수 있듯이, 1980年代에 韓國이 8개 동유럽國家들과 한 총 교역량이 같은 기간 韓國의 총 교역량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껏해야 0.25%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이것이 확대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다.그러나 이들 두 지역사이의 交易을 급속히 확산시키는데는 몇가지 장애요인들이 있다. 양지역간의 거리와 개발되지 않은 교통·통신망이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또한 양쪽 모두 서로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으며, 더 나아가 EC市場과 관련되어서는 양측이 競爭者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韓國을 포함한 동아시아 자본주의 經濟가 동유럽國家들에게는 좋은 모

〈표1〉 한국의 대동구 수출 (1985 ~ 1989)

(단위 : 백만달러)

지 역 별	1985	1986	1987	1988	1989	성장율(%)[a]
동 유 럽 (%)[b]	107.8 (0.4)	67.5 (0.2)	102.3 (0.2)	125.6 (0.2)	270.3 (0.4)	38.0
불 가 리 아	0.8	1.0	1.3	5.5	17.8	150.4
체코슬로바키아	3.7	7.1	8.5	23.4	79.5	131.7
동 독	23.4	21.2	37.6	28.9	20.9	4.3
헝 가 리	7.0	7.3	14.9	20.7	49.0	71.0
폴 란 드	20.4	19.0	20.9	27.1	56.1	35.0
루 마 니 아	1.6	2.1	3.1	2.8	0.3	-5.0
유고슬라비아	50.8	9.7	16.0	16.6	46.7	42.3
중 국	682.8	667.7	813.4	1,700.2	1,438.0	28.3
소 련	59.7	49.9	67.2	111.6	208.0	42.7
총 계 (%)[b]	850.3 (3.2)	785.1 (2.3)	982.7 (2.1)	1,937.4 (3.2)	1,916.3 (3.1)	28.4

주 : a = 연평균성장율 (1985 ~ 89)

b = 한국총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상 공 부

〈표 2〉 한국의 대동구 수입 (1985 ~ 1989)

(단위 : 백만달러)

지 역 별	1985	1986	1987	1988	1989	성장율(%)[a]
동 유 럽	67.5	19.6	46.2	89.3	117.3	47.5
(%)[b]	(0.3)	(0.1)	(0.1)	(0.2)	(0.2)	
불 가 리 아	3.0	2.6	2.1	3.6	11.1	61.8
체코슬로바키아	3.3	3.3	5.4	11.2	19.8	71.1
동 독	2.2	3.9	5.0	7.6	6.9	37.1
헝 가 리	3.7	2.5	7.7	11.4	19.1	72.8
폴 란 드	8.3	5.4	5.5	15.2	18.0	40.4
루 마 니 아	6.5	0.7	18.3	22.9	18.7	608.0
유고슬라비아	40.3	1.1	2.2	17.3	20.1	176.3
중 국	478.4	620.7	865.9	1,386.7	1,705.0	38.1
소 련	42.1	67.8	133.1	178.3	392.0	77.8
총 계	588.0	708.1	1,045.2	1,654.3	2,214.8	40.0
(%)[b]	(2.2)	(2.4)	(2.7)	(3.4)	(3.9)	

주 : a = 연평균성장율 (1985 ~ 89)

b = 한국총수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 상 공 부

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첫째, 韓國의 급속하고도 성공적인 産業化는 이들 國家들에게는 아주 흥미있는 모델이다. 둘째, 韓國은 동유럽國家들에게 적합한 '적정(appropriate)' 제품과 技術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日本企業들은 현금부족을 겪고 있는 社會主義國家들에게는 너무 첨단技術이고 값비싼 제품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이들 國家들은 韓國이 최근 수년간 정상수지 흑자를 누렸으므로 資本의 供給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넷째, 몇몇 동유럽國家들은 經濟關係를 EC로부터 다각화시키고 싶어하고 동아시아 國家들이 좋은 파트너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동아시아와 동유럽은 예전에 經濟關係를 거의 맺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공통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양 지역이 가치있는 經濟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들이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측에는 서로를 유혹하는 요소가 많은 것이 확실하다.

직접투자에 대한 記錄은 더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두 지역간의 經濟關係가 이루어진 것이 얼마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韓國企業들의 소수의 직접투자는 헝가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기타 동유럽國家에 투자한 것은 없다. 헝가리에서 성공적으로 착수된 프로젝트 중의 하나는 부다페스트 근교에 있는 三星電子의 칼라TV 工場이다. 부다페스트에서 70 *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이 工場을 방문하는 상당히 감명을 받았다. 비록 그 工場이 종업원 100명에 불가한 단순조립工場이지만, 이것은 동유럽國家에 투자할 때 나타나는 두가지의 커다란 불확실성을 극복해낸 좋은 예이다. 첫번째 불확실성이란 作業者들의 生産性에 관한 것이다. 헝가리 作業者들은 비교적 높은 敎育수준을 지니고 있으며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면 높은 生産性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

진다. 두번째 불확실성은 최종제품에 대한 市場의 존재여부이다. 모든 동유럽國家들이 자국시장은 비교적 협소하므로 많은 프로젝트에 있어 주변國家에로의 輸出이 필요하다. 헝가리에 있는 三星 관리자들은 生産된 TV 중 절반 가량을 주변 동유럽國家에 성공적으로 輸出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아직 단언하기는 너무 이르지만, 三星電子 헝가리 工場은 이러한 두 요소에 대한 현지의 여건이 만족스럽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 증거는 제한되어 있으나, 동유럽國家에 대한 韓國의 직접투자의 앞날에 대해 필자는 낙관적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첫째 이유는, 이들 國家에 있어 政治 및 經濟改革은 이미 물러설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는 단지 2年 전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지역의 政治的 위험은 많이 줄어들었다. 두번째는, 역설적으로 느껴질지는 모르나 이들 國家의 어려운 經濟狀況 자체가 韓國의 企業에게는 이 지역에 투자할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재정적자와 國家經濟의 사유화 추진 속에서 공기업 인수를 환영하고 있다. 外國企業들은 기존 헝가리 企業體를 비교적 싼 價格에 매수할 수 있다. 이러한 기회는 몇년 후에는 없어질 것이다. 게다가 外國企業들은 동유럽 국경내에 工場을 설립함으로써 市場을 선점할 수도 있다. 세번째는 이들 동유럽國家들이 1990年代에 EC와 가까와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몇몇 國家들은 금세기 말까지 EC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유럽國家에 발판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장기적으로 보아 비용을 적게 들이고 유리한 위치에서 EC市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韓國大企業들이 직접투자활동을 더 적극

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韓國企業에 있어 輸出보다는 직접투자가 더 매력적인 진입전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동유럽國家들 스스로도 技術, 資本, 경영노우하우 및 마케팅능력 등 經濟活動을 위한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투자에 더 많은 關心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동아시아와 동유럽은 과거의 일천한 歷史的 관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될 것이다. 동유럽과의 關係에 있어 동아시아가 서유럽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동유럽에 있어 매력적인 제2, 제3의 交易 및 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결국, 世界經濟는 매일매일 좁아지고 있다.

<동구변혁이 한국경제체제에 주는 의미>

동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變化는 한반도와 韓國의 통일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을 제기케 한다. 첫째, 國家의 經濟體制가 어떤 일반적인 형태로 수렴하고 있는가? 둘째, 經濟體制의 우월성이라는 觀點에서 독일통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南韓과 北韓經濟가 결국 통합된다면 양측은 어떤 經濟體制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들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이다.

소련을 포함한 대부분의 社會主義 國家들은 이제 市場經濟는 資本主義體制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다. 社會主義體制도 '社會主義'라는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서 市場메카니즘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市場메카니즘을 도입한 社會主義 體制가 과연 '社會主義'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그러나, 적어도 資源의 배분이라는 觀點에서는 市場메카니즘이 중앙계획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증명된 것이 확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世界的으로 國家經濟體制는 하나의 資源분배메카니즘, 즉, 價格에 기반을 둔 市場經濟로 수렴해 가고 있다.

복지體制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社會主義 國家들이 자신의 복지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현재로 보아서는, 이들 國家들은 복지체제는 그대로 둔 채로 資源배분과 生産性있는 자산의 사유화에 대부분의 觀心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미 자리잡고 있는 복지體制를 變化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있다. 社會主義 國家들은 실업보장 수준은 어느정도 내려야 할 지 모르나, 건강, 敎育, 주택 및 다른 社會福祉問題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많은 서유럽國家들의 福祉수준이 社會主義 國家들에 비해 많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상적인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서독과 스웨덴은 상당히 社會主義的이고, 유럽의 양측은 經濟體制의 수렴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福祉體制에 있어 동아시아 國家들은 유럽국가들과 상당히 다르다. 동아시아國家들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福祉에의 요구를 충족시킴에 있어 가족에게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다. 자녀들의 중등 및 고등敎育은 대부분 가족들이 맡고 있다. 나이들고 능력없는 사람들은 家族이 돌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國家들이 앞으로 정부에 의한 福祉로 옮겨갈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남한에는 그러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南·北韓은 福祉體制가 서로 상당히 다르다. 北韓은 政府에 의한 福祉

體制에 의존하고 있으며 南韓은 주로 家族에 의한 福祉體制에 의존하고 있다. 앞으로 두 經濟가 통합된다면 福祉體制를 조화시키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 北韓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정부福祉體制를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南韓은 經濟통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政府에 의한 福祉體制를 강화시켜야 하는가? 독일의 경우가 좋은 경험일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독과 동독은 社會福祉體制라는 觀點에서 서로가 유사한 반면, 南韓과 北韓은 福祉體制가 양 극단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國家經濟體制가 소유구조의 측면에서도 수렴한다고 할 수 있으나, 資源배분체제에 비하여 뚜렷하지 않고 결론지을 수도 없다. 많은 동유럽國家들이 앞을 다투어 經濟를 사유화시키고 있고 소련도 사유화할 의향을 비추었다. 그러나 企業의 소유권을 사유화하는 것이 얼마나 성공할른지는 확실치 않다. 첫째, 工企業을 구입할 만큼 민간資本이 충분하지 못하다. 둘째, 企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좋은 經營者도 부족하다. 資本主義 體制에서 조차도 사유화의 정도는 개별 國家에 따라 다른 형편이다.

소유구조에 있어서도 南韓과 北韓은 상당히 다르다. 北韓은 國家소유제도이고 南韓은 개인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특히 재벌이라고 불리는 소수의 家族에게 소유권이 집중되어 있다. 현재 韓國에서는, 소수 家族에 의한 企業소유권의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經濟力 집중'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韓國의 資本主義 體制는 건전한 것은 아니라 통일된 韓國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양 소유體制가 어떻게 조화를 이이루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問題이다.

그렇다면, 體制의 우월성이라는 觀點에서는 독일통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서독으로 하여금 經濟的으로 동독보다 우세하게 되도록 도운 것

은 市場메카니즘인가? 서독에서 企業家들의 정열을 돋우고 技術革新을 도모하도록 한것은 개인소유體制인가? 서독의 福祉體制는 통합에 어떻게 이바지했는가? 서독이 동독을 앞지른 주요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이 한반도에 시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질문을 했다. 그만큼 現在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變化와 독일의 통일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야 말 충격적인 사건인 것이다. 北韓이 얼마나 빨리 變化하고 개방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北韓의 예기치 못한 급속한 變化에 준비를 해야만 한다. 물론 北韓이 동유럽처럼 變化를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보수적인 주장이 있다. 그러나 지난 2年間 동구를 휩쓸고 있는 變化에 대해 정확히 예측했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南韓은 北韓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나리오에 대해 준비를 해야만 한다. 현재상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시나리오가 옳을지도 모르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거의 없다. 신중한 사람이라면 최악의 경우에 對備할 것이다.

北韓의 위협이라는 것이 지난 수세기 동안 南韓 政府의 독재적인 政策에 대한 구실로 사용되어 왔었다. 南韓은 統一問題에 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오지 않았다. 特히 최근까지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南北統一이 실현되지 않으리라고 믿어왔다. 統一에 관한 모든 토론은 政府의 소규모 집단내에서나, 또는 社會科學분야의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제한되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統一問題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어 소수의 정치인이나 學者에 의해서만 다루어져서는 안된다. 실제로 統一이 이루어진다면, 政治的, 軍事的 問題 뿐만 아니라 經濟的, 社

會的, 그리고 문화적 問題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할 것이다. 언제라도 무대에 나타날 準備를 하며 주변에서 배회하는 동물을 보듯, 그러한 시각으로 統一問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東獨의 經濟體制 轉換上의 問題点

Horst Brezinski
(파다본대 교수)

1. 서 론

동서독의 두 개의 經濟·社會體系를 결합시키기 위해 하나의 금융·경제 통합체를 만들기로 한 決定은 정반대의 경제끼리의 유례가 없는 최대의 합병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과거동안의 두 經濟의 成果를 보면, 거의 모든 經濟的 問題에 대하여 시장(市場)유형의 경제가 우월하다는 것이 立證되고 있다. 아예 始初부터 그 체계에서 숨어버린 동독인구들은 그런 결핍을 確實히 認識하게 되었고, 성장·인플레·국제수지와 외래의 均衡·環境파괴나 인구대다수를 위한 社會保障에의 최소한의 요구등과 같은 根本的인 경제적 이슈들에 適切히 동독경제가 對處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그 체계가 民主的 市場經濟로 전환하게끔 된 것이다. 이러한 變化를 수행하기 위해서 大多數의 동독인들은 서독의 社會的 市場經濟制度 모델을 經濟的·歷史的·文化的 이유에서 선택했다. 그러나 以前의 두개의 독일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經濟的 開發이나 制度의 수립,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理念的·政治的·經濟的 體制(민주적인 사회시장경제 對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리고 양 국민의 정신상태등을 堪案할 때, 사회주의 경제를 민주적인 市場類型經濟로 轉換시킬 수 있는 過程을 設計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 과정을 適切하게 설명할 수 있는 理論的 根據란 부재한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계하고 遂行하는데 1948년의 서독의 通貨改革의 經驗

이 조금은 도움이 된다. 當時 서독경제의 조업수준은 매우 낮았고,다시 일으켜져야 했으며, 최소한 經濟體制가 재건되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經濟體制뿐만 아니라 經濟가 社會主義 計劃經濟 40年의 기형적 結果를 조정하고 치유할 수 있을 完全한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동독인들이 市場經濟의 精神과 그 작동원리에 대해 再敎育되고 친숙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동독인들의 期待는 1948년에 서독인들이 바라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요즈음의 동독인들은 戰後의 서독인들보다 희생을 감수할 준비도 덜 되어있고, 뿐만아니라 서독의 經濟的 福祉를 단숨에 성취하길 원하는 것이다. 89～90年은 동독을 떠나는 人的資源의 流出로 特徵지워진다.- 40년대 後盤에 서독은 거대한 人口流入으로 곤란했었는데 반해서 마지막으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社會的 市場經濟構造는 西獨人 自身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適當한 槪念을 선택했다는 强한 確信과 信念이 있었으며, 이러한 槪念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現 狀況에서 동독경제의 回復을 위해 수 많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일(90년 7월 1일)이 충격과 같은 형태의 독일연방공화국의 市場經濟의 유입을 위해 정해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以前의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에 市場經濟를 導入하기 위한 독일의 경제·통화·사회·환경 통합조약에 의거하여 그 목적과 수단부터 始作하기로 한다. 言及된 條約과 서독이 추구하는 目的등을 參考로 하여 독일경제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에로 轉換하고 統合하는데 수반되는 경제정책문제들이 소개되고 討論되어질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즉 왜 安定된 동독의 서독에 대한 換率이나 人口大部分의 信念과 소망에 따른 民主的 市場經濟의 確立이 가능했을 텐데도

좀더 느린 속도의 전환대신에 충격요법을 適用할 필요가 있었는가 등이다.

2. 東西獨間의 경제·통화·사회적 통합에 관한 조약의 주요 항목들

1990년 7월1일자로 效力을 발휘하는 조약이 독일통합의 기초를 確立하는데 초석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는 동독(독일민주공화국)으로부터의 人口의 大移動을 막기 위하여 서독의 현수준만큼 동독의 經濟的 福祉를 창출해 내고자 의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약은 서독 경제의 根幹을 형성하는 것과 同一한 體系的 틀을 확립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추구되어야 할 經濟的 目標로서 GNP의 充分하고 持續的인 成長, 物價安定, 높은 고용수준과 국제수지의 호전등이 있다. 동시에 社會的이고 진화적인 측면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그 結果로 첫번째 방법이 새로운 所有權의 창출이었다. 사회주의적인 이전의 소유권 제도가 차츰 廢止되고 企業은 私有化되고 개인은 투자결정이나 그들이 원하는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서나 자유롭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契約의 權利가 주어지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국영기업의 私有化에 책임을 질 信託(會社)이 設立되어야 하며, 반면에 대규모의 産業結合은 작은 회사들로 나누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農業經營化도 廢止되어야 한다. 농업조합에 강제로 가입된 사람들은 조합에 남을 것인가, 독립적인 영농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구식 조합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부여받아야 한다. 1949년에 사유회사나 사유지를 갖고 있다 나중

에 몰수당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私的所有權과 私有企業은 물론 실패나 파산의 可能性을 包含하는 所有權에 對한 責任을 의미한다. 競爭에 대한 규제도 통과되어야 하며, 90년 5月末부터 체제내의 競爭을 保護하는 기관이 있어 왔다.

法的인 틀외에도 條約은 통화통합에 집중되어 있다. 90년 7월 1일부터 서독의 연방준비은행이 全독일의 통화제도의 中央銀行이 된다. 이전의 동독 중앙은행은 통화기능을 상실하고 동독 마르크는 폐기된다. 동독인들은 그들의 저축과 현금의 일정량을 1 : 1의 比率로 환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같은 比率이 임금, 봉급, 집세, 연금등에도 적용된다. 社債는 2 : 1로 환산되고, 은행은 收支계상을 위해 보상청구를 보장받게 되며, 국가는 부채를 지급해야 한다. 그 결과로 동독은 支拂의 일반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태환통화를 받게 된다. 동시에 2段階의 金融制도가 確立되어 국가/국제 사영은행이 동독내에서 營業을 하게 된다.

經濟統合은 이전 동독의 중앙고정식 價格-賃金 制度의 폐지를 필요로 한다. 기본적인 소비재와 용역의 가격은, 過去에 많은 국고보조항목이었으므로, 本質的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그 결과로 실질소득은 줄게 된다. 개인의 實質所得의 감소로 인한 곤경을 벗어나기 위해 90년말까지 임대는 동결될 것이다. 1대1의 교환비율을 基盤으로 할 때, 90년 상반기의 동독의 賃金은 서독의 임금의 약 1/3에 달한다. 自由貿易組合과 勤勞者協會가 回復되면 국가의 간섭없이 임금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동독의 産業構造는 중앙계획으로 왜곡되어 왔고 80년대 前盤期동안 投資部門의 成長率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동독경제는 낙후되고 불충분한 기계·장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가 CMEA에로의 통합과 국

제분업에서의 非能率的인 參與로 더욱 惡化되었다. 그래서 동독정부는 동독경제의 投資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中小規模의 企業에 投資 보너스와 신용대부가 주어져 8,000 내지 9,000 개의 새로운 企業이 창립되도록 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150,000 에서 200,000 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도 자유화될 것이다. 독일내의 교역에 관한 特別規制도 폐지되어 동독은 유럽공동체와 西歐로 통합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경제협력위원회(CMEA)나 그 회원들과의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CMEA와 그 회원들과 체결된 조약도 존중될 것이다. 만약 經濟·通貨·統合의 利益과 一致하고 그것이 市場關係에 기반을 둔 것이면 CMEA과의 앞으로의 關係가 强化될 것이다. 經濟的 安定과 再建을 위해서 동독은 輸入關稅를 국내 산업보호의 명목으로 導入했다. CMEA의 회원이라는 것은 동독경제에 問題를 일으킨다. 90년 7월 1일부터 동독의 農業政策은 유럽공동체에 準하게 되어, 농산물 가격의 상당한 減少를 감수하게 되어, 결국 대부분의 農業企業은 수익에 커다란 損害를 입게 된다.

經濟統合도 동독이 서독의 標準과 환경정책을 적용하게 되는 환경보호에의 協約을 包含한다.

경제통합에 관한 條約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전임동독 社會主義 指導層의 성명과는 상반되게 동독사회주의체제의 성과는 서독에 비해 훨씬 열세였다. 價格自由化는 곧 實質所得의 감소로 이어지므로 연금은 최소한 495 DM까지 인상되어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는 年金制度가 더욱 다양해져야만 한다. 적용된 서독의 規制에 따라 연금자금의 청산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의 融資가 인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失業者

들을 지원하기 위한 保險制度도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독경제의 構造的인 變化는 90년 6월의 150,000이라는 失業人口數를 91년 初까지 적어도 140만명까지 증가시킬 것이다. 실업특혜의 자금이 造成되어야 하고, 보다 重要한 것은 실업자들이 새로운 職場을 찾을 수 있도록 고급훈련이나 새로운 직업재훈련을 提供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市場經濟라는 개념의 도입은 건강보험이나 보건제도가 상당히 向上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동독 경제의 轉換은 매우 값비싼 事業이 될 것이다. 社會下部構造에 對한 투자, 새로운 社會的 制度에 대한 잠정적인 融資, 環境問題 해결 등은 서독이 提供하여야 한다. 1994년까지 1,150억 마르크가 독일통합을 위해 지금까지 指定된 금액이다. 자금은 주로 資本市場에서 조달될 것이다. 게다가 동독산업사유화기금은 그 수익을 동독기업재건에 使用해야 한다. 결국, 세금이 必要한 金額을 제공해 줄 것이다.-동독은 서독의 부가가치 稅制를 1990년 7월 1일에 導入하게 되고, 과도적인 소득세 기간이후에 1991년 1월1일부터는 완전한 서독의 세제를 導入할 것이다. 콜롱, 즉 독일경제연구소의 각본은 費用의 삭감과 GNP의 증가는 稅收를 증가시켜 서독예산에 935억 DM의 잉여를, 동독에는 130억 DM의 잉여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너무 낙관적인 예측들은 獨逸統合을 위한 資金造成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론을 낳는다.

실제 독일통합의 댓가가 어떻게 판명이 나든, 언급된 조약을 실행하는 과정에 包含되는 問題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3. 東獨 經濟轉換의 문제점

東獨에 社會的 市場經濟의 體系的 構造를 導入할 때 問題가 發生한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호연관된 領域들이 있다.

① 私的所有의 재건

② 經濟的 競爭과 市場價格의 導入

③ 새로운 통화·회계 제도-개인적인 投資를 위한 體系를 造成하고 適合한 하부구조를 設立할 수 있는 資金調達方法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러한 측면은 經濟的 構造에 영향을 미친다.

④ 下部構造와 환경

⑤ 勞動時間과 社會的 問題

⑥ 국제적 분업

⑦ 東西間의 經濟政策과 그 관계의 방향

(1) 진정한 私的所有權의 부활

資源과 技術的 발전의 能率的인 할당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가 광범위한 사적소유권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사적소유권은 그것이 다른 사람의 自由를 침해하거나, 그러한 사적소유권이 정지되거나 통제되거나 非效率的인 자원할당으로 이어지거나 하기때문에 의도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받을 수 없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정부는 1949년 독일민주공화국(GDR)의 창설이후 몰수된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개인소유의 저택이나 土地는 물론 國營化된 企業이나 集團化된 농장등도 包含한다. 뿐만아니라 1949년 이전에 사회화된 기업이나 사회주의 基金으로 造成된 기업도 私有化되어야 한다. 동독시민에 의해 取得

된 부동산이나, 동독을 떠난 所有主로부터 1949년 이후 장기임대된 土地의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善意로 행동했던 동독인들이 불안과 적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問題는 以前의 所有主가 다른 土地나 주택으로 변상받거나 임대료를 줌으로써 解決될 수도 있다. 농업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더욱 힘들다. 많은 경우 부동산대장에 올라있는 土地所有主들이 더 이상 營農에 관심이 없다. 그들이 營農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가? 아마도 사적인 營農은 부활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土地所有主들이 必要한 技術을 所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종종 그들은 농장을 運營할 資質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농작물 生産이나 가축사육, 기계사용, 수선 등에 關한 知識이 거의 없다. 30세 以上을 對象으로 하는 社會主義 직업교육은 영농에 대한 균형있는 教育을 提供하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농장을 運營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건물·장비등에 착수자본이 必要하다. 종종 土養은 공해로 오염되어 있고 또한 비료와 살충제를 廣範圍하게 사용하는 사회주의 農業施策으로 오염되어 있기도 하다. 새로운 농장에서 시장성있는 生産物을 만들어 내기까지에는 最少한 2년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國有化된 産業에 비추어 基金 代理機關이 設立되었다. 그 기능은 약 8,000개의 國有企業을 私有化시키는 것이다. 大部分의 기업들이 낙후된 기계, 부적절한 技術的 知識, 그리고 시장생산물의 낙후된 구조등으로 고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機能은 매우 어려울 것임에 틀림없다. 맥킨지 자문회사의 독일사장의 推定에 따르면 이 企業들의 단지 5%정도 만이 스스로 自生할 能力을 갖고 있고, 나머지 30%정도는 協同이나 技術/經營의 移轉이라는 형태의 지원하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또 다른 30

%는 새로운 投資와 잠정적인 보조금이 있어야 살아남을 것이고 35%는 아예 생존할 가망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推定이 너무 비관적일지는 모르나 기금 代理機關이 청산인과 채권자의 役割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이사장은 西歐의 經營人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構成員이 주로 전에 동독 재무부의 피고용인이었던 기금대리기관의 피고용인들은 그들의 임무를 遂行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提起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과연 시장경제의 精神에 입각해서 일할 수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가? 또한 주행정부가 個人事業의 허가를 내주려는가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90년 6월 80,000명이 새로운 사업을 始作하려고 지원했으나 오직 3,000명만 許可를 받았던 것이다. 所有權의 새로운 構造確立은 市場經濟의 정신이 이미 內面化된 행정기구를 요한다. 이는 또한 동독인들이 사유기업을 시작할 精神狀態-危險을 감수하고 혁신적인-를 必要로 한다. 이전의 동독의 사유기업들은 다소 독점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이는 행정부가 시장진입을 嚴格하게 規制하였고 시장상황의 결핍으로 특징지워졌기 때문이었다.

(2) 競爭과 市場價格

固定된 價格制度 代身에 동독정부는 변동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농산품만이 아니라 사치소비재의 價格이 떨어지는데 반해, 消費財에 주어진 보조금으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심한 價格引上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人口의 實質所得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임금과 임대료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서독의 추정에 따르면 實質所得의 20 내지 25%의 減小가 되는 것이다. 기업의 立場에서도 줄어드는 수익으로 狀況이 악화될 것이다.

농업을 감안하면 사태는 더욱 나쁜데, 수익의 적어도 50%의 감소는 生産性의 增大나 원가의 減小로도 쉽게 보상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莫大한 지원금이 필요하다. 110억 DM의 지원금이 必要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産業企業이나 서비스부문의 기업들은 만약 독점의 狀況이라면 그러한 價格을 쉽게 메꾸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에 관한 法律이 施行되고 경쟁을 統制하기 위한 기관이 必要한 것이다. 불행하게도 이 機關이 5월말에 設立되었다. 이 때는 이미 많은 서독기업이 동독기업을 引受한 준비를 마친 때였다. 경쟁의 통제를 위한 동독기관은 서독의 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합병에 대한 規制는 남겨두었다. 서독에서는 기업이 市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합병이 許容되지 않는다. 동독의 이러한 점에 대한 規制는 매우 약하다. 서독의 경쟁통제기관의 長은 이러한 "부드러운" 위치를 기업들, 특히 서독투자가들이 동독시장에 進入하는데 좀 더 자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러한 決定이 궁극적으로 肯定的인 영향을 줄지는 의심스럽다. 이는 동독경제의 獨占的 構造를 維持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큰 企業結合의 經營者들은 그들의 基金을 쪼개는데 별로 흥미가 없다. 이는 분명히 權力의 상실과 가장 약한 企業의 근로자들의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실질적인 경쟁을 확립시키는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인플레나 生産性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3) 화폐와 재정제도

서독의 마르크貨를 동독에 導入한 것은 명확한 결과를 제공하였다. 서독

의 화폐제도는 동독에서도 有效하며 서독의 聯邦銀行은 동독의 화폐제도를 設立할 責任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貨幣上의 問題點들은 貨幣의 統合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 하다. 이러한 變化의 과정에 드는 費用은 단지 신용대부에 대해서 資金을 조달받는다. 약 1,600 억마르크화 신용대부에 依하여 추가지불하는 것이 1994 년까지 要請될 것이다. 獨逸經濟硏究所의 計算에 의하면, 1991 년부터 2000 년사이에 서독의 豫算에서 885 억 마르크화 정도의 추가적인 支出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다른 支出을 줄이고 1,815억 마르크화 정도를 추가적인 세금수입으로 거두어들일 것이다. 따라서 서독은 재정흑자를 낼 것이다. 지원시설에 對한 동독의 支出은 1991 년에서 2000년 사이의 기간동안 4,245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4,375 억마르크의 재정수입에 의해 균형을 이룰 것이다. 結果的으로 여기서도 130 억 마르크정도의 黑字가 예상된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동독이 1998 년 以後가 되어서야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서독의 黑字도 서베를린에 대한 국방비나 보조금과 같은 以前의 支出을 縮小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에 支拂하였던 보조금이나 다른 支出費用을 삭감할 수 있는지의 可能性을 考慮해 본다면 몇가지 의구심이 있다. 서독은 1980 년에 들어와 이 분야에서 몇번의 불만족스러운 經驗을 한 바가 있다. 더 나아가서 볼 때, 동독이 어느 정도까지 增大하는 수입을 제공해 줄지를 아무도 豫測하지 못한다. 동독의 위탁기관이 變革을 하는 과정에서 社會에 企業을 매각하여 얼마간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의심스럽다. 保險業에서 독점을 維持하며, 51 %의 占有率을 갖고있는 보험회사인 Allianz사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서방측 合作社인 Deutsche Versicherungs-AG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反面에, 委託機關이 Deutsche Versicherungs-AG의 이전의 經濟活動에서 비롯된 어떠한 損失도 引受할 것을 保證하였다. 이 會社가 동독에서 가장 커다란 이익을 내는 會社中의 하나임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열등한 去來는 정말로 놀랄만한 것이다.

서독의 세제제도를 引受하는 것은 두 부분에서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은 동독 세무서의 고용자들의 側面에서 많은 노력을 필요하게 한다. 그들은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이 점은 또한 적어도 1,700여명의 회계결산 전문가들에게도 適用된다. 결과적으로, 세제에 대한 統制는 다른 國家들에 비해 弱化될 것이다. 동독은 과거의 세입으로 손해를 입게될 것이다. 西方의 個人投資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세제제도는 多樣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것들중 部分的으로 이미 言及되고 있는 것은 投資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감가상각율을 보다 높이는 그런 種類의 것들이다. 그러므로, GN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比率은 1991년에는 서독의 23%에 비해 보다 낮은 15%에 불과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變革의 과정에 드는 費用이 당초 생각보다 더 높아질 것이고 資金을 調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例를 들면, 稅金을 높임으로 해서-을 찾게끔 하는 結果를 야기할 것이다.

(4) 지원시설과 환경

西方의 投資家들은 지금까지도 동독에 대해 投資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理由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부분적으로는 土地에 關한 재산권이 不充分하게 設定되어 있고, 給料에 대한 미래의 책정이 不確實하고, 미래에 있어 環境의 파괴여부의 불확실성, 그리고 支援施設의 부족과

같은 연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특히 電氣通信設備는 매우 不足하며, 그것도 형편없는 狀態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必要한 程度만을 갖추고 있는 교통, 숙박시설 상황, 그리고 電氣施設의 供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서독은 必要한 支援施設을 供給하기 위해서 수천억마르크를 必要로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쉽게 解決할 수 있는 재정상의 問題點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동안에 效率的으로 財務的인 수단을 使用해야하는 동독 경제의 짜임새있는 能力에 대한 커다란 의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이 서독과 같은 類似한 支援施設을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릴 것이다. 처음 2～3년간 서방의 投資家들은 서유럽과는 다른 각도에서 동독을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支援施設의 問題에 대한 해결책은 환경적인 문제의 해결과 연계가 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서독의 環境과 유사한 수준으로 동독을 回復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投資額은 독일 마르크화로 4000억에서 5000억마르크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올바른 方法으로 서독으로부터 輸入한 有害한 쓰레기들을 蓄積하지 못한 結果로 일어나는 쓰레기에 의한 오염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環境을 파괴했고 오염에 대한 일상 생활속에서 느끼는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온 일부 동독의 企業들은 점차 사라질 것임이 판명되고 있는 狀態이다. 이것은 다시 追加的인 問題를 불러일으키는 실업의 상승을 낳을 것이다.

(5) 노동시장과 사회적인 문제

미래의 失業에 관한 推定値는 백만명에서 삼백만명 사이에서 變動하고

있다. 동독경제의 構造的인 變化와 동독경제가 경쟁능력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동독에 있어서의 失業은 주로 구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임금의 急速한 上昇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듯 하다. 金融部門에서의 최근의 賃金上昇과 동베를린에서의 청소부원들의 파업은 이러한 불유쾌한 狀況의 전개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독의 경제부 장관은 10%以上의 失業率(약 85만명)이 정치적으로 만족스럽지 않다고 발표했다. 실업을 대비한 保險制度가 이미 運營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 대한 최악의 結果는 피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結局에 가서는 構造的인 失業을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안은 잠재적인 실업자들을 일시적 勞動者가 되게끔 하고, 그들로 하여금 技術을 向上시키거나 다른 職業을 훈련받게끔 하는 과정에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명쾌한 공업정책이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發生한다. 어떠한 職業을 재훈련시킬 것인가를 누가 직업훈련을 다시 시키고 향상시킬 수가 있는가? 현재 상황으로는 동독에는 수준있는 教授들과 지도자들이 부족하다. 게다가 동독에서는 적어도 이백만명 정도를 훈련시킬 장소에 관한 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 서독의 동태적인 勞動市場政策에 관한 제도를 채택한다고 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독의 社會制度를 인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노년보험, 사회보장제도 등과 같은 분야에서 다양한 질적·양적인 向上을 이룬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 부문에서 얼마간의 축소가 또한 있을 것인데, 예를들면, 18세 以下의 어린이를 가진 여성들을 위해 달마다 가정에서 며칠 일하도록 해주는 보모의 날을 縮小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마도 企業들은 장래에 이러한

서비스 活動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을 것이다.

(6) 國際間의 經濟關係

동독에 있어 海外貿易의 獨占의 종말과, 동구의 Cocom (對공산권 수출통제 조정위원회) 라인에서 西歐로의 移動뿐만 아니라 貨幣制度의 轉換可能性은 추가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동독은 유럽공동체 (EC) 의 회원국이 될 것이고 이 시장에의 接近을 開放할 것이며, 반대로 EC 회원국들에게 또한 진실한 모습을 숨기려 할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農業에 있어서 커다란 問題를 일으킬 것이며, 또한 동독의 工業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동독 政府는 自國의 産業을 保護하기 위하여 11 %의 수입관세를 導入하였다. 이것은 다른 서방의 協力國들과의 무역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을 惹起할 것이고, 經濟를 신속하게 復舊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더 나아가 잘못된 위치로 이끌어 갈 것이다. CMEA에 관해서는 동독이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제도적인 연결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동독은 協力國, 특히, 소련과 長期的인 契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한편에서는 의무를 保證할 수 있을 것이며, 다른 面에서는 이것으로 因하여 非能率的이며 競爭 能力이 없는 생산을 멈추게 하지 않을 것이다. 소련에 있어서의 현재의 經濟的인 危機를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커다란 利得을 약속해 주지 못한다. 동독 경제의 構造的인 變化의 과정은 점차 그 속도가 늦춰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동독 정부의 現在 狀況과 政策은 經濟를 變革하는데 그리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듯 하다. 예를 들어, 소련이 동독으로부터 올해 거대한 양의 우라늄을 수입하기로 한 계약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10,000여개의 일자리를 잃어

버리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동독은 貿易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소련이나 그밖의 다른 社會主義 國家와의 협상에서 보다 强力한 힘을 發揮해야 한다.

(7) 經濟政策의 目的의 충돌과 東·西獨의 반발

만약 서독과 동독정부가, 동독이 서독과 差異가 나지 않을 정도로 經濟的인 發展을 이룩하게끔 한다면 통일의 과정은 成功的일 것이다. 結果的으로, 동독에서의 經濟成長은 서독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하게도 市場經濟는 革新과 自由로운 力動力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할 수 있는 機會가 있다. 노동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適切한" 賃金을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勞動者들의 作業動機는 上昇한다. 더 나아가, 중앙계획이라는 非效率的인 構造는 사라질 것이다. 매점매석은 점차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市場이 명백하게 세워질 것이다. 商品의 供給은 向上될 것이다. 이러한 變化의 충격은 생산성의 向上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기계류에 대한 새로운 投資는 상당히 增加할 것인데, 왜냐하면 동독이 여러 部門에서 15년 내지 20년정도의 技術的인 後進性을 극복 내지 縮小시킬 수 있는 技術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勞動의 生産性과 成長에 있어 실제 增加量은 노동자 자신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즉 노동의 강도와 질을 向上시키려는 그들의 意志와 自身들의 人間으로서의 자본을 增加시키는 것이 바로 增加를 이끈다. 그런데, 노동윤리에 있어 한가지 變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특히 공무수행을 위해 고용된 百萬名의 사람들에게 言及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세의 增加는 初期에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높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인플레이션이 增加하리라 豫想되는데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1. 價格의 自由化

2. 獨占을 분해하는데 나타나는 問題

3. 初期에 나타나는 몇가지 部門에서의 수요의 集中(건설, 소비재 상품, 교통시설)

실업은 주로 構造的으로 決定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構造的인 政策에 대한 槪念을 明確히 함으로써 재빨리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점은 아직도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 만약 이러한 槪念이 부족하다면 勞動者들을 재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問題들을 야기할 것이다. 結果的으로 실업은 比較的 높은 水準에서 정체될 것이다.

소득과 富의 分配는 擴散되어 갈 것이다. 이점은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肯定的인 영향을 주는데, 그 理由는 個個人의 成果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市場의 체제는 처음부터 完全히 確立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勞動을 하지 않은 所得으로부터 利益을 얻기가 容易하다. 所得과 富의 차별화는 결국 市場에서의 支配的인 위치를 창조한다. 이것은 더 나아가 社會的인 시기심이 저항을 불러일으키게끔 한다. 이것에 관한 또다른 面이 있다면 그것은 所得水準의 差異로 인하여 국경지역이나 베를린 地域에서, 이곳은 동독이 수입을 增加시키기 위하여 서독에 대해 비밀 노동력을 提供하고자 하는 場所이다. 다시말해 그림자 經濟活動이 增加한다는 점이다.

재정수지의 均衡에 대해 고려해 보면 과거 數年間의 서독의 엄청난 黑字로 인해 아무런 問題가 없는 듯 하다.

동독의 經濟發展에 대한 肯定的인 관점도 있음을 시인해야 할지도 모르

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장미빛을 띠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서독경제가 반발을 하는 것은 비록 예상하는 것 만큼은 아닐지라도, 肯定的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동독경제와 사회가 完璧한 재건을 이룰 수가 있다면, 이것조차 진실을 숨길 것이다.

EC會員國들의 반발은 肯定的으로 여겨지는데, 왜냐하면 서독경제는 成長하고 있고 이것은 結局 輸出의 增加로 인한 이들 國家의 成長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동독에서의 반발은 短期的으로 그리 긍정적인 것이 못되는데, 왜냐하면 동독은 점점 더 市場構造를 갖는 經濟처럼 활동할 것이고, 그러므로, 외국과의 교역거래액은 축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變革이라는 問題를 안고 있는 동독의 친숙함(familiarity)과 과거의 制度的인 접촉은 이러한 國家들과의 海外 經濟關係를 자극하고 증가시키는데 굳은 기반을 이룰 것이다.

4. 결 론

동독의 變革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變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大部分이 이러한 變革過程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급변함은 동독의 경제와 사회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략을 선택한 것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提起되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現在의 戰略을 정당화할 수 있는 理由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① 以前의 동독의 社會主義 體制는 동독의 體制를 민주적 시장경제로 매우 급속하게 變化시킬 수가 없다. 경영자, 관료, 그리고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가들 모두가 經驗이 부족하다. 관료들과 정치가들은 이러한 變革의 과정을 빠르게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속도를 늦추려 하고, 모순된 方法들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발전을 가로막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時間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變革을 이루는데 드는 費用은 더욱 많이 들 것이다. 헝가리와 같은 국가가 그 充分한 본보기가 된다.

② 이와 같은 충격적인 요법을 채택함으로써 동독의 經濟와 社會에 서방의 투자가들을 이끌어오는데 必須的인 안정된 체제가 구축된다. 더 나아가, 이는 과거의 동독이 가졌던 사회보장제도보다 더 좋은 제도를 갖게 해 준다. 따라서, 社會的인 不安定과 不滿을 막을 수가 있다.

③ 서독은 동독의 成功的인 變革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서독인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서독은 變革의 결과 이익이나 信用을 얻을 뿐만 아니라 失敗에 대한 위험도 안고 있는 것이다.

④ 變革의 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變革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國際政治 관계로 인해 이러한 과정이 방해를 받을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⑤ 이러한 變革의 과정을 빠른 시일내에 成功的으로 완수하는 것은 동유럽의 經濟와 社會를 재건하는데 肯定的인 반사작용을 갖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變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短期的이며 否定的인 결과를 包含하는 모든 부분들을 보충해 줄 것이다. Mancur Olson의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이러한 變革을 하는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은 制度的 병폐를 克服하고 비교적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는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가는 역사적인 變換을 가능케 하며, 이것은 또한 분포상의 問題뿐만 아니라 사회생

태학적인 問題들을 해결하거나 적어도 경감시킬 수 있는 도구로 인식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南·北韓間의 經濟協力 展望

김 학 은
(연세대 교수)

Ⅰ.

제2차 世界大戰은 그 終了와 同時에 냉전체제를 만들어 냈으며, 이 전쟁의 末期에 韓國은 2개의 국가로 分斷되었다. 독일의 분단처럼, 한국의 분단은 그들 國民들이 소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超强大國들의 汎世界的인 게임(global game)과정에서 부과된 것이었다. 또다른 분단국이었던 독일과 예멘의 統一을 볼 때,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되었다. 분단이후, 두개의 한국은 각각의 體制가 기나긴 韓國史에 있어서 유일한 繼承者라는 正統性을 證明하기 위하여, 식품에서부터 무기부문까지 모든 面에서 競爭하여 왔다. 분단 45년후에 남한의 經濟力은 북한을 훨씬 능가하게 되었다. 이런 경제적 成功의 도움으로, 남한은 과거 수십년동안 북한과 관계를 맺어 왔던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外交的, 政治的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부시 美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서 남한의 노 태우 대통령과 歷史的인 정상회담을 가진 것이 불과 지난달의 일이었다. 그 회담 前에 노대통령은 日本을 방문했다. 이제 그는 가까운 將來에 中國을 방문하길 바란다. 革命的인 것은 아닐지라도 남한이 한반도를 통일하려는 意圖와 함께, 심도깊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체로, 얄타회담의 비극적 産物인 한반도의 주변정세가 몰타회담에서 비롯된 새로운 國際秩序

와 더불어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한반도는 진실로 알타체제와 몰타체제의 과도기 상태에 있다.

정치적 통일은 代價를 지불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경제협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독일의 經驗에서 얻는 敎訓이다. 이것은 정치적 통일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그 동안에 경제적인 방법으로 이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또한, 남한이 장래의 통일을 위하여 어떠한 비용도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서울측이 平壤측을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誘導하는 방법들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 즉 가까운 장래의 政治的 통일로 향한 디딤돌로써 남·북한 사이의 經濟協力의 可能性, 그리고 남한이 통일을 위하여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한 能力이다. 이 논문은 두번째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에 맡기고,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만 論議하겠다.

Ⅱ.

이 節에서는 북한이 경제적 狀況에서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孤立으로부터 脫皮해야만 한다는 몇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韓半島에서 진전되고 있는, 외견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단편적인 여러 사건들을 檢討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모스크바측과 北京側이 평양의 폐쇄된 門戶를 개방하게끔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남한이 이들 국가에 要請하는 노력을 고려해 볼 때, 한반도에서 상황이 현재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

南韓과 國交正常化를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소련은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크게 强調하고 있다. 고르바초프는 남한이 소련과의 交易을 확대함에 있어서, 특히 소비재 분야뿐만 아니라 技術 및 投資에 있어 많은 것을 提供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음이 분명하다. 南韓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高度의 기술에 관한 제한을 加하는 COCOM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담기간중 소련은 남한이 관심을 갖는 100여개의 技術의 目錄을 제시했다. 소련의 남한과의 交易은 1988년 美貨 3억불에서 1989년 6억불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다시 그 倍로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르바초프가 노대통령과 만났을 때, 평양측은 그의 傳統的 友邦이었던 모스크바측의 전례없는 움직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거친 反應을 보였다. 북한은 소련주재 大使를 소환함으로써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모스크바측이 서울측과 모든 外交關係를 開放한다면 더욱 강하게 反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움직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는 다른 선택의 길이 없는 상황을 깨닫고, 그들의 孤立化 정책에 대해서 再考해보게 될 것이다.

북한의 總國際交易의 40%를 소련이 차지하고 있으며, 北韓의 소련과의 무역적자는 22억 루불에 달했다. 뿐만아니라, 북한의 防衛産業과 군사장비는 상당한 부분을 소련의 공급에 依存하고 있다.

北韓이 그들의 군사시설 維持를 위해서는 소련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주어진 상황下에서 모스크바측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소련의 남한과의 관계정상화는 平壤側이 그들의 孤立化 정책에서 脫皮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소련의 기술은 지난 20여년동안 미국과 日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

은 편이지만, 소련은 北韓에게는 일본의 다음으로 기술을 移轉해주는 주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모스크바측으로부터의 고립은 북한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을 의미한다. 이런 사실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김 일성은 최근 그의 연설에서 經濟成長에 있어서 技術革新과 기술발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6월10일 남한의 MBC-TV는 최근에 平壤을 방문한 日本의 외교적 소식통을 引用하여, 소련이 고르바초프와 盧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대한 原油供給을 짧은 기간동안 급작스럽게 중단했었다고 보도했다. 소련은 북한의 原油輸入의 약 40%를 공급해 왔었다.

우리는 소련경제 또한 惡化狀態에 있음으로 인하여, 베트남과 쿠바에 대한 經濟援助를 중단한 후에 이들 국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門戶를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들은 開放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사건은 모스크바측이 경제적, 군사적 援助를 중단할 경우, 북한도 같은 상황에 直面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推測할 수 있게 한다. 쿠바는 남한과의 關係를 원한다는 어떠한 표시도 보내지 않은 반면, 미국이 어떤 국가든지 베트남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최근 어떠한 形態로든지 서울측과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사표시를 보내고 있다.

모스크바 라디오방송은 6월 7일자로 中國은 남한과 더욱 親密한 관계를 바란다고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과의 貿易은 단지 6억6천2백만불인데 비하여 남한과 중국과의 연간 교역은 최근에 약 30억불로 集計되고 있다. 소련의 라디오방송은 로이터통신 記者의 말을 引用하면서, 중국은 소련의 남한으로의 接近에 대한 平壤側의 자세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대한항공은 서울-트리폴리間의 정기운항에서 중국의 領空을 지날 수 있는 허가를 얻어냈다. 그것은 중국이 大韓航空의 정기운항에 있어서 그들의 영공을 지날 수 있도록 허가한 최초의 것이었다. 지난 4월11일 중국의 副首相이 제4차 아시아-태평양 변호사 회의의 의장에게 中國은 남한과 外交的 관계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이 報道되었다.

이런 모든 발전들은 平壤側이 다른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는 상당한 큰 壓力이 될 것이다. 북한은 개방하는 것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餘地가 없는 듯하다. 최근 평양측이 몇몇의 다른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조금씩 표시를 보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러한 證據를 잡아낼 수 있다. 서울에서 발간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위대한 영도자 김 일성」의 이름 앞에 붙는 긴 稱號의 사용을 자제한다고 한다. 최근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죽은 美軍의 유해를 돌려 주었고, 미국 관리들은 이것을 好意的인 표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양측은 北京에서 회담을 가져 왔다. 6월 13일에 그들은 兩側의 問題를 위해 11차 會談을 가졌다. 그 회담은 북한측의 要請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양측은 워싱턴측에 軍縮에 대한 그들의 제안과 南·北韓 사이의 자유로운 왕래에 대한 그들의 제안과 計劃을 설명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北韓이 핵안전을 위해서 국제 原子力 기구의 감시하에 놓이는 국제 협약에 加入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改善하는 방향으로의 더 깊은 接觸이 증대하도록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平壤側 태도의 변화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워싱턴의 관리들은 그들의 北韓과의 접촉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측과 조정과정을 거친 후일 것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했다. 그래서 6월의 회담에서 부시 美대통령과 盧대통령은 북한측이 워싱턴측과의 접촉을 확대함을 摸

索하기에 앞서 南韓側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에 同意했다.

Ⅲ

한반도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은 시기는 없었다. 그렇지만, 북한이 앞에서 논의한 그런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결국 그리 쉽게 開放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南·北韓 사이의 장래의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많은 政治的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80년도에 5차례의 南·北 경제회담을 가졌으나, 양자간에 어떤 협정에 도달하는 데에는 모두 실패했다. 南韓은 비교우위에 기초한 수직적 交易을 원했던 반면에, 북한은 같은 형태의 商品을 교환하는 수평적 교역을 바랬다. 박 진근교수는 그의 1987년 조사에서, 남·북 경제회담의 失敗는 주로 남·북한 교역을 실행하는 데에 따른 많은 문제들에 관한 論爭를 회피하려는 북한측의 의도때문이었다고 結論지었다. 그는 왜 북한이 경제회담을 위한 協商테이블에 나왔는가 하는 疑問을 제기하였다. 그는 중국의 西方側으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유인과 영향에서 해답을 구했다.

경제적 要因들은 개방에 있어 促進的인 역할을 할 것이지만, 정치적 요인들은 障碍 요소로 作用할 것이다. 만약 장애 요소가 촉진 要素보다 많다면, 북한은 경제적 요인의 비용에도 不拘하고 예상에 반하여 그리 쉽게 개방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촉진 要素가 장애 요소보다 많다고 하여도, 다른 국가들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남한과 교역을 하리라는 保障은 없다. 그들은 실제로 그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점들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論文은 北韓이 고립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세가지 要因이 있음을 强調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기술발전과 투자의 패턴이 소련과 類似할 것이라는 假定下에서, 소련의 자료는 북한경제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G. Ofer(1987)는 소련경제의 衰退에 대하여 다른 여러가지 중에서 2개의 說明을 제시했다. 첫째로, 다방면에서의 성장은 本質的으로 투입의 증가에 있어 枯渴的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기술변화와 개선된 效率性이 투입의 성장을 代替하는 것에 실패했다. 사실, 西方의 기술을 低廉하게 도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증가했음을 勘案할 때, 지난 수십년간 기술개발의 기여도는 점차 減小했었다. Bergson (1983)은 대체탄력도가 0.5와 1이고, 이때 資本에 대한 분배몫이 각각 0.12와 0.06임을 가정한 CES생산함수(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를 가지고 技術進步의 성장율을 계산하였다.

<표 1> **소련의 기술진보율**

자본의 분배몫 / 연도 \ 대체탄력도	r = 0.12		r = 0.06	
	ES = 1.0	ES = 0.5	ES = 1.0	ES = 0.5
1950 ~ 60	3.6	1.4	4.5	2.4
1960 ~ 70	1.8	1.1	2.6	2.0
1970 ~ 75	0.3	0.5	0.9	1.1

위의 <표 1>에서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처럼 技術進步의 성장율은 지난 30여년동안 계속 減少되어 왔다. Ofer에 의하면, 소련에 있어 이같이 감소하는 趨勢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投資의 수준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體系化된 투자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유사한 문제에 直面했었다면, 투자 정책이 그들의 經濟問題의 모든 면을 反影할 것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윤 석범(1989) 교수는 북한의 계량경제 모형을 만들어 냈는데, 거기에서 북한경제와 같은 形態에서의 기술적으로 체계화된 투자의 역할을 强調했다. 그는 북한경제에서는 단지 노동만이 價値를 창조한다고 믿기때문에 자본의 가격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注目했다. 이것은 투자율의 水準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이자율이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북한의 投資函數는 $I = I(Y - Y_{-1}, K)$라는 형태를 취한다는 가정하에서 아래와 같이 推定했다.

$$I = \underset{(4.5118)}{92.3588} + \underset{(1.2009)}{0.06073}(Y - Y_{-1}) + \underset{(1.5261)}{0.02962}\sum I$$

$$R^2 = 0.8146$$

I : 투자　　Y : 산출

Y_{-1} : 前年度의 산출　　K : 자본

推定에 있어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K대신 $\sum I$를 사용하였다. 資本 축적의 조정과 가속도 原理가 적용됐음이 명백하다. 산출의 변동분을 독립변수로 이용한 근거는 사회주의 경제의 投資가 그들의 計劃文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의 의사결정자의 의도가 특별히 算出量 증가율이라는 목표에 반영되었다고 가정한 것이다.

모형의 중요한 점은 輸入函數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는 北韓은 투자수요라는 목적때문에 수입을 한다고 가정했다. $M = M(I)$에서 M은 수입을 뜻한다. 이것은 북한의 기술 수준이 너무도 낮아서 체화된 投資財 형태로의

西方 기술의 수입이 외연적 성장의 한계를 넘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추정결과는

$$M = 3.2601 + 0.147\ I$$
$$(2.259)\quad (4.626)$$
$$R^2 = 0.701$$

기술적으로 체화된 투자를 수입하기 위해, 北韓은 상당량의 外貨를 필요로 한다. 이 외화는 상품을 輸出함으로써 벌어 들일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수출함수에 반영된다. 그래서 그의 모형에서 북한경제의 수출함수는 특별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北韓에 있어서 수출이 촉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外貨獲得이라고 가정한다. 이런 가정은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主義가 自給自足 원칙이기 때문에 타당한 것같은데, 이런 主義下에서는 국제교역이란 부등가 교환을 기초로 한 제국주의적 膨脹의 또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수출함수를 $X = X(M, V)$로 가정했고, 推定 결과는 아래와 같다.

$$X = 0.324 + 0.536M + 0.267V$$
$$(0.426)\quad (4.925)\quad (5.896)$$
$$R^2 = 0.973$$

V : 잉여　　M : 수입

이러한 구조는 북한경제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체화된 投資財의 중요성에 크게 강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윤 敎授는 이것을 가지고 연간 算出量과 투자량을 추정할 수 있었다. 北韓經濟에 있어서 투자의 수준이 중요한 이상, 기술적으로 체화된 투자의 비중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북한의 기술개발의 기여도를 推定하기 위하여, 우리는 北韓의 생산함수가 기술진보를 포함한 레온티에프 형태의 生産函數임을 가정할 것이다. 즉,

$$Y = aTK$$

여기서 T는 기술진보를 나타낸다. 이러한 生産函數는 사회주의 경제를 묘사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또한 이 함수는 投資決定에 있어 加速度 원리를 포함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함수를 얻는데,

$$y = t + a\left(\frac{I}{Y}\right)$$

y는 산출의 증가율, t는 기술발전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t=0$, $y=a(\frac{I}{Y})$ 일 경우, 이것은 기술발전이 없을 때의 해롯-도마의 성장공식임을 알 수 있다. 김 학은 교수(1990)는 위에서 윤 석범 敎授가 추정했던 Y와 I에 대한 資料를 사용하여, 북한경제의 1970～1984의 기간동안의 연평균 기술진보율, t를 추정할 수 있었다. 기술개발이 산출에 미치는 寄與度는 약 0.64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소련에서처럼 낮은 數値이다. 따라서 북한도 소련이 갖고 있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結論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 다른 방법은 南·北韓간의 교역의 潛在性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몇몇 國家들을 제3자로 두고, 南·北韓이 상호 이들 국가들과 교역을 통한 무역다변화의 가능성을 檢討하는 것이다. 이 종하 교수와 박 진근 교수(1984)는 OECD국가들을 제3자로 놓고, 1977년에 대해서 이런 방법에 基礎하여 후보상품을 식별해냈다. 이에 의하면, 남한에 비하여 북한의 주요 潛在輸出品目은 자원집약적인 광업제품과 원료임으로 나타났다. 反面에 북한에 비해 남한의 주요 잠재수출품목은 전자제품, 통신장비, 화학제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은 자본집약적인 것이다. 資料가 시대에 뒤진 것이지만, 이런 결과는 技術面에 있어서

북한이 열등한 位置에 있음을 나타내준다.

Ofer는 소련경제 성장에 대한 그의 調査論文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련의 R & D에 대한 개혁과 개방의 期待效果와 관련이 있다고 結論지었다. 그는 現在와 미래의 기술적 未開拓 분야가 그 이전보다 훨씬 소련체제에 심한 장벽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회의적인 立場을 취한다. 소련 工業化 추진의 주된 발전이 그 당시에 技術陣보다 중공업, 기계, 에너지, 원료 등 그 당시 소련의 체제에 適合했었던 분야에 集中됐던 시기에 일어났었다는 것이 그의 논거이다. 그러나, 전자, 컴퓨터, 통신분야가 기술적인 미개척 분야로 바뀌게 되었고, 이런 모든 분야는 정보집약적인 經濟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소련의 체제는 이런 변화에 잘 맞지 않는다. Ofer는 "단지 投資水準을 높이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解決하지 못하며, 잘 계획된 점증적인 投資에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비중을 높임으로써 問題를 해결할 수 있다"고 結論지었다. 그리고, "이것이 투자정책의 領域에서 소련의 계획자들이 부딪치는 모순덩어리의 다른 부분이다"라고 했다. 이것이 고르바초프가 서방세계의 尖端技術과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소련을 開放하려고 결정한 이유를 볼 때, 진실된 근거일 것이다. 사실, 고르바초프는 기술의 중요성을 認識했고, 기술혁명을 受容함으로써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로 약속했다.

기술의 상대적인 衰退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것이므로, 북한이 例外的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소련경제의 단계를 따르는 이유로, 북한도 소련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開放을 피할 수 없다. 다른 길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理論的 근거는 북한의 外貨事情을 고려해 본다면 더욱 明白해질 것이다.

북한이 硬貨(hard currency)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이 더 惡化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제국주의적 西方國家로부터 기술을 사들여서라도 점차 감소하는 成長率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外貨, 특히 경화의 枯渴을 겪고 있다. 북한의 외화에 관한 資料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몇가지 이유로 그런 상황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北韓의 교역 상대국, 특히 그들에게 상품을 수입하는 國家들 역시 충분한 硬貨를 保有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앞으로 경화에 기초한 交易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1987년의 總赤字幅은 약 12억불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frac{2}{3}$가 일본을 포함한 서방국가들에 대한 것이다.(<표 2> 참조) 1970년대 初盤 동안에 평양측은 서방으로부터 수입을 增加시키기 시작했다.

<표 2> **북한의 대외부채**

(단위 : 백만불)

구 분	1983	1984	1985	1986	1987
총 부 채	895	865	1,082	1,117	1,246
장 기 부 채	448	480	481	531	610
O E C D	303	312	360	431	490
C M E A	145	168	121	100	120
단 기 부 채	447	385	601	586	636
은 행	186	166	326	189	259
수출신용	261	219	275	397	377
총 용 역 지 불					
부 채 상 환	47	19	33	19	68
장기부채이자	54	33	45	37	29
단 기 부 채	21	19	20	18	17

자료 : EIV Country Profile 1989 - 90, 80.

이런 상황에 이를 때까지, 교역은 거의 대부분 共産國家들과 이루어 졌다. 이것은 더욱 先進化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암시의 또다른 증거이다. 이러한 구매는 輸出增大로 얻는 소득이나 短期與信에 의해서 지불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西方의 경기침체의 시작은 이런 계획들을 날려버렸으며, 또한 북한의 鑛物에 대한 수요와 價格을 모두 감소시켰다. 북한은 경화공급의 부족에 처했다. 그 결과로 支拂이 중지됐다. 그 이후로 북한의 外換事情은 개선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주로 物物交易(barter trade)과 루불貨에 기초한 결제에 의존해왔다. 소련의 통화는 요즘의 國際交易에서 별 價値가 없다. 루불貨가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10년이내에는 不可能할 것이라고 한다.

硬貨의 부족에 직면함과 동시에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추구하는 것을 볼 때, 북한은 경화를 가지고 그의 安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어떠한 形態로든지의 개방을 의미한다. 이것이 北韓이 그들의 정치체제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고립에서 脫皮해야만 하는 두번째 이유이다.

세째, 南韓은 경제관계의 수립에 이어서, 알바니아를 除外한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外交的 관계를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남한은 소련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 商品의 交流가 있어 왔다. 관계개선은 교역량에서의 증가를 同伴하고 있다. <표3>과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한의 지난 5년간의 동유럽 國家들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38%로 그 量은 1989년에 약2억7천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북한의 2배이다. 中國과는 그 비율이 28.3%로 수출량이 1989년에 약 14억3천8백만불이

<표 3>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교역량

(단위 : 백만불)

지역 \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연평균 증가율(%)
수 출						
동 유 럽	107.8	67.5	102.3	125.6	270.3	38.0
중 국	682.8	667.7	813.2	1,700.2	1,438.0	28.3
U S S R	59.7	49.9	67.2	111.6	208.0	42.7
수 입						
동 유 럽	67.5	19.6	46.2	89.3	117.8	42.7
중 국	478.4	620.7	865.9	1,386.7	1,705.0	38.1
U S S R	42.1	67.8	133.1	178.3	392.0	77.8

자료 : 한국무역협회

<표 4>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들간의 교역량

(단위 : 백만불)

지역 \ 년도	1982	1983	1984	1985	1986
수 출					
동 유 럽	116.1	113.1	126.3	149.0	132.7
중 국	276.6	231.1	247.7	222.5	255.1
U S S R	451.1	396.5	423.9	423.3	583.6
수 입					
동 유 럽	128.7	120.2	130.8	163.6	135.7
중 국	309.5	300.7	248.8	262.9	280.9
U S S R	479.4	387.4	487.2	824.5	1,186.5

자료 :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며, 북한의 6배에 達한다. 북한의 소련에대한 수출은 남한의 3배이지만,

상황은 곧 역전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革新的인 변화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北韓經濟에 영향을 주었음을 나타낸다. CMEA체제는 흔들리고 있으며, 동유럽 국가들은 그들의 交易 상대를 북한에서 남한으로 轉換하고 있다. <표 3>과 <표 4>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동유럽 국가들과의 交易量은 단지 북한 총교역량의 10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精密機械, 전자제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 資本集約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그런 상품의 교역량 감소는 만약, 북한이 다른 國家들과 이와 같은 거래를 하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할 경우에, 북한경제에 상당한 負(-)의 효과를 줄 것이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태껏 북한이 크게 의존해왔던 物物交易을 회피하려는 것이 새로운 추세이며, 루불貨에 기초한 교역도 전처럼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이같은 거래를 할 수 있을 지는 더욱 의문시 되는 것이다. 물물교역량은 北韓總交易量의 $\frac{1}{3}$에 達한다.

Ⅳ.

기술진보는 低下되고 있다. 루불貨는 교환성이 없다. 硬貨를 얻을 수 없다. CMEA체제는 해체되고 있다. 物物交易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북한경제가 처한 外部狀況이다. 북한의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역량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는 않는다. 時期가 무르익은 것같다. 그러나, 서둘러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가지 사항을 考慮해야 한다.

첫째, 이러한 異例的인 상황에 직면하여 북한은 그들의 國內改革에서 경

제개방과 政治的 통제사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두려워 할 수도 있다. 사회주의 국가 指導者의 정치적 안정성이 經濟機構의 형태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 국가의 역설적인 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래에서처럼 多樣한 형태의 정부와 결합된 다양한 경제기구의 형태를 조사할 것이다.

정부 / 경제	독재주의	多頭정치
시장지향적	다수 국가	다수 국가
중앙통제적	다수 국가	없음

北韓은 독재주의적 정부와 중앙통제적 경제의 국가이다. 만약 북한이 장래에도 독재적 정부의 형태를 維持하려고 할 경우, 국내 개혁을 위해서는 두가지 選擇이 있다 첫째, 북한에 있어 정치권력의 안정화를 追求하는 선택은 정치적으로 獨裁政治와 효율적으로 改革된 국가적 시장경제의 결합을 추구하는 중국의 모델을 따르는 것이다. 또다른 선택은 많은 힘으로 억눌리는 장기적 경기침체이거나 결국 破滅하여 혼돈에 빠지는 것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에게 景氣沈滯에대한 해결책으로 자주 제시되어왔던 첫번째 선택을 두려워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런 해결책은 필연적으로 중앙집권화된 정치엘리트의 안정성에 대해 위협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두려워 한다. Durasoff(1988)는 經濟開放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서 대폭적인 경제개방이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불안을 가져오더라도 중앙집권적 정치통치를 維持하는 것이 아직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한은 북한의 경제개혁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統制

를 안정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 Durasoff의 의견을 經濟改革에 도입함으로써 중국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남한을 그들의 교역대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다른 교역상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에게 있어서 自尊心의 問題인 것이다.

사실상, 촉진적 요소가 장애 요소보다 越等하더라도, 북한은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할 수 있으므로, 남한과 교역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실도 그러했다. 북한은 몇몇 아프리카 國家들과 점차적으로 경제관계를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바라는 技術을 保有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北韓에게는 만족스러운 상당히 좋은 대체국가이다. 台灣의 50명의 통상대표가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것이 양국간의 公式的인 첫번째 접촉일 것이다. 평양측은 모든 사실을 否認했지만, 대만지역 輸出入協會는 처음에는 거절했었고, 지난해에는 승락했던, 지난 2년간의 不連續的 예비접촉에 대해서 발표했다.

대만은 특히 북한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북한을 도울수 있는 상당한 능력이 있으며, 게다가 대만은 남한을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대상국인 것이다. 台灣도 남한이 북한에게 공급할 수 있는 商品들을 갖고 있다. 대만은 남한이 중국과 外交關係 수립을 추진할 경우, 북한과 交易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이 있다.

6월 18일, 북한은 필리핀에게 "교역, 경제, 외교, 모든 分野에서 상호관계를 시작하고 增進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지역 공산반군에대한 원조를 中斷한다는 약속과 함께 外交的 관계를 提案했었다. 7백만불에 해당하는 필리핀의 야자油와 북한의 시멘트를 교환하는 상호교역 프로그램을 完結하는 것이 북한의 바램이며, 이를 위해 필리핀은 그들을 支援하겠다는 입장을 표

명했다. 이것은 兩國이 서로 物物交易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문을 만들어냈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제외한 일부 특정한 국가들과 統制가 가능한 範圍內에서 개방을 하려는 또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평양측이 물물교역을 그만두기에는 아직 硬貨가 부족하다는 또다른 證據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交易과 부채에 대한 支拂에 있어 그들과 문제가 있다면 대만과 필리핀 모두 달가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不拘하고 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도 持續的인 물물교역을 하려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이것은 의심스럽다.

게다가, 이를 의심할 바 없다하더라도 新興工業國과 선진공업국들의 극히 적은 몇몇을 예외로 하고서, 지불중지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交易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 몇 안되는 국가들이 世界의 기술진보에 뒤지지 않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하고, 支拂中止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교역을 함으로써, 統一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국가는 오직 南韓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남한의 運命이다.

參 考 文 獻

Bergson, Adam, "Technical Progress," in Bergson and Levine (ed), The Soviet Economy: Toward the year 2000, 34-78.

Durasoff, Douglas, "Conflicts between Economic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Domestic Reform of Soviet and Post Soviet Systems," Social Science Quarterly (June 1988), 381-98.

EIU Country Profile, 1989-90.

Gorbachev, Mikhail, Political Report of the CPSU Central Committee to the 27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Moscow: Novosti, 1986.

Kim Hakun, On Estimation of Technical Progress in North Korea, mimeo, 1990.

Lee, Chong Ha and Park, Chin Keun, "The Potential Trad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Spring-Summer 1984), 1-16.

Ofer, Gur, "Soviet Economic Growth; 1928-1985," Th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ember 1987), 1767-1833.

Park, Chin Keun, "The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 Economic Point of View," The Journal of East and West Studies (Spring-Summer 1987), 1-15.

Yoon, Suk Bum, "A Trial Estimation of an Econometric Model of North Korea," Asian Economic Journal (March 1989), 108-29.

獨逸統一의 國際的 影響

G.K Kindermann
(뮌헨대 교수)

1989 년 가을 서울에서 지난번 韓獨會議가 개최된 이후 수개월 동안 동아시아 일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世界的으로 중요한 예기치 못했던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으로부터 며칠동안 이번 회의의 參席者들은 독일을 가시적으로 나누었던 독일장벽이 崩壞되었다는 사실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불과 몇시간전에 마르크貨(the Deutche Mark)라는 하나의 統一된 통화체계를 基盤으로 동·서독간의 경제적, 사회적 통일이 재건되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에서 共産黨 독재체제가 민중운동이나 革命으로 인해 沒落되었다. 이러한 성과들 중 아직은 어느 것도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들 모든 變化들 속에 내재한 중요한 요소는 蘇聯의 국내·외 정책이 干涉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군사력과 전체주의적 공산당의 통제의 조화를 통해 스탈린에 의하여 樹立된 소련의 동유럽제국들은 다분할적 崩壞에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발전이 진행되는 속도와 역동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약 2 년전 고르바쵸프는 獨逸統一 問題는 향후 100 년 안에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1988 년 까지도 "동방정책(Ostpolitik)"의 주요 주창자인 브란트(Willy Brandt)와 바흐(Egon Bahr)도 獨逸統一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선전적 虛僞를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 그리고 東獨의 국가, 정당 지도자인 호네커(Erich Honnecker)

1) Schacht, Ulrich : "Die Fehlprognosen der Sozialdemokraten", in : Welt am Sonntag, November 12, 1989.

가 거의 외국수반과 같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1987년 9월 西獨을 공식방문하였을 때에도 워싱턴포스트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독일이 아직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는데 광범위한 의견일치가 있다.…… 대신 호네커의 訪問은 독일분할을 묵살해 버리는 가장 명백한 증거를 表現하는 것이다."[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위로는 엘베(Elbe)강에 이르는-은 모스크바의 통치하에 있어 왔다. 초기 冷戰時代에 스탈린은 유고와의 同盟關係를 상실하였지만(1949년), 1948년 체코를 통제하에 넣었다. 1년 후 蘇聯은 미국의 核武器 독점을 분쇄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구의 약 1/4을 占有하고 있는 中國을 극동에서의 새로운 軍事同盟國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후르시초프 통치기 초기 몇년 동안, 소련의 帝國主義的 발전은 극에 달하였다. 초기에 소련은 동아시아에서 中·蘇關係를 개선, 공고히 하였으며, 1954년 월맹과 새로운 동맹관계를 수립하였다. 중립과 中立主義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소련외교는 중동의 이집트, 이라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버마 등과 구조적 관계를 樹立하였다. 서독의 NATO에로의 통합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의 중립에 대한 소련의 지지는 동으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에서, 서로는 프랑스-스위스 국경에 이르는 광대한 중립지대를 중유럽에 創造하였다. 1955년부터 소련은 非武裝에 지속되던 세계적 대화의 서방측 파트너가 되었다.

소련의 衰退는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국내요구에 대한 反應으로써 고안된 탈스탈린운동은 단일적 世界共産

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eptember 7, 1987.

主義의 종식이 시작됨을 의미하였다. 2년 후 중·소관계의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60년대 말까지 그 불화는 군사적 衝突 직전까지 가는 적대감을 확신시켰으며, 소련에게는 "중국의 상실"을 야기시켰다. 월맹에 대한 지지도 얻은 소련의 成果는 1970년대 중공과 미국간의 劃期的인 재결합으로 인해 무색해지고 말았다. 1972년 닉슨과 주은래와의 "反覇權 條項"-명백히 소련을 목표로 했던-은 1978년 中·日 平和協定에서도 반복되었다. 1972년 소련은 美國에 이집트를 빼앗기고 말았다. 소련의 체코 침공 이후 전개된 유로코뮤니즘의 출현은 日本 뿐만 아니라 서유럽에서의 강력한 共産主義 정당과 집단은 자산이라기 보다는 負債로써 제국주의적이며 반복고적인 소련과 密接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아프간 침공과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은 소련에 대하여 많은 부수적인 負擔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두 作戰은 다양한 방법으로 취소되어야만 하였다.

1962년 쿠바위기 때의 부끄러운 패배이후 소련은 가속화된 軍費競爭에 착수하였으며, 군사력이라는 의미에서 미국보다 우세하지는 않지만 거의 동등한 位置를 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하여 소련은 國民 總生産의 20~25%에 이르는 군사비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또한 蘇聯은 바르샤바 조약국의 전체 軍事費의 95%를 支拂해야만 하였다. 체르노빌사태는 어느 한쪽의 승리도 될 수 없는 核戰爭의 潛在的 자기파괴성을 어느 한 理論的 주장보다도 확실하게 예시해 주었다.

독일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확산되는 위기의 위협에 직면하였던 蘇聯은 사회-자유 연립정부(the Social -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의 장인 브란트의 新동방정책을 배경으로 하는 첫번째 독소조약을 1970년 獨逸聯邦共和國과 체결하였다. 이 조약과 부속조약 속에서 소련은 서독에서 서

베르린에 이르는 安全한 접근로와 東·西獨을 분할하는 독일내 국경을 포함한 현존 유럽국경의 불가침성을 준수하고자 하는 서독의 公約을 위한 수많은 독일내 조약들을 위하여 풀려져야 할 동독을 의무들과 교환하였다. 서독은 동독을 外國으로서가 아닌 독일국가내의 국가로 認識하였다. 한편 소련은 소위 "독일통일에 대한 편지(Letter on German Unity)"를 그 조약에 대한 공식해석으로 받아들였다. 그 內容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오늘 조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이번 조약은 獨逸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통일을 재건하게 될 유럽의 平和狀態를 위하여 노력하는 獨逸聯邦共和國의 정치적 목적에 抵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 독일정부가 천명하게 되어 영광입니다."[3] 소련으로서는 공감하지 않는 이러한 일방적인 해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 수많은 소련의 정치가, 외교관, 政治分析家들은 독일 대중과 정치지도자들에게 독일의 영구적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한 소련의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所得으로 여겨져야 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방어되어야 한다는 國內的, 外交的 인상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民族의 자기결정에 대한 보편적 權利의 근본에 관한 견해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이들 독일인들은 危險스러운 "실지회복주의자"들로 쉽게 낙인 찍혀버렸다.

최근 동유럽의 發展에 대한 수많은 분석가들 중에는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그리고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과거 행해졌던 것과 같이 소련은 여러 바르샤바조약국 내의 민주적이며 民族主義的 자유운동을

3)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of the Federal Government : The Treaty of August 12, 1970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 Republics on 1970, p.10.

成功的으로 견제 또는 통제하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는 거의 의심하지 않고 있다. 스탈린이 武力을 통해 이들 국가에 전파하였으며, 특히 최근에 까지도 소련 국내 共産黨 統治의 정통성과 동구에서의 蘇聯覇權에 대한 기본 요소를 형성하였던 이데올로기와 사회-정치체제가 국가마다 連鎖的으로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소련이 허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최근세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답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실행되었던 방식과 같은 壓力行爲를 위한 물리적 수단은 부족함이 없으며, 그러나 고르바쵸프하의 소련 지도부는 동유럽 국민들의 민족적, 민주적 熱望에 대하여 군사력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상실했다는 설명적 가정을 提示하겠다. 이러한 의지의 부족은 반대로 소련 자신의 經濟와 社會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수단은 이러한 위기를 克服하는 데 더이상 충분치 못하며, 또한 광범위한 국제적 경제, 技術協力이 이러한 절망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開放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결과로써 설명되어 질 것이다. 效果的인 국내적 改革(Perestroika)은 반면에 서방 강대국과의 상호 均衡된 군축협정의 골격내의, 그리고 그것을 基準으로 한 실질적인 군사비 지출삭감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自由와 개방의 분위기(Glasnost)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모든 수단들이 새롭고 費用이 많이 드는 군사적 壓力行爲와 적절히 조화될 수는 없었다. 중국의 성공사례를 言及할 필요도 없이 고르바쵸프는 1989년 1월 그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世界 經濟體制로의 소련경제의 통합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4] 1989년 4월5일 쿠

4) Gorbatschow, Michail : Glasnost.(Notes from his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the Trilateral Commission on Junuary 18, 1989), Frankfurt am Main 1990, pp.288 ~ 290.

바 의회에서의 연설에서 고르바쵸프는 國際關係에서의 新思考를 요구하였다. 그는 暴力의 사용과 대결이라는 구시대적 정책과 연관된 군사력으로부터 자신을 이탈시켰다. 그는 相互依存하고 있는 세계에서의 확신과 利益의 다원주의의 공존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人類의 상호결속이라는 보편적인 국면이 다양한 체제의 교류의 장이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明快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革命이나 역혁명의 수출을 정당화하는 이론이나 독트린, 그리고 주권국가 내부문제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外國의 개입에 반대하기로 결심하였다.……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군대를 撤收시켰다."[5] 소련과학아카데미 외교부문 의장이며, 독일 專門家로 고르바쵸프의 가장 뛰어난 외교정책 자문가인 다시체프(Vyacheslav Dachichev) 교수는 소련외교문제를 總括하는 고르바쵸프의 새로운 스타일의 동기구조에 관하여 더욱 深層的인 분석을 하였다. 1989년 4월 그는 소련의 최근 外交政策의 "중심적 임무"는 서방의 강대국들에 대한 자기조장적(self-made) 대결의 거대한 負擔으로부터 소련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방향의 한가지 중요한 진보가 소련과 동유럽관계에서의 覇權主義的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廢棄이다. 분단독일은 서방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하려는 소련의 努力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형성한다. 다시체프는 1980년대 국내·외 문제의 根本的인 잇슈에 관련하여 소련과 동독간의 論爭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독지도부는 페레스트로이카의 중요 목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Unacceptable)"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그것의 失敗와 스탈린주의적 혹은 수정스탈린주의

5) Ibid., pp.298～301.

적 思想과 행위의 회귀를 의미한다. 비록 동독이 사회주의국가들 중 높은 水準의 생활수준을 누려왔지만, "이데올로기적 根本主義(primitivism)"에 근거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인함으로써 자국민에게 대항하였다.[7]

1989년 10월 초 동독의 40주년 건국기념일 행사에 參席하기 위하여 고르바쵸프는 동베를린을 訪問하였다. 1989년 10월6일 그 행사에서 그는 "유럽국가들사이의 모든 적대와 소외 그리고 불신의 벽"이 제거되었다고 천명하였다. 東獨共産黨(SED) 정치국원들과의 다음날 대화에서 고르바쵸프는 소련과 서독의 관계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동독과의 관계보다 더욱 호전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다. 그 理由는 동독에서 헝가리를 거쳐 중국에 이르는 反 페레스트로이카전선을 구축하려는 호네커의 시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았다. 그의 페레스트로이카 政策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8] 고르바쵸프가 동베를린에서 받은 유일한 정직한 歡迎은 데모를 하고 있는 반대파로부터였다. 동독공산당 指導者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 의미에서, 고르바쵸프는 危險은 단지 "생명에 反應할 수 없는"사람들에게서만 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社會로부터 발산되는 충동"을 認識한 이들은 그들이 이러한 자극에 구조적으로 對應할 수만 있다면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9] 동유럽에서의 政治的, 社會的, 經濟的

---

6) "Enormer Schaden für Moskau". Professor V.Dachichev's memorandum for Soviet leaders of April 18, 1989, in : DER SPIEGEL, February 5, 1990, p.154 and 152.

7) Ibid., p.152.

8) "Gorbatschow in Ostberlin",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7. Oktober, 1989.

9) "Perestroika - Plädoyer Gorbatshows in Ostberlin", Neune Zürcher Zeitung, October 1989.

변화과정에 대해 言及하면서 고르바쵸프는 각 단일국가의 행위의 自由를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脈絡에서 무력의 의미는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고 재삼 강조하였다.[10] 며칠 후 점차 증가하는 자신감에 찬 대중시위에 직면하여, 호네커는 외견상으로는 중국스타일의 최종대결(showdown)과 關聯해 군사력의 사용을 準備하였다. 그러나 동독군대가 바르샤바조약군의 직접 통제하에 있는 유일한 동유럽군대이기 때문에 라이프찌히(Leipzig) 인근에 주둔한 소련군 장교는 관찰만 하고 어떠한 武力도 사용하지 않았다. 호네커 정권은 그리하여 1953년 경우와는 달리 소련군이 동독에서 점차 增加하고 있는 民衆運動에 대해 군사적 彈壓을 용인도 원조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한 수백만의 시위자와 수십만의 反對者들의 점증하는 압력에 직면한 SED지도부는 우선 호네커를 포함한 고령의 최고지도층을 축출하고 젊고 좀더 대중적인 일단의 指導者로 대체하며, 공공생활의 수많은 비판적 側面에 대해 커다란 관용을 베품으로써 자신들의 安全을 도모코저 하였다. 독일의 統一로 합쳐진 동·서독의 열광하는 군중들은 모두 밤을 세워 祝賀하였으며, 東獨革命의 두가지 슬로건을 되풀이하여 외치고 있었다. "우리는 한 민족!" 그리고 "독일-통일된 조국!"[12] 歷史的 사건에 감동한 서독의회(Bundestag)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國家를 부르며 일어섰다. 동·서독의 政治指導者들은 승리감에 찬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고

---

10) "Dann haben wir verloren", in : DER SPIEGEL, December 4, 1989, p.168. 또한 Wimmer, Micha et al.(editors) : "Wir Sind das Volk!" ……Die DDR in Umbruch. München 1990, pp.62～63도 참조할 것.

11) DER SPIEGEL, December 4, 1989, p.168.

12) Chronik 89 : "Die Wende in der DDR", Chronik Verlag, Dortmund 1989, pp.88～98.

서로간에 대화하기 위하여 베를린으로 모여들었다.[13] 3일 후 東獨議會는 비교적 인기있는 모드로프(Hans Modrow)를-이전에 드레스덴(Dresden)市의 SED 제1서기장이었던-새로운 동독수상으로 選出하였다. 1989년 11월17일 정부수반으로써 처음 행한 演說에서 모드로프는 동독의 법체제를 확장하고, 새로운 選擧法을 도입하며, 기타 법률들을 정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는 동독이 서독과 협력하며, 서독과 함께 "協力的 공존(Cooperative Coexistence)"을 창조할 準備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양 獨逸政府는 "계약 공동체(Vertragsgemeinschaft)"가 되어야 한다.[13a] 서독의 입장에서 콜수상은 "독일과 유럽의 분할을 克服하기 위한 열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독의회(Bundestag)에서 연설을 행하였다.[13b] 그 演說에서 그는 "동독의 정치, 경제체제의 根本的인 변화"를 조건으로 하여 동독에 막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안하였다. 그는 또한 동독에서의 自由, 平等, 秘密選擧와 공산당 권력독점의 종식을 주장하였다. 연방제적 독일정치구조는 모든 독일의 연합을 이끌어야 했다. 이것을 위한 基本的인 전제조건은 동독에서의 민주적이고 정통성있는 정부의 출현이다. 國際的으로, "독일미래의 구상은 유럽전체의 미래구상에 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럽전체 구조의 根本的인 지주는 Conference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CSCE)이다. 1989년 12월1일 동독의회(Volkskammer)는 동독헌법 1조에서 "勞動者階級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에 의한 통치"

13) Ibid. p.96. 또한 Wimmer et al., op.cit. pp.124 ~ 131과 141 ~ 146도 참조할 것.

13a) Medow's message in : Neues Deutschland November 18/19의 전문.

13b) Kohl's ten point proposal in : Bulletin ed. by Federal Press and Information Office, Bonn, November 29, 1989의 전문.

를 주장하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12 월 9 일 유럽공동체 指導者들이, 그리고 12 월 15 일에는 NATO의 외무부장관들이 독일의 최근 발전에 관련하여 위에서 言及한 1970 년의 "독일통일에 관한 편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12 월 22 일 두번째 회담에서 西獨 콜수상과 동독의 모드로프수상은 베를린 장벽 중앙에 위치한 象徵的인 브렌덴부르그문의 통과를 개방하였다. 크리스마스 休日期間 동안 약 100 ~ 200 만 동독주민들이 서독을 단기 방문하였다. 1990 년 1 월 17 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동·서독의 군부 總司令官의 회담에서 양국은 상대국의 군대를 적군으로 생각치 않기로 천명하였다.[14] 1990 년 1 월 30 일 모드로프 동독수상과의 會談과 관련하여 고르바쵸프는 소련은 더이상 양 독일의 統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5] 1989 년 11 월 17 일 수상으로서 첫번째 연설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非現實的이고 위험스러운 공론"에 대하여 경고하였던 모드로프가 1990 년 2 월 1 일에는 聯合을 위한 "계약공동체"에서 전독일의 연합 또는 同盟이라는 최종목표에 이르는 4 단계의 독일통일을 위한 계획을 提示하였다. 통일된 독일은 공동의 憲法과 의회, 그리고 수도로써 베를린을 두어야 한다. 통일독일의 國際的 위상은 "군사적 중립"이어야 한다.[16]

그러면 1989 년 10 월 초 고르바쵸프가 동베를린을 방문한 이후, 중요한 단계이자 동독에서의 SED 共産黨 獨裁의 철회와 민주적이며 자결권을 가진

---

14) DDR Almanach 90(ed.by G. Fischbach), Stuttgart / Műnchen 1990, p.331.
15) Ibid., p.344.
16)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ebruary 2, 1990 에서 Modrow 에 의해 행해진 연설의 전문.

정부출현의 전환점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虛榮과 榮光으로 제 40 회 동독건국기념일을 祝賀하려던 SED의 의도는 고르바쵸프의 비판, 동구권 정부의 냉담한 反應, 그리고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서독을 거쳐 동독에 이르기까지 수만명의 民衆蜂起등에 의해 무산되어지고 말았다. 1989 년 10 월 18 일, 호네커는 18 년동안 간직했던 SED 총서기자리를 상실하였다. 동시에 그는 國家評議會 의장(대통령)의 위치 뿐만 아니라 SED의 정치국자리도 포기하였다. 소장파 共産黨 指導者였으며 1983 년 이래 종신 정치국원이었던 크렌츠(Egon Krenz)가 그의 승계자가 되었다. 크렌츠는 동독은 이후 SED의 영도하에 모든 계급의 民主的 共同體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0 월 24 일 東獨議會는 호네커의 사임을 승인하였고, 그 계승자로써 크렌츠를 평의회의장으로 選出하였다. 고르바쵸프와의 회담이후 1989 년 11 월 1 일 크렌츠는 어떠한 형태의 獨逸統一도 의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대의 새로운 形態로서의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통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다.[18] 동유럽국가에서 서독에 이르는 東獨移住民의 피서지의 여행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면서 동독정부는 11 월 9 일 서독과 서베를린으로 향한 국경의 歷史的인 개방을 선언하였다.

광범위한 예상과는 반대로 보수정당의 選擧同盟이 동독에서 실시된 첫번째 자유선거에서 48.15 %의 得票로 승리하였다. 동독의 基督民主聯盟이 40.9 %의 지지를 獲得하였다. 사민당이 21.8 %로 두번째 다수당으로 출현하였으며, PDS-SED의 공산주의의 계승조직인-가 16.3 %의 지지를 獲得하였다. 基民聯이 完全한 다수당이 되는데는 失敗하였기 때문에, 基民聯과

17) DDR Almanach 90, op.cit. pp.258 ~ 259.
18) Ibid., p.271.

사회민주당, 自民黨이 연합한 "대연정(grand Coalition)"이 형성되었다.[19] 1940년 출생의 드 메지에르(De Maiziere) - the Protestant Church Organization Bund der Evangelischen Kirche의 最高責任者일 뿐만 아니라 法律家이자 행위예술가였던-가 동독의 첫번째 자유선거에서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1952년생으로 새로운 외무장관이 된 멕켈(Markus Meckel)은 기독교 목사이자, 동독의 새로운 사회민주당의 設立者중 하나로 부총재이다.

반면에 통일독일의 향후 국제적 위상은 소련과 서독을 포함한 서방강대국간에 論爭點이 되고 있다. 소련지도자들은 통일독일이 북대서양 同盟國의 일원으로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다. 1990년 5월5일 본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련외무장관 세바르드나제는 소련은 NATO를 핵1차공격 原則을 고수하고 있는 적대군사동맹으로 여전히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統一獨逸의 NATO에서의 군사적 側面은 차치하고라도 그러한 해결은 국내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20] 1990년 5월12일 소련의회연설에서 고르바쵸프는 그 대안으로써 일정기간동안 통일독일-양 독일의 법적 계승자로서 행위하는-은 바르샤바조약국 뿐만 아니라 NATO의 聯合構成國(associated member)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提案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러한 복수동맹은 새로운 유럽구조에 있어 연결요소와 일종의 선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21] 美國의 부시대통령 뿐 아니라 콜수상까지도 고르바쵸프의 통일독

19) 선거결과에 관해서는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March 24, 1990을 참조하고 동독의 내각명단에 관해서는 Neue Zűrcher Zeitung April 13, 1990을 참조할 것.
20) 1990년 5월5일 본에서 행하여진 세바르드나제의 연설 : Dokumente (ed. by Press Section of the USSR Embassy in Bonn) No.7, May 18, 1990.
21) 고르바쵸프의 연설전문 ibid.(DOKUMENTE) No.18, June 15, 1990.

일이 이중 회원자격을 갖는다는 提案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즉각 거부했다.[22]

6 월 26 일의 성명에서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은 그 自身이 소련 "메카시주의자들(McCarthyites)"이라고 부르는 자들, 즉 고르바쵸프의 리더쉽이 "동유럽의 상실"을 초래했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강하게 非難함으로써, 소련의 지도자들간의 최근의 對外政策 論議에 있어 그 형세와 격렬함을 반영했다. 그들의 비난에 含蓄된 의미는 "왜 그가 秩序의 복원을 위해 탱크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다. 그에 대해 세바르드나제는 이러한 교조주의적 집단들이 "社會主義와 우정, 그리고 선린관계라는 것이 총검, 탱크, 또는 유혈극 위에 存在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프가니스탄, 1956 년 헝가리, 또는 1968 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教訓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현재의 指導部가 "군부를 무시하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고 몽고에서 소련의 군대를 撤收하기로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다. 그것에 관계된 정책결정상의 論議에서 군부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23]

통일독일의 군사적 중립화를 겨냥한, 소련의 對外政策 결정자들의 제안들이 모든 서방국가들 뿐만 아니라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에게까지도 거부되자, 세바르드나제는 1990 년 6 월 세째 주 동베를린에서 進行된, 네 同盟國들과 두 독일정부 간의 소위 「2 + 4」협상에서 이러한 要求를 철회했다. 이 모임에서 세바르드나제는 또 다시 통일독일이 바르샤바조

2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3, 1990.
23) Ibid. June 27, 1990. 또한 DER SPIEGEL, July 2, 1990, p.120 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June 27, 1990 을 참조.

약과 나토동맹에 이중적으로 加入할 것을 고집했다. 이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그들의 군대가 기존의 제권리를 갖고 계속 주둔한다는 것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武裝兵力은 200,000에서 250,000사이의 인원으로 制限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서독, 영국, 그리고 美國의 외상들은 헬싱키 조약의 마지막 문서에 담긴 精神에 따라, 일단 독일이 통일이 完了되면, 통일독일은 여타 모든 국가들과 동등한 權利와 의무를 獲得해야 한다고 對應했다. 제1차 독일 총선거의 예정일은 1990년 12월2일이다. 영국과 미국의 外相들의 지원을 받는 겐셔外相은 통일독일의 차별적인 "예외화(Singularization)"를 거부했다.[24] 세바르드나제는 통일독일에 있어 독일군대가 갖는 힘의 수준에 대한 先行的인 합의가 없을 경우, 소련은 현재 비엔나에서 논의 중에 있는 재래식 군사력 제한에 관한 조약에 쉽게 조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함으로써 이에 對應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의 통일과 국제적인 軍備協定을 연계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스케쥴은 난관에 逢着한 것으로 보인다.[25]

통일독일을 그 중심으로 하는 유럽 安保構造의 미래상을 놓고 흥정하는 동-서간의 외교게임에서 소련이 자신을 유일한 패배자로 認識하지 않고도 여러 다른 提案들을 더 쉽게 수용하기 위해서, 부시대통령은 1990년 6월초에 북대서양 조약과 바르샤바 조약이 미치는 영역들 사이의 경계지역에서의 군사력 감축을 제안했다. 이는 "전향적 방어(forward Defense)"戰略의 廢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또한 유럽에서의 단거리 핵

24) Fromkfurter Allgemeine Zeitung June 23, 1990과 Sűddeutsche Zeitung June 25, 1990.
25) Sűddeutsche Zeitung June 28, 1990.

무기 減縮에 관한 동서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유럽으로부터 미국의 핵무기·화학무기의 40%를 일방적으로 撤收시킬 의사를 표명했다.[26] 따라서, 이 報告書의 결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자면, 통일독일의 미래는 아직도 우선적으로 소련의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지는 것으로 보인다. 서방, 그리고 특히 독일이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주요한 潛在的 지렛대는 서방으로부터의 大規模 경제적, 기술적 원조에 대한 소련의 절박한 요구에 놓여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 또한 정치, 경제 그리고 군비영역에 있어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고르바쵸프의 정책의 성공에 심대한 이해관계를 갖고있다. 소련은, 部分的으로는 자신의 오산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동반구에서는 중국, 그리고 서반구에서는 동유럽과의 防禦同盟關係를 상실해 온 반면, 미국은 대서양에서는 서유럽국가들과 그리고 동아시아-태평양 地域에서는 일본과 남한과 동맹체계를 유지해 왔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克服하기 위해서는 능란한 외교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提案들과 그에 대한 대안들의 제기는 상호수용 可能한 해결의 어떤 형태에 도달하는 데 대한 相互的인 이해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否定的 의미에서는 1814와 1815 두 해 동안 開催된 비엔나 회의에서의 기억을 (과거의 적국, 즉 敗戰한 후기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는 차별되지 않고 오히려 平和 실현과정에서 동등하게 개입하였으며, 그것의 성과는 백년간이나 지속되었다) 回想해 볼 때, 현 독일의 정치와 외교에 제기되는 주요한 도전은 어떻게 해서 戰爭 觸發的인 차별없이 주권과 국제적 평등성에 기반해서 독일 歷史의 새 時代를 열 것인가 하는 것이다.

---

26) Ibid. July 3, 1990.

東北亞의 勢力均衡과 韓半島 平和展望

김 달 중
(연세대 교수)

Ⅰ. 동북아 세력균형에 있어서 최근의 변화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국제관계는 南韓과의 관계증진을 모색하려는 소련과 중국의 욕망에 의해서 始作된 일련의 變化들을 경험하고 있다. 강대국간의 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데땅트"의 시작은 새로운 기회들을 제공하여 왔고, 中國과 소련 사이의 쌍무관계 역시 1989年 5月에 있었던 정상회담이래로 잠정협정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1989年 12月의 말타 정상회담이나 더 최근에는 1990年 6月의 미·소 정상會談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美國과 소련 양국은 동유럽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럭저럭 안정된 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와 동시에 1988年 10月에 노태우 대통령이 統一에 관한 소위 "7·7 선언"에 기초하여 두 개의 韓國사이에 긴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한데 덧붙여 南韓이 특히 北方政策을 선언했던 것은 南韓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90年 6月 4日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과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쵸프 대통령과의 歷史的인 만남은 南韓과 소련과의 關係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이라는 맥락에 있어서도 중요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變化는 1989年 2100억 美國 달러의 GNP로 세계에서 13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經濟力을 통해 南韓이 急浮上하게 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듯 그 새롭게 증대된 지역적 그리고 世界的 역할에 기초해서 南韓은 소련, 중국, 그리고 동유럽 國家들을 포함하는 社會主義圈과의 關係를 확장시켜왔다. 동독과 알바니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유럽 國家들은 韓國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몽고도 역시 서울과 外交的인 관계를 수립하였다.[4]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美國과 韓國間의 關係에 있어서도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동맹관계는 政治的으로 성숙해지고 있고, 變化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위축된 美國의 經濟力, 부채와 무역적자, 그리고 중앙 아메리카, 중동, 페르시아만에의 지나친 개입등의 결과로써 나타나고 있다. 이제 韓國과 美國 양국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그렇다면 과연 동북아시아의 힘의 배치상황에 있어 일어난 최근의 變化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주요 강대국들 내부에서의 變化하는 국내 政治的 추세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外交的 행위수단으로써 軍事力이나 이데올로기를 중시하지 않는 경향도 들 수 있을 것이다. 南韓의 경우에 있어서, 變化를 가져오는 추가적인 요소들 속에는 變化하는 政治的 상황, 社會主義圈과의 關係의 개막, 그리고 韓國과 美國의 동맹관계에 있어서의 變化가 포함된다.

세계대전 以後의 시대에서 世界政治의 가장 대표적인 국면은 봉쇄정책의 출현이었으며 이는 닉슨 독트린下에서 變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30여년동안 美國의 전략을 반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의 여

파로 美國이 재평가된 以後에 그 지역적인 분위기 역시 變化하기 始作하였으며, 동북아시아 4강들도 그들관계에서의 외교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로 脫이데올로기化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과 中國의 경우에 國內 政治的, 經濟的 改革의 착수는 脫이데올로기化의 과정을 가속화시켰고, 1978年以後 中國에서의 4개 현대화 선언이나 1985年 以後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始作은 모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춘 것이었다.

최근에 이르러서,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고르바쵸프의 소위 '신사고' 政策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國家들 사이에 社會 經濟的 구조, 政治體制와 가치,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쟁적인 國家利益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등을 기초로 하여 모든 國家들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할 必要性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또다른 유사한 발전이라면, 4강들 각자가 政治的, 經濟的 발전을 포함하여 국내의 問題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은 美國의 經濟的 能力의 상대적 하락에 따라서 그의 전세계적 군사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시켜야 할 必要性이 주어졌을 때 가시화되어왔다.

世界 GNP에서 美國이 차지하는 몫은 1945年의 50%에서 1987년에 23%로 하락하였다. 무역적자도 1987年에는 1700억 미국달러를 기록하였다. 1988年에 부채적자는 1500억 달러를 기록했다. 워싱톤의 防衛費 지출은 1980年代의 10퍼센트보다 높은 연간 성장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로써, 美國의 부시 행정부는 美國의 주요한 전략적 이해를 재평가하고 전체적인 전략적 위상의 수단과 目的을 균형지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國內的 상황의 改革에 대한 강조는 소련과 중국에서 좀 더 날카롭게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는 다름아닌 그들 각각의 經濟體制를 근본적으로 改革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양 국가의 지도력에 의해서 보여진다. 그러한 명백한 國內的 과제에 근거해서, 소련과 中國 양국은 쌍무간에 긴장을 완화시킬 명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1989年 5月 中國과 소련의 정상회담은 이 두 거대공산국들 사이의 점진적인 和解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러한 變化는 1987年 12月 INF협정을 조인함으로써 강조되었던 것처럼 美國과 소련 사이의 "새로운 데탕트"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현상의 출현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美國과 소련 그리고 中國과 소련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이러한 變化들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혹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나아가서 南韓의 政策位相은 이러한 變化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變化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하다.

美國과 韓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명백한 變化, 즉 韓國이 그의 안보와 經濟發展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美國에 의존하고 있다는 견해로부터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동맹이 좀 더 균형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견해로의 變化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美國에 대한 韓國의 인식이 좀 더 客觀的으로 되는 것과 같은 變化가 일어날 수 있으며, 때때로 美國에 대한 좀 더 비판적인 견해가 더욱 우세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Ⅱ. 강대국의 對아시아 政策

위와 같은 견해에서 보자면, 美國, 소련, 中國과 日本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變化들을 좀 더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그러한 견해는 南韓에 대한 政策的 영향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우선, 美國은 제 2 기 부시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일련의 變化過程을 겪어왔는데, 美國의 아시아태평양 政策은 1988年 1月의 政策 지침에서 윤곽이 드러났던 것처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美國과 日本과의 關係를 강화하고, 공동 防衛費 부담에 있어서 日本의 몫을 증대시키며, 그리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둘째, 南韓內에 美國軍을 계속해서 주둔시킴으로써 韓國과 美國間의 동맹을 유지하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셋째, 강력하고 안정된 中國의 존재는 美國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下에 中國과의 友好關係를 계속해서 유지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네째, ASEAN 구성국가들과의 전통적 關係 역시 계속해서 유지시킨다. 다섯째, 베트남의 철수와 더불어 캄푸치아 사태를 예의주시한다. 그리고 여섯째, 뉴질랜드와의 政治的 불화에도 불구하고 ANZUS 關係를 강화함으로써 남태평양에 있어서의 美國의 利益을 대체로 유지시켜 나간다.

동시에 부시 행정부는 많은 經濟的 問題들을 시정해야 할 必要性에 의해서 강조되었던 것처럼 상호 안보의 개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美國에게 있어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이 점점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좀 더 세련되고 정제

된 政策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확실히, 과거 몇 년동안에 걸쳐서 이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발전 중의 하나는 고르바쵸프下 소련에 의해서 보여졌던 강력한 對아시아 주도력이었다. 1986年 6月에 있었던 그의 블라디보스톡 演說에서 볼 수 있듯이, 고르바쵸프는 소련이 이 지역의 한 부분으로 등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政策을 선보였었다. 더욱이, 1988年 9月의 그라스노야르스크 政策演說을 토대로 해서, 고르바쵸프는 특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國家들이 새로운 안보개념을 촉진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적극적인 東方政策은 이 지역의 市場經濟와 經濟關係를 확대해야 할 必要性과 더불어서 추구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소련이 PECC (태평양 경제협력 위원회)에 옵저버로 참가했던 일이나, ADB (아시아 개발은행)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려고 시도했던 일들을 상기시킬 수 있다. 강대국의 해군군비경쟁에 있어서의 대폭적 減縮과 함께 태평양 地域의 비핵화에 대한 요구와 같은 일련의 外交的 주도권과 관련하여, 고르바쵸프는 필리핀,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그의 外交的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민하게 손을 썼다.

南韓에게 있어서는, 모스크바가 南韓과 새로운 關係를 발전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보내왔던 1980年代 중반이래로 소련과 北韓사이의 밀접한 軍事關係의 發展이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中國의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中國의 國內經濟를 개선시킬 必要性으로 인하여 그 국경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問題였다. 中國은 계속해서 소련을 조심스럽게 상대했던 반면, 南韓과는 빠르게 쌍무

간 對話를 촉진시켰고, 통상관계를 확장시켜왔다. 실제로, 4개 현대화의 선언이후 中國과 ASEAN 국가들과의 무역량은 상당한 정도로 급증되었다. 中國의 전체적인 전략적 태도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中國은 美國과의 關係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계속해서 보지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편 그 남쪽 측면,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에 있어서 긴장을 완화시킬 것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世界에서 가장 강력한 經濟大國 중의 하나로써 日本이 부상하게 된 사실이 강대국간 關係 變化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3500억 달러의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日本은 현재 가장 큰 공식적 發展援助의 기증국이다. 그러한 發展과 관련하여 日本은 그 外交的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으며, 이는 日本의 防衛能力의 새로운 구축으로 이끌어지고 있다. 日本의 軍事豫算의 규모는 世界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이전 수상인 나카소네와 다케시다, 그리고 현 日本政府가 日本은 결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규정을 어기고 軍事力 증강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질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이 모든 동북 아시아 국가들과 연관되는 새로운 地域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Ⅲ.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고찰

한반도가 분단된 것은 제2차 世界大戰 以後 등장한 미-소 양 강대국의 競爭과 더불어 남쪽과 북쪽에 두개의 다른 政治體制가 설립된 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 양자간에 잇

따르는 政治的, 經濟的, 이데올로기적, 軍事的 대결상황은 한반도에 있어서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는 것이 戰後 世界政治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問題중의 하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南北間에 政治的, 軍事的 問題에 촛점을 둔 對話에 착수해야 할 必要性은 한반도에서 근본적으로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 추가적으로 두개의 韓國이 종국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길에 있어서 장기적이고 중요한 필수조건은 바로 統一이다. 이러한 "韓國 問題"는 크게 두가지 영역, 즉 국제적 차원과 韓國內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두개의 韓國을 統一시키는 것에 대한 이러한 두가지 모델 中에서 이 절에서는 國際的 차원에서의 解決方法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겠다.

1988年 10月에 있었던 UN총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保에 관한 "6자회담" 제안을 발표하고, 이 회의에 美國, 소련, 中國, 日本 그리고 南北韓이 모여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와 관련된 問題들을 토의하자고 제의하였다. 본질적으로, 한반도에서 平和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平和는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美國 방문기간동안, 그는 南北韓間에 긴장완화를 모색하는 것은 6개국 모두의 利益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6개국 모두는 한반도에서 平和를 촉진시키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한반도에서의 平和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한 努力의 하나로써 南北韓 사이의 政治的 對話와 군비통제에 관한 최근 北韓의 제안

들에 주의를 기울여보는 것이 필요하다. 평양측의 경우에, 고도로 戰爭準備狀態를 유지해야 할 必要性이 그들의 經濟에 매우 심각한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그리하여 南韓측에 일련의 "새로운 제안"들을 촉구함으로써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특히, 北韓은 1974年 이래로는 휴전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美國과 北韓사이에 직접적이고 쌍무적인 對話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984年 以後로는 한반도에 平和를 지속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南北韓間 상호 불가침 협정과 美國과의 평화협정을 조인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아직까지 필요하다면 무력에 의해서 한반도를 統一시킨다는 그들의 기본 政策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南韓은 軍事的 위협의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신중한 對話가 필수요건인 반면, 그것은 반드시 統一問題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있다. 南北韓間의 점증적인 화해의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점진적 過程을 통한 統一

둘째, 統一에 이어지는 平和의 보장

세째, 1972年 7月 4차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원칙에 근거한 統一

네째, 北韓의 통일제안에 대한 점증적 고려와 수용 가능성 타진

다섯째, 政治的, 軍事的인 상호 신뢰구축방안

여섯째, 상호 균형의 인식

일곱째, 상호 타협을 통한 긴장완화

여덟째, 여론의 지지와 토론에 근거한 統一政策의 형성.

Ⅳ. 남북한간 신뢰구축의 과정

앞의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있어서의 平和와 安保를 유지시키는 過程을 "韓國化"해야할 必要性이 있으며, 그러한 過程은 南北韓間 상호불가침 협정에 뒤따르는 의회수준에서의 직접적인 토론을 포함해야 한다. 다른 수단들은 대표교환을 포함할 수도 있다.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과 같은 상호 신뢰구축방안의 過程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협정의 실행여부를 감독하는 南北韓 협력체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두 개의 韓國 사이에 일련의 협상에 근거하여 그러한 일단계 진전이 성취되면, 그 다음 단계는 韓國에 있어서 美國軍隊의 미래 위상을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 가장 적절한 방법은 아마도 南北韓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초기에 군비축소의 방법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南韓으로부터 미군을 점차적으로 철수하는 방법일 것이다. 平和協定의 체결은 노태우 대통령이 UN 연설속에서 6자회담을 토대로 하여 주창했었던 형태들 中에서 가장 현실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한 단계를 거친이후, 그 다음 단계로는 두개의 國家를 하나의 연합아래 두는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그것은 平和統一의 원칙과 南北韓 정상회담, 그리고 광범위한 問題의 폭넓은 토대로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에 있어서 平和와 安定을 촉진시키는 국제적 차원의 요소 역시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휴전협정을 變化될 必要性이 있다. 그리고 이는 두 韓國을 포함하는 쌍무적 수준을 토대로 하든지, 혹은 한 편에 北韓과 中國을 그리고 다른 한 편에 南韓, 美國, 日本을 포함시키는 다변적 수준에 기초하든지, 아니면 제 3 의 방법으

로 南韓, 美國, 日本, 北韓, 소련, 그리고 中國을 포함시키는 수준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번째의 대안은 강대국을 고려해 넣지 않은 關係로 해서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

歷史的인 맥락 속에서 본다면, 우리는 제1차 世界大戰 以後에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의 平和를 유지시키려 했었던 모델로써 로카르노 협정을 상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듯 平和를 유지하기 위한 다변적인 過程 속에서 중요한 요소는 南北韓에 의해서 법령화된 상호신뢰구축방안의 보장일 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의 비무장지대는 4개 강대국들로 구성된 국제구성체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관련국가들과의 協定下에서 유지되는 중립적 평화유지세력에 의해서, 혹은 UN의 평화유지세력에 의해서 감독될 수 있는 것이다.

外交的 측면에서 고찰해 볼 때, 南北韓間 긴장완화에 있어서 중요한 發展中의 하나는 1974年 Henry Kissinger에 의해서 처음 착수된 소위 南北韓 교차승인정책의 실행이다. 이러한 교차승인 정책에서는 소련과 中國이 南韓을 승인하고 美國과 日本이 北韓을 승인하게 된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南北韓이 사전협정에 의거하여 UN에 동시가입하는 것도 포함된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되었던 최근의 노태우-고르바쵸프 정상회담의 결과는 소련의 對韓半島 政策이 한반도내에서 두개의 韓國을 인정하는 쪽으로 명백하게 전환했음을 나타내준다. 모스코바의 태도에 있어서 이러한 變化는 中國으로 하여금 親北韓政策을 재검토하도록 촉구하게 될 것이다.

소련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平和政策을 위하여 中國으로 하여금 南韓과의 關係를 개선하도록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경측이 궁

극적으로는 교차승인의 공식을 승인하리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예견해보자면, 中國의 對韓國政策은 北韓을 향한 美國과 日本의 움직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日本은 이미 北韓과 關係를 정상화할 의도를 표명한 바 있다. 워싱톤측도 역시 北韓과 화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경주재 미국영사가 北韓측 영사를 지금까지 11번이나 만나서 양국간의 問題를 토의했었다. 더욱이, 평양측은 南韓의 北方政策으로 인해서 北韓측에 가해진 外交的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동경과 워싱톤과 關係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 대안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음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地域的인 平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반도에서 平和와 협력을 政策시키기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 地域에 관련된 모든 국가들은 南北韓間의 發展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南北韓間 그리고 地域적 협력을 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 위해 그들의 努力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北韓體制의 變化展望과 金日成의 孤獨한 選擇

서 진 영
(고려대 교수)

Ⅰ. 序 論

現在 우리는 社會主義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례없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련의 事件을 지켜보고 있다. 동유럽國家들의 극적인 變化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사회주의 政治體制는 자유화, 민주화, 개방화에 대한 인민의 革命的 요구압력에 의해 붕괴되었다. 소련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진척시키는 過程에서 좀더 다원주의적인 政治體制와 시장지향적인 經濟로 움직이고 있다. 中國의 改革推進은 비록 천안문사건을 통해 "색깔"을 變化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지도자의 무상에 의해 심각한 좌절을 經驗하고 있지만, 많은 서방관찰자들은 中國이 經濟改革을 지속시키는 이외의 선택대안은 없으며,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中國의 정체와 社會의 民主化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社會主義國家들을 휩쓸고 있는 이러한 變化를 고려할 때 브레진스키(Brezezinski) 교수의 지적처럼 공산주의의 政治·社會·經濟的 經驗은 '대실패'로 끝났으며,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들은 미래에는 다소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1] 그러나 이러한 전환과정은 결코 순

1) 공산주의의 거역할 수 없는 歷史的 쇠퇴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Zbigniew Brezezinski, *The Grand Failure* (New York, 1989)

조롭고, 지속적이며, 한결같지는 않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이러한 전환과정은 상이한 길을 취하고 있으며, 종종 불연속, 상호모순, 그리고 폭력적인 격변으로 特徵되고 있다. 예를 들어 對外的으로 약속된 中國의 改革過程은 1989年6月 천안문 유혈사건의 악몽을 발생시켰으며 루마니아의 變化過程은 군부와 결합된 인민봉기가 독재를 붕괴시킴으로써 시작되었다.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革命的 變化를 놓고,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提起하고 있다. 즉 과연 北韓은 變할 것인가? 동구와 소련에서 일어났던 變化가 北韓에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가? 만약 동구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革命的 變化를 北韓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우리는 北韓指導者가 1980年代에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가 했던 어느 정도의 體制改革을 가까운 장래에 도입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제 의문에 대해 北韓은 스탈린주의체제를 급격하게 해체하는 이외의 選擇代案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낙관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왜냐하면 北韓指導者들은 現在 社會主義圈을 강타하고 있는 變化趨勢를 무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生活水準과 政治的 自由에 대한 인민의 요구를 더 이상 억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北韓의 經濟는 파국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經濟狀況의 改善과 인민의 "의·식·주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적어도 중국형의 經濟改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본 論稿의 입장은 김일성의 主體思想에 기초하고 있는 北韓社會主義體制가 너무나 確固하게 北韓社會에 고착화되어 있기때문에 전체적인 주체체제의 포기없이는 어떠한 改革도 도입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체사상이 너무나 경직되어서 北韓指導者들이 어떤 變化를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北韓은 主體體制의 한계내에서 가능한 모든 變化를 시도할 것이지만, 근본적인 變化는 새로운 革新的 指導者가 出現할 때 可能할 것이다. 이러한 立場을 정교화하기 위해 本稿는 1) 소련과 中國에 있어서 급격한 變化를 容易하게 했던 요인들이 北韓에 있어서는 결핍되어 있다는 점, 2) 1980年代에 취했던 北韓의 改革·開放은 北韓經濟와 理念의 基本的 틀에 대한 실질적인 變化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되었다는 점, 그리고 3) 이러한 냉담한 改革으로 인해 北韓은 점차적인 쇠퇴와 심각한 주체체제의 몰락을 겪을 것이며, 이는 결국 김부자의 계승을 교체시킬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Ⅱ. 무엇이 中國과 소련에서의 改革을 可能하게 했는가?

現在 社會主義圈에서 진행되고 있는 '大變革'은 '새로운 사고'를 옹호하면서 집임자의 理念과 政策으로부터 결별을 선언한 고르바초프와 등소평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사실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소련에서의 진정한 革命은 고르바초프가 1985年 소련공산당 서기장이 된 以後에 격렬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中國에서의 廣範한 經濟構造의 變化도 등소평을 중심한 改革派가 1978年 權力을 장악한 이후에 일어났다. 비록 中國의 改革展望이 最近 보수파지도자들의 부상으로 인해 약간 주춤거리고 있을지라도, 등소평하의 中國은 모택동하의 中國에서 근본적으로 이탈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소련과 中國에서 이러한 급격한 改革을 가능케 했는가? 北韓에서는 결여되어 있지만 소련과 중국에서는 제2革命을 容易하게 한

어떤 요인이 있는가?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감이 있지만 모택동이후의 中國과,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련에서 급격한 改革을 가능케 했던 몇가지 중요한 變數가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經濟的 富와 政治的 다원주의에 대한 점증하는 인민의 요구에 체제가 부응하지 못했다는 살을 에는 듯한 자각이 있었다. 특히 經濟的 失敗가 社會主義에 대한 廣範한 인민의 불만을 초래케 한 계기가 된 것 같다. 事實 소비에트형경제는 소련과 中國에서 심각한 구조적 問題로 장기적인 경제침체를 가져왔었다. 예컨대 소련의 경제성장은 1950年代後半부터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는바, 1984年과 1985年 소련의 국민소득성장은 전후의 전기간을 통해 가장 낮은 수준인 2.4%와 3.1%를 각각 기록했다. 中國 또한 經濟成長의 후퇴추세를 나타냈다. 예를 들어 1952부터 1974年까지 中國의 平均經濟成長率은 거의 4～6%에 달했으나, 1970年代 後半 들어 2～3%로 하락하였다.[2)]

이러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결과로서 이른바 '社會主義經濟'는 서구 자본주의보다 뒤떨어진 것이며, 인민의 '의·식·주' 問題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실제로 소비수준은 經濟成長率의 감소와 투자율의 증가로 인해 매우 낮은 비율로 증가되어왔다. 그 결과 인민의 생활수준은 1950年代後半보다 1970年代後半이 결코 높지 않았다. 따라서 인민들이 社會主義 體制에 대한 確信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確信에 대한 위기를 1976年 등소평은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

2) Boris Rumer, "Realities of Gorbachev's Economic Program," in *Problems of Communism* (May-June 1986), P.20. ; Dwight H. Perkins, "Reforming China's Economic System," i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26 (June 1988), p. 602.

하고 있다.

"…지난 25年동안 우리의 産業, 農業, 國防, 科學, 그리고 기술등은 發展하지 못했다. 25年동안 우리는 '최고의 상황이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한다면 누구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 3)

물론 社會主義에 대한 確信의 위기는 지속적인 經濟的 失敗에만 그 原因이 있는 것은 아니다. 經濟的 失敗와 함께 인민들이 정치·사회적 단조로움만을 만들어 내는 理念的으로 고립되고, 관료적으로 中央集權化된 社會主義 體制에 대해 점차적으로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따라서 '변화'는 모택동과 브레즈네프의 死亡과 더불어 거의 불가피한 것이었음이 명백하다.

소련에서는 브레즈네프의 거의 20여년의 기간동안 너무나 많은 '모순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산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수파지도자들까지도 變化의 必要性을 인정하였다. 모택동과 그의 좌편향적 추종자에 의해 추진된 대약진과 文化革命과 같은 '대재앙'을 겪었던 中國에서도 등소평이 1970年代 後半 廣範한 改革을 推進하는 것은 매우 쉬운 것이었다. 요컨대 모택동이후의 中國과 브레즈네프이후의 소련에서는 정치엘리트 뿐만 아니라 인민들사이에서도 改革의 긴급성과 必要性을 공통적으로 자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變化, 改革, 그리고 革新에 대한 共同的인 자각이 존재했다고 해

3) Christoper Howe, *China's Economy* (Basic Book, Inc., 1978), p. 31에서 재인용.

서 그 당시 소련과 中國의 狀況에서 第2革命이 불가피하게 파생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딩(Harry Handing)교수가 中國改革政治의 背景과 前後關係를 분석하면서 지적한 바와같이 "改革은 등소평과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되는 改革指向的 指導者들의 연합에 의한 비상한 政治的 공작의 결과인 것이다."[4] 결국 제2의 革命은 또 다른 "위로부터의 革命"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진정한 改革은 구정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指導者들의 부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적되어야 한다. 실제로 中國에서는 모택동의 死亡과 좌파지도자들의 추방을 통해 改革指向的 指導者들의 부상이 가능했으며, 소련에서도 1985년 고르바초프와 같은 새 지도자가 권력을 장악할 때까지 실질적인 改革이 연기되어 왔었던 것이다.

브레즈네프의 직계후계자인 유리 안드로포프(Yuri Andropov)와 콘스탄틴 체르넨코(Konstantin Chernenko)도 쇠잔해 가는 소련체제를 부활시켜야 할 必要性을 자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 나름대로 改革을 시도했던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안드로포프는 1982年 權力을 獲得한 직후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중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시도할 것과 침체와 타락속에 빠져 임시미봉책에 급급한 브레즈네프의 政策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하였다. 체르넨코 또한 1984年 "소련경제의 重大한 재편"을 공언하였던 것이다.[5]

그러나 이와같은 그들의 개혁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시한 프로그램은 그 範圍에 있어서 한계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련공산당의

4) Harry Harding, *China's Second Revolu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7), p.2.

5) Ernst Kux, "Contradictions in Soviet Socialism," in *Problems of Communism* (November-December, 1984), pp.1-4.

주요정책들을 충실하게 지속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드로포프가 보다 나은 "조직, 질서, 그리고 訓練"을 주장했을때 그의 목적은 體制를 改革하는데 둔 것이 아니라 體制를 더욱 效率的이고 근대화시키는데 두었다. 체르넨코가 "이미 성취한 모든 것"을 방어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는 그가 브레즈네프의 유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다.

中國의 경우 화국봉도 1976年 모택동의 後繼者가 되었을 때 중국인만이 政治正常化와 經濟發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었다. 따라서 그는 '秩序'의 회복을 강조했으며, 중국경제발전을 위한 야심적인 10개년 計劃을 發表하였다. 그러나 마지못해 改革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긴 그의 전략은 점증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마침내 모택동의 유산을 완전히 제거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붕괴하고 말았다.[6]

체르넨코와 화국봉의 失敗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정한 改革은 前任者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에 기초하여 정통성을 보장받는 후임자에게서는 기대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表現하면, 中國과 소련에서의 第2革命은 過去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지도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들 改革指向의 指導者들은 이들 國家에서 긴 改革運動의 歷史속에서 생겨났던 것이다.

소련은 스탈린이전시기부터 최고지도자들간의 중대한 政策論爭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며, 흐루시초프는 스탈린의 유산을 제거하기 위한 중대한 시도를 한 바 있다. 中國 또한 "2대노선간의 鬪爭"이라는 유명한 역사를

6) Harry Harding, *op. cit.*, pp. 53-57.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이 모택동지도노선과는 전혀 다른 대안적 지도노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련과 中國에서의 "새로운" 지도력의 부상은 이들 양국의 改革運動의 歷史속에서 생성·성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왜 北韓에서는 진정한 改革이 可能하지 않는가?

만약 中國과 소련에서 실질적인 改革을 가져온 원인이 體制의 약점에 대한 자각, 改革指向的 지도자의 출현, 그리고 改革運動의 전통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결합에 있다면, 우리가 갖는 의문은 과연, 北韓에는 改革을 容易하게 하는 이러한 요인들이 존재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北韓의 정치엘리트와 주민들이 자신들의 體制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北韓의 주체체제의 성과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北韓의 主體體制에 대해서는 두개의 아주 상반된 이미지와 주장, 즉 "지상낙원"으로서의 北韓과 "악의 왕국"으로서의 北韓만이 存在할 뿐이다.

예를 들어, 北韓指導者들은 종종 北韓이 세금, 빈부, 도둑, 그리고 약물중독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幸福하게 살고 있는 인민들의 '天國'으로 變化되었다고 옹호하곤 한다. 또한 北韓에서는 國家가 一般醫療保健體制의 수립, 住宅補助, 식량배급, 그리고 9등급의 자유교육체계를 통해 모든 인민에게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北韓은 國家가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속에서 인민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社會主義國家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묘사와는 대조적으로 가혹한 묘사도 存在한다. 예를 들어 美國務省은 1985年 연례인권평가보고서에서 北韓政權을 "김일성 한 사람과 그의 가족에 의해 嚴格하게 통치되는 완고한 공산주의 독재정권"으로 묘사했다. 이 評價報告書에 의하면, 北韓은 "社會革命을 강제하고 통치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인민의 만장일치적 지지를 강요하는데 그 目的을 둔 조선노동당에 인민의 제 권리가 종속되어 있는"[7] 전형적인 전체주의 國家이다. 여기에다 종종 北韓의 經濟는 1960年代 後半 혹은 1970年代 初半以後 역동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으며, 그 結果 南韓經濟에 뒤떨어졌으며, 인민의 "의·식·주"問題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北韓 社會主義體制는 오로지 보다 나은 生活水準과 보다 많은 自由에 대한 인민들의 要求를 계속해서 억압함으로써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北韓體制에 대한 이와 같은 상반된 시각을 감안한다면, 北韓의 정치엘리트와 인민대중이 자신들의 體制에 대한 改革 必要性을 어느 정도로 자각하고 있는지를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北韓 또한 소위 계급없는 社會를 건설하는 過程에서 現實과 理想間의 격차가 커져가고 있다는 事實에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北韓은 全 住民에게 "계급없는 社會"속에서 豊富한 물질적, 文化的, 惠擇을 약속했다. 北韓側의 說明에 따르면, 이러한 약속은무료 醫療惠澤, 무

7) U.S. Information Service, Seoul, "Human Rights Report fo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Background* (Feburary 21, 1986), p.1; Donal Stone Macdonald, *The Koreans: Contemporary Politics and Society* (Westview press, 1988), p.158. 에서 재인용.

료교육, 식량배급, 그리고 주택보조와 같은 다양한 政府支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實施함으로써 상당한 정도로 實現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黨과 國家의 官吏와 같은 특권적인 엘리트가 存在하는 것은 事實이지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제거하고,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8]

그러나 이러한 公正한 분배는 부의 公正한 분배라기 보다는 가난의 公正한 분배였음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北韓의 發展戰略으로 인해,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1970年代 初半부터 나타난 北韓經濟의 둔화추세로 인해, 北韓의 생활수준은 낮아졌다. 특히 南韓의 生活水準과 비교할때 北韓의 平均 生活水準은 매우 낮기때문에, 北韓의 指導者들은 최근들어 인민의 복지 개선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間의 커져가는 經濟的 不均衡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지금까지 어렴풋이 그것을 깨닫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경제침체추세는 北韓指導者로 하여금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보다 높은 生活水準에 대한 欲求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北韓體制의 經濟的 수행능력에 대한 인민의 불만과 함께 김일성 주체이데올로기에 기초한 北韓의 고도로 中央集權化되고 권위주의화된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의문이 점증하고 있다.

한 外國의 觀察에 따르면, "몇몇 지하저항단체가 김일성의 교리와 김정일의 政治後繼에 대항하여 조선노동당과 정부내에서 결성되어 存在한다"는

8)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北韓을 방문한 사람들에 의한 制限的인 觀察에 근거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C.I. Eugene Kim, ed., *Journey to North Korea: Personal Perception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California, 1983)

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통제되고 있는 北韓住民들가운데서 어느정도의 반대가 존재하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다"고[9] 이 觀察者는 말하고 있다.

실제로 北韓社會主義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北韓指導者로 하여금 重大한 變化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어떤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이것이 北韓人民들은 그들의 주체체제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김일성의 독재통치와 주체사상에 대항하는 정치엘리트와 주민들사이에서 몇몇 저항그룹 혹은 불만그룹이 존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따금 남한측 소식통은 北韓에서 지방소요와 정치분란이 발생했음을 보도하곤 하지만, 體制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이 중국과 소련의 경우에서처럼 重大한 改革을 유도할 만큼 그렇게 심각하다는 어떤 증거는 없다.

명백히 北韓은 인민들의 불만과 소요를 외부세계에 노출시키지 않는데는 성공한 것 같다. 또한 어떤 저항집단이나 불만그룹은 北韓에서 매우 작고 소리없는 소수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김일성의 통치에 저항할 만한 의미있는 기초가 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실제로, 김일성이 자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北韓은 어떠한 重大한 理念的 반대나 政治的 분파도 許容되지 않는 고도의 "유일적 主體體制"를 수립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또한 實際로 지도자들간의 분파투쟁이 1956年 김일성의 정권장악으로 종결된 이래로 어떠한 獨立的인 指導力이나, 김일성과는 다른 새로운 사고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소련과 중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北韓에서 중대

9) Tai Sung An, *North Korea in Transition* (Greenwood press, 1983) p.176.

한 變化를 주도할 革新的이고 獨立的인 지도력의 부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變化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김일성이나 김정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분석가들은 김정일의 정치후계가 北韓에서 중대한 改革運動을 격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버지인 김일성처럼 카리스마를 갖지 않고 있는 김정일이 인민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업적을 수행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정당화할 것이며, 그 결과 중대한 變化日程을 겪을 것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지도하의 改革可能性은 北韓에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이 增加하고 있다는 점과 이들 테크노크라트들은 경제문제를 보다 革新的이고, 실용적이며, 유연성을 갖고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이데올로적 자극보다는 물질적 자극에 의존할 것이며, 훨씬 지방자치적이서 덜 중앙집권적이며 소비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근거로 구체성을 갖는 것 같다. 실제로 세대교체는 김정일의 政治權力 移讓過程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 박재규에 따르면 김정일의 權力移讓構造는 다음과 같은 特徵을 갖고 있다.[10]

"1) 北韓의 權力移讓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의 權力移讓 以上의 意味를 갖는 바 그것은 세대의 교체를 의미한다. 2) 세대교체의 결과로서 1980年代 초반 많은 당원이 교체되었으며, 3) 이러한 세대교체는 장기적으로 政治的, 軍事的 교조주의에 影響을 줄 經濟的 실용주의와 개방정책을 수반하였다."

10) Je Kyu Park, et. al., eds., *The Foreign Relations of North Korea: New Perspectives* (Westview press, 1987), p.7.

김정일세대가 당, 행정부, 그리고 軍事部門에서 김일성의 게릴라동지를 대체했으며, 그 결과 김정일의 北韓에서는 관리적 테크노크라트엘리트들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들 테크노크라트들이 北韓에서 지배적인 세력을 형성하였고, 김정일세대와 테크노크라트들이 김일성의 세대보다 더욱 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證據는 없다.

종종 管理的 테크노크라트 지도력은 革命的 이데올로기의 명제보다는 더욱 복합적인 社會의 통치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北韓 주체사상에 기초한 政策들은 새로운 政治的 정통성을 모색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의 관료적 시각과는 점차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스탈린과 브레즈네프하의 소련에서 보는 바와같이 기술전문계층의 人口增加, 지위개선 그리고 영향력 증대는 강경하고 보수적인 당관료의 통치와 양립할 수 있거나 심지어 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11]

나아가 김정일은 結果的으로 自身의 아버지의 이데올로기와 政策路線을 거부하게 될 '새로운' 지도력을 대표할 수 있거나 代表하려 한다는 사실에도 의문이 있다. 김정일은 中國의 화국봉이 모택동의 思想에 의존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의 아버지의 주체이데올로기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의 권력계승은 그가 주체이데올로기를 보존하고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김정일이

11) 소련의 기술관료엘리트와 당관료와의 關係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 Kendall Biales, *Technology and Society under Lenin and Stalin : Origins of the Soviet Technical Intellig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7)

미래에 主體體制의 질적인 變化로 이어질 수 있는 한계적인 改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가까운 將來에 김정일이 등소평이나 고르바초프의 선례를 따를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요약컨대 어떠한 급격한 變化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지도력하에서는 기대될 수 없다. 왜냐하면 政治엘리트들 사이에 體制의 失敗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없으며, 현재의 北韓指導體制가 엘리트와 인민대중의 모든 資源에서 政治的, 理念的, 반대그룹을 成功的으로 제거했기 때문이다. 또한 現 北韓體制는 外部의 影響을 成功的으로 차단하며 주체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구유럽 國家들에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變化가 北韓에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나리라고는 기대되지 않는다.

Ⅳ. 北韓에서는 어떤 種類의 改革이 可能한가?

비록 北韓指導者들이 주체이데올로기와 主體政治體制를 포기하는 어떤 徵候를 보이지 않고 있을지라도 급격하게 變化하는 國內外的 環境에 北韓을 적응시키기 위해 약간의 한계적인 改革을 시도해왔었다. 명백하게 北韓은 主體體制를 變化시키도록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 現在 社會主義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상한 變化는 北韓으로 하여금 主體體制를 개방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동유럽국가들이 經險한 바와같이 北韓에서도 동일한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새로운 사고"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北韓은 또한 北韓住民들의 기대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體制能力間의 갭이 지속적으로 增大되어, 주체사상에 대한 "信賴의 위기"와 정치적 불안정이 야기될지도 모를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도전에 대한 北韓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주체이데올로기를 확고히 견지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主體經濟와 主體政治體制를 改善하기위해 몇가지의 조심스럽고 통제된 개혁조치들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이중적이었다. 北韓指導者들은 서구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의 經濟的 협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는 技術의 낙후, 資本의 부족, 그리고 낮은 産業生産性과 같은 經濟的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主體經濟가 계속해서 成長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1984年 합영법의 채택이후 北韓은 日本과 서구유럽의 企業들과 다양한 합작기업프로그램을 發展시키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南韓企業과 금강산개발에 합의했었다. 1988年에는 둔화된 합영기업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무원내에 합영기업부를 설치하였다. [12]

北韓經濟를 外部世界에 개방하기 위한 努力과 함께 北韓指導者들은 北韓의 중앙집권화된 經濟體制를 개혁하는데 目的을 둔 몇가지 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예를들어 金正日이 1984年 3月 "企業의 독립채산제"를 엄격하게 적용시킬 것을 요구한 이래로 北韓은 점차적으로 국영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강화시켜 왔으며, 의사결정과정에서의 經濟的 기준의 사용과 노동자에 대한 物質的 인센티브를 장려해 왔었다. 따라서 北韓의 企業들은 노동, 장비, 資源, 그리고 자금에 대한 더 많은 결정권이 허용되었으며, 생산증대에 대한 초과이윤의 50%까지를 福祉利益과 보너스로 활당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

12) 지금까지 北韓은 外國投資의 유치를 거의 진척시키지 못했다. 實際로 대부분의 합작기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며 大部分 日本의 조총련 出身과 소련출신의 파트너만이 參與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또한 北韓은 최근에 금강산의 合作開發프로그램을 취소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다.[13] 또한 社會主義建設의 영광속에서 온 정력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北韓 指導者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의미있는 징후가 있었다. 예를들어 1988年 12月의 勞動新聞社說은 "社會主義經濟의 指導와 經營에 있어서 政治·도덕적 자극과 物質的 인센티브의 혼합"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이와같은 物質主義路線과 관련하여 1989年 7月에 개최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직전에 北韓의 모든 노동자들은 한달치 임금의 보너스를 받았다.[14]

이 밖에도 北韓은 自由市場의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다. 1984年 金正日은 소규모의 자영노동자가 생활필수품을 生産하여 직접 소비자에게 규제되지 않은 價格으로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1985年 金日成의 신년사에서 北韓은 "工場과 企業內에 많은 일용생활필수품가게를 설립할 것이며, 일용잡화와 식품과 같은 일용생활필수품의 産出을 증대하기 위해 마을과 工場地域 및 협동공장내에서 家內作業班과 부업작업반을 광범위하게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 가게와 作業班들의 수는 北韓에서 증가한 것 같다.[15]

그러나 經濟政策에서의 이러한 變化에도 불구하고 北韓은 실질적인 중요한 體制改革을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北韓이 비록 1980年代에 들어와 개방과 유연성의 방향으로 명백히 變化하여 왔을 지라도 소위 '北

13) B.C. Koh, "North Korea in 1987: Launching a New Seven Year Plan," *Asian Survey* 28:1 (1988), p.63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14, 1986), p.100.

14) Kong Dan Oh, "North Korea in 1989: Touched by winds of change?" *Asian Survey* (Jan. 1990), pp. 75-76.

15)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28:12 (1988), pp. 1268-1271.

韓의 改革'은 그 범위가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北韓經濟와 이데올로기에서의 기본틀을 실질적으로 조금도 變化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北韓의 指導者들이 여전히 人民들을 동원하고 노동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政治學習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충분한 징후가 있다. 여전히 人民들에게 "20日 戰鬪"에서 "혁명적 영웅"처럼 열심히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몇몇 社會主義國家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쇠퇴와 수정주의에 대항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金正日은 이따금 급진적인 것처럼 보인다. "목숨을 다하여 영웅처럼 鬪爭하자"는 슬로건은 金正日에 의해서 창안되었다고 말해지고 있다.[16]

또한 北韓은 帝國主義에 대한 레닌주의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表示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北韓은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外交關係를 樹立하지 못한 西方資本主義國家들"과의 經濟的 교류증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색깔을 變化시킴으로써 야기될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 北韓이 레닌주의원칙의 시각을 잃은 社會主義 진영의 수정주의를 비난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1980年代初 北韓은 심지어 中國의 대일, 대미관계의 改善을 帝國主義에 의한 매수로 비난했던 것이다. 최근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국가에서의 급격한 變化에 의해 위협을 받으면서 환상에서 깨어나고 있는 北韓은 "반동적 부르죠아이데올로기와 帝國主義文化에 대항하는" 캠페인을 강화해왔다. 예를들어 1989年 7月 6日 勞動新聞은 北韓이 위협스러운 資本主義思想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社會主義體制의 우월성과 이데올로기학습의 必要性을 한 페이지분량에 걸쳐 옹호하였다.

16) B.C. Koh, *op. cit.*, pp. 39-45.

北韓에서의 이러한 상황전개를 고려할때 北韓指導者들이 1980年代부터 도입하려고 시도해 왔던 "改革"은 단지 마지 못해 시도하는 改革에 불과한 것이다. 즉 北韓이 시도하고 있는 '改革'은 主體思想을 變化시키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라 主體體制를 發展시키고 완성시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Ⅴ. 北韓은 어디로 가는가?

이 시기는 金日成에 있어서 잔인한 時間이었음에 틀림없다. 金日成은 동유럽국가에서 共産主義의 붕괴를 목격해야 했으며, 자신의 以前 同盟國이 잇따라 배반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했던 것이다. 현재, 金日成은 자신의 중요한 후원국인 소련이 자신의 적과의 關係를 승격시켜 머지않아 공식적인 승인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보면서 울분을 삼키고 있다. 다만 천안문사건만이 번창하는 資本主義와 강렬한 수정주의에 의한 北韓의 완전한 포위고립을 막아주고 있을 뿐이다. 비록 이 사건과 어떤 補償關係를 갖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中國의 대남한경제관계는 증대되어 왔다.

국내환경은 어떤 安定도 주어져 있지 않다. 몇몇 '改革'조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改革되지 않은 北韓의 經濟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 현재 北韓은 1993年에 끝나는 것으로 計劃된 7개년 經濟計劃을 수행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8年 3月 北韓指導者들은 "科學·技術發展을 위한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989年 6月 經工業을 진작시키기 위한 또다른 3개년계획을 채택하였다. 이들 두 計劃은 한편으로

는 근대화를 달성하겠다는 北韓指導者들의 의도를, 다른 한편으로는 人民들의 생활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北韓指導者들의 노력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現在 北韓이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北韓의 근대화와 經濟發展이 주체형 計劃經濟를 實質的으로 재편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達成될 수 있다는 點이다. 그러나 김일성·김정일부자세습을 實踐하는 過程에서 지도부는 經濟를 희생시킴으로써 주체체제를 安定시키려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指導者들은 김정일의 後繼를 준비하는 한편 "제국주의의 文化的, 理念的 침투"에 대항하여 政治·理念的 학습캠페인을 强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實際로 1989년을 통해 김정일의 個人崇拜는 계속해서 强化되었다. 例를 들어, 백두산은 "정일봉"으로 명명되었으며, 김정일의 꽃을 재배하기 위해 地方中心地마다 特別한 온실이 세워졌다.[17] 비록 서둘러 施行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김일성으로부터 김정일에로의 권력이양을 實現시키지는 못했지만, 이를 통해 김정일은 새로운 軍事的 地位로 승격되었다. 이는 명백히 김정일의 권력강화를 意味하는 것이다.

現在까지 北韓은 社會主義圈을 휩쓸고 있는 革命的 改革運動의 물결이 北韓의 주체형정치에 重大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成功的으로 對處해 왔다. 그러나 北韓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改革運動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소련의 最近 變化된 자세는 北韓을 당황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소련은 北韓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며, 수년간

17) Kong Dan Oh, *op. cit.*, p.77.

에 걸쳐 많은 쌍무적 연결관계를 수립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쵸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김일성으로 하여금 어느때보다도 "우리식대로 살자"는 그의 주장에 집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주체체제의 安定은 표면적인 것보다는 훨씬 부서지기 쉬운 것일지도 모른다. 사실 革命的 民族主義의 産物인 김일성의 主體理念은 냉전상황아래서는 政治的 正統性과 安定性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國內外的 變化가 이와같은 냉전이데올로기를 쓸모없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北韓은 주체이데올로기라는 마력적인 무기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체사상은 北韓을 외부세계에서 고립시키고 一種의 '봉건적 사회주의'를 만들어냄으로써 北韓의 보다 나은 發展을 위해 漸次的으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이데올로기와 주체체제가 보다 實用主義的 이데올로기와 체제에로 대체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김일성이 살아있는 한, 그리고 權力을 장악하고 있는 한, 北韓은 김일성의 주체이데올로기를 保存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이 指摘되어야 한다. 나아가 政治무대로부터의 김일성의 퇴장은 北韓에서 급격하고도 격렬한 變化를 격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일성이후시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

1)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인 김일성으로부터 成功的으로 권력세습을 이어받을 것이며, 또한 그는 김일성의 주체이데올로기를 再解釋하는 方法으로 김일성의 주체체제를 '改革'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경우 北韓은 漸次的으로 김정일지도체제아래서 後期革命段階로 돌입할 것이다.

2) 試險되지 않은 김정일의 지도력과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세습에 대한

대내외적인 잠재력 반대세력의 存在를 감안한다면 김정일시대는 中國型의 經濟改革을 신봉하는 强硬勢力의 연합형성을 통해서는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할 可能性이 있다.

3) 그 결과 격렬한 權力鬪爭이 김일성 以後時期에 發生할 것이며, 이러한 權力鬪爭은 政治安定과 經濟發展을 강조하는 군사정부의 출현을 야기시킬지도 모르는 것이다.

4) 時間을 초월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地方의 경제위기, 특히 식량부족은 廣範圍하고, 격렬한 인민봉기에 불을 붙일 수도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北韓에서의 공산정권의 붕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이후시기에 무엇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變化過程이 순조롭거나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北韓의 變化過程은 北韓에게 存在하고 있는 갈등의 격화에 의해 特徵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北韓에서의 變化는 김일성의 유산에서 비롯된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하나의 革命이 될 것이다.

韓國의 北方政策과 南北關係 展望

안 청 시
(서울대 교수)

1. 序 論

南韓은 최근 몇년동안 선거에 의한 권위주의 군사정권의 교체를 통해 광범위한 變化過程을 겪고 있다. 이러한 政治·經濟的 變化를 겪는 동안 南韓의 外交政策과 統一政策도 중대한 變化와 조정과정을 겪고 있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일련의 새로운 움직임과 관련하여 韓國社會의 發展과 경제성숙을 이에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事件들의 性格들을 세심하게 조사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는 외부관찰자에게 지난 몇년동안 韓國內의 政治와 對北韓關係를 설명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결론에서는 平和와 統一問題에 대한 南北韓關係의 전망에 촛점을 두어 향후 한반도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평가하고자 한다.

2. 南韓의 民主化

1987年 6.29民主化示威는 그 당시 전두환대통령에게 양보와 새로운 선거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그 당시 전두환대통령이 지명하였던 현 노태우대통령은 6.29民主化宣言을 통해 민주변혁의 기초를 열었다.[1] 새로운

憲法이 공포되었고 대통령선거에의 출마와 참가를 위해 중요한 政治犯의 석방과 함께 1987年 12月 대통령직선선거를 실시하였다. 여당인 民主正義黨의 노태우후보가 유효투표의 37.9%를 획득함으로써 승리하였다. 김영삼과 김대중후보는 야당후보의 단일화에 실패함으로써 야당에 던져진 총 55.9%유효투표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했다.

國會議員總選이 1987年에 채택한 신헌법에 의해 1988年 4月 26日 실시되었다. 선거결과는 세야당에 유리한 의석배분을 가져왔다. 집권여당은 舊憲法下에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行政府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國會에서 명백한 다수를 획득하는데 실패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집권여당인 民正黨의 다수획득실패와 야당우위의 國會가 政治의 교착상황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였었다. 효율적인 立法活動과 行政活動은 세 야당의 우위에 의해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당체제는 1990年 1月 광범한 정계개편이 일어날 때까지 불안한 政治的 균형을 유지해 왔었다.

政界改編은 하나의 거대한 여당연합을 형성하는 3당합당을 가져왔다. 즉 民正黨, 김영삼이 이끄는 統一民主黨, 그리고 김종필이 이끄는 新民主共和黨의 합당에 의해 國會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는 새로운 여당인 民主自由黨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거대한 民自黨의 형성은 政府에게 강력하고 광범위한 기반을 가진 다수당을 형성시켜 줌으로써 지속적인 政治改

1) 제5공화국의 몰락과정에 대한 자세한 分析은 다음을 參照할 것.
"Korean Politics in a Period of Transition," in Jhon W. Langford and K. Lorne Brownsey, eds., *The Changing Shape of Government in Asia-Pacific Region* (Halifax: The Institute for Research on Public Policy, 1988), pp. 21-42.

革과 빠른 경제회복을 위한 역동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게 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었다.

새로운 거대여당인 民自黨은 상당한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여 탄생되었다. 政治改革과 民主化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던 시점에 탄생되었던 것이다. 民自黨의 지도부는 安定과 보다 빠른 民主化에 대한 참신한 政治的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통치권의 효율성과 풍부한 政治力을 보여 주어야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3당합당은 國民이 요구하는 安定的이고 책임감 있으며, 믿고 의지할 만한 政治指導力에 걸맞는 정체성과 단합을 수행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시시하고 파당적인 내부분열만이 종종 들려오고, 時間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징후가 첨예화되고 있는 것 같다. 보수적인 3당합당이 있은지 석달만인 4月 3日의 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民自黨은 빈약한 지지율로 인해 심각한 좌절감을 겪었다. [2]

南韓의 政治와 民主化過程은 여전히 가야 할 여정을 남기고 있다. [3] 社會의 몇몇 계층, 예컨대 노동자, 大學, 가난한 자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채 남아있어, 잠재적인 폭발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民主化의 지연과 복합적인 性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어난 變化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지난 2年間은 긍정적인 政治發展과 外交的 성숙에 있어서 革命的이고 희망적인 期間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의 政府는 그

2) 3당통합은 보궐선거에서 전통적인 權力基盤인 대구지역에서는 간신히 1석을 유지한 반면에 음성, 진천지역구에서는 1석을 잃었다.

3) 南韓의 民主化를 向한 政治變革의 進行過程과 展望에 대해서는 다음을 參照할 것.
Chung-Si Ahn "The State and Economy under New Democracy: Korea's Democratic Transi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pers presented in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Roundtable, Seoul, Korea (May 22-24, 1990).

권력의 정통성과 권위를 정상적이고 秩序있는 民主選擧와 정권의 平和的 이양을 통해 부여받았음은 사실인 것이다. 民主主義의 양식과 市民自由의 범위가 第6共和國下에서는 놀라운 정도로 신장되었다. 國會는 行政權力을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제어하게 되었다. 언론은 어느 때보다 自由롭게 되었다.

民主主義를 더욱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改革과 진보를 위한 지속적인 政治的 주도, 法과 秩序에 대한 규율의 강화, 그리고 침체된 經濟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일어났던 變化는 韓國政治의 미래에 대해 보다 희망적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더욱이 第6共和國의 도래를 통해 韓國의 外交統一政策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는 點이 낙관주의적인 조망을 갖게 하는 부가적 사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韓國의 「北防政策」

1988年 9月 17日부터 10年 2日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24회 올림픽게임의 成功은 南韓의 外交政策, 특히 社會主義國家들과의 關係를 發展시키는데 황금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올림픽경기사상 가장 많은 160개국이 참가한 서울올림픽경기에서 共産主義國家들은 12年만에 비공산주의국가들과 경쟁하였다. 소련연방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동구의 7個國, 즉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가 참가하였다. 올림픽 개최국으로 韓國은 世界의 관객에게 世界的 수준의 經濟發展象을 유감없이 인상지워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共

産主義國家들에서 온 공식관계자들과 실질적인 협상을 하는데 성공하였다. 中國과 소련은 한국항공기가 自國의 항공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소련은 서울올림픽경기기간동안 서울에 임시영사 사무처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南韓政府는 특히 소련, 中國, 그리고 동구유럽國家들과의 關係改善을 그 目的으로 하는 소위 「北方外交」政策을 활기차게 진행시켰다. 北方外交政策은 한편으로는 서울의 무역상대를 社會主義國家의 미개척된 市場으로까지 확대시키는데 그 目的을 두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의 平和와 安保를 보장하는데 그 目的을 두었다. 北方外交政策은 또한 지금까지 한반도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고, 그 결과 韓國의 장기적인 목표인 民族統一을 새롭고 중대한 차원에 끌어 올렸던 것이다. [4]

南韓의 北方外交政策의 궁극적인 目標는 한반도의 平和的 統一을 성취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서울은 이 目標가 북한식의 "비현실적인" 革命的 統一政策에 의해 방해되는 것을 원치않았다. 따라서 서울의 일차적인 目標는 平和共存의 원칙하에 북한과의 정상적이며 平和的인 關係를

4) 이 부분의 사실과 해석은 주로 다음 저작에 의존하였다: Hak-Joon Kim, "The Northern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Origin, Developments, Prospects," *Wekyo* (Diplomacy), vol. 14 (June 1990), 14-27; B.C. Koh, "Seoul's 'Northern Policy' and Korean Security," *The Korean Journal of Defence Analysis,* Vol. 1, No. 1 (Summer 1989), 127-143; Chong-Sik Lee, "Political Change, Revolution, and the Dialogue in the two Koreas," *Asian Survey* vol. XXIV, No. 11 (November 1989), 1033-1042. ; National Unification Board, Republic of Korea, *A White Paper on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December 1988).

수립하는데 두었다. 南韓은 共産主義國家들과의 關係를 改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평양과의 關係를 改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南韓의 대공산권 화해정책의 起源은 1970年代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50年에 발생한 韓國戰爭이래로 약 20年동안 南北韓은 서로에 대한 강력한 적대전략을 유지시켜 왔었다. 지속적인 軍事的 긴장과 상호불신이 1950年代와 1960年代의 南北韓關係의 특징이었으며, 이는 주로 北韓이 "南韓내에서 폭력혁명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게릴라를 침투시켜왔던데" 기인하는 것이다. 韓國은 共産主義國家들과의 모든 접촉형태를 회피하였었다. 그러나 1960年代말 美國, 소련, 中國間의 데탕트무드가 도래함에 따라 南韓의 外交政策은 재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南北對話의 추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年 8月 "發展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을 시작하자고 北韓에 제기함으로써 「平和的 統一」의 시대를 예고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1973年 6月 23日의 연설에서 韓國의 대공산권문호개방을 제안함으로써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박정희대통령은 南韓이 특히 국제연합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北韓이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宣言하였다. 또한 그는 서울이 호혜와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共産國家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韓國과 共産主義國家들간에는 민간방문자들의 상호교류가 점차적으로 증대해 왔었다. 南韓企業家들의 共産國家들과의 접촉은 그 다음해부터 실질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南韓과 중화인민공화국은 1983年 5月 6명의 중국무장청년에 의해 납치된 중국민항기사건으로 인해 최초

의 정부차원의 협상을 가졌다. 1986年 서울아시안게임기간동안 中國은 가장 많은 운동선수단을 파견하여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1984年경 南韓과 中國과의 貿易은 北韓과 中國과의 貿易을 능가했다. 1987年에는 서울·북경간의 貿易額이 17억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평양·북경간의 貿易額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헝가리와 유고슬라비아와의 貿易과 외교사무소의 설치도 잘 진전되어 갔다. 1987年 서울은 1987年 12月 부다페스트에 무역사무소를 열었다. 헝가리는 1988年 3月 서울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유고슬라비아도 이를 따라 동년 10月 貿易事務所를 개설했으며, 동년 11月 폴란드 역시 서울에 貿易事務所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發展들은 南北韓關係와 대공산주의국가들과의 關係를 개선하기 위한 노태우행정부의 努力과 일치되어 나타났다. 노태우대통령은 이른바 "民族共同體의 建設"이라는 입장에서 "統一과 外交政策"을 접근하겠다는 1988年의 7·7宣言에서 이러한 그의 努力을 보여주었다. 7·7宣言은 서울정부가 北韓을 적으로 여기는 대신 "民族共同體의 한 성원으로써 北韓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은 이것을 1988年 10月 18日 제43차 유엔총회의 연설을 통해 재천명하였던 것이다.[5]

현재 南韓 통일접근은 다음과 같은 이중의 정책 구성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서울은 中國, 소련, 그리고 동유럽의 社會主義國家들을 포함한 共産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은 부분적으로 北韓의

5) 이러한 형식에 대한 사실과 설명은 다음을 參照할 것. *White papers*, pp. 381-403; International Cultural Society of Korea, *South-North Dialogue in Korea*, November 1988 and December 1989 (Seoul, Korea)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과의 關係를 改善함으로써 北韓을 측면에서 포위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러한 政策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努力은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인 것이었다. 예를들어 서울과 북경간의 貿易과 비공식적 거래는 계속해서 확대되어왔다. 1988年 무역거래액은 30억 달러로 급성장하였다. 지금까지 中國은 北韓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식적 접촉들을 제한하고 정경분리정책을 고수하기를 원했다. 中國이 南韓과의 關係發展에서 보여주는 미묘한 입장으로 인해 서울의 北方政策의 효과는 여전히 한계적이다. 그러나 서울의 여타 共産主義 國家들과의 關係는 현재 거의 제약요인이 없는 실정이다. 1988年 후반부터 1990年代 초반까지 南韓은 다음과 같은 共産國家들과의 문호개방을 달성하였다.

1. 韓國과 헝가리는 1988年 말 양국 수도에서 무역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고, 1989年 2月에 대사급수준의 완전한 外交關係를 發展시키는데 합의를 하였다.

2. 소련의 지도자 고르바초프는 극동연설 및 크라스노야르스크연설 등을 통해 몇몇부문에서 南韓과 經濟關係를 수립하기를 원한다고 했다.[6] 이에 따라 서울과 모스크바는 1989年 12月 영사기능을 가진 貿易事務所의 교환설치를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서울과 평양간의 상호방문교류는 企業家들과 무역공무원들사이에 점차적으로 증대되어갔다. 1990年 3月 집권여당인 民自黨의 대표최고위원인 김영삼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韓國과 소련간의

6) 한반도狀況에 대한 演說文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의 상황은 주지하는 바와같이 비록 南北韓間의 대화진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지라도 여전히 복합적으로 남아 있다… 韓半島에서의 狀況의 일반적인 개선의 맥락에서 南韓과의 向後 經濟關係의 可能性들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National Unification Board, *Foreign Policy Address of Michail Gorbachev*, (November 1988), p.143, 146, 156.

修交問題에 대해 소련지도자들과 논의를 하였다. 이후에는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쵸프대통령간의 한·소정상회담이 1990年 6月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었다. 그 결과 韓國과 소련은 1991年이 끝나기 이전에 공식적인 外交關係가 수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서울의 여타 동구국가들과의 關係는 잇따라 성사되었다. 南韓과 폴란드는 1989年 11月 완전한 外交關係를 수립하였다. 1989年초 유고슬라비아와의 貿易關係 樹立은 동년 12月 外交關係 樹立으로 승격되었다. 그 결과 한국대사관이 1990年 2月 벨그라드에 개설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고 루마니아와의 外交關係 樹立은 1990年 3月에 합의되었다. 몽고 또한 1990年 3月 26日 韓國과 대사급 關係를 수립하는데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韓國의 北方政策이 성공하게된 것은 많은 요소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였다. 中國이 1978年 以後부터 추구해온 실용주의적 개방정책과 고르바쵸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는 가장 중요한 환경변수중의 하나이다. 南韓의 經濟的 역량과 가장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경제상황이 韓國을 世界에서 가장 중요한 經濟國으로 인식케 하였다. 韓國은 世界의 GNP 순위에서 1970年에 30위, 1980年에 27위, 1988년에 15위, 1989年에 13위로 부상하였다.[7] 소련과 中國은 명백히 韓國과의 貿易關係를 개설함으로써 資本과 技術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원천으로서 韓國을 생각하고 있다. 대담한 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소련과 中國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동구유럽국가들도 또한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통

7) *Korea Herald*, June 15, 1990.

해 經濟的 이득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北方政策에 있어서 두번째 구성요소는 평양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데 目標를 둔 대북한자세를 구성하고 있다. 지금부터 서울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이러한 차원의 진전과정과 전망을 논의해 보기로 한다.

4. 北韓의 基本立場

北方政策의 제2의 구성요소는 평양에게 平和共存의 원칙과 "民族共同體構築"의 統一形式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이것은 外國에 살고 있는 교포들의 北韓訪問의 허용, 선전선동방송의 중단 그리고 남북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김일성과 時間과 場所를 불문하고 만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政策宣言의 經濟的 측면을 완수하기위해 10月 7日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北韓의 항구기항을 허락하며, (2) 韓國企業家들이 北韓의 상품들을 제3국에 輸出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제3국의 輸出을 위해 北韓을 중개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3) 北韓商品의 수입시 내국상품으로 간주하여 관세를 부과시키지 않도록 했다. (4) 南韓企業家들의 방북뿐만 아니라 北韓企業家들의 南韓訪問도 허용하였다.

이러한 정책노선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렵고 모호하다. 南北韓間의 접촉은 어떤 가시적인 진전이 없이 기복을 보여 왔었다. 1988年 여름부터 南北韓 국회회담의 준비를 위한 7차에 걸친 예비회담이 있었고,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을 위한 단일팀구성을 위한 南北韓 체육회담이 2

차례 걸쳐 이루어졌으며,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이 2차례 걸쳐 개최되었다. 1989年 1月 현대그룹회장인 정주영씨가 北韓을 방문하였고 귀국후 北韓當局과 금강산관광개발에 합의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發展은 北韓이 1989年 2月 韓美軍事合同訓練인 팀스피리트훈련의 반대를 제기하면서 서울과의 對話를 종결짓는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중단되었다. 南韓의 유명한 반정부인사인 문익환 목사가 불법 평양방문후 귀국하자 구속되었다. 1989年 6月 임수경이 南韓의 급진학생조직인 전대협의 대표로서 世界青年祝典에 참석하기 위해 비밀리에 평양을 訪問하였다. 그 결과 임수경은 카톨릭 신부의 보호하에 8月 15日 비무장지대를 통해 귀국한뒤 체포되었다. 이러한 當局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접촉들은 南北關係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때부터 南北韓은 상대방에게 서로 위협적인 경고를 또다시 교환하게 되었다. 소련의 주선에 의해 당시 야당대표였던 김영삼총재와 北韓의 政治局內에서 統一問題를 담당하고 있는 허담사이의 접촉이 김영삼총재가 1989年 6月 모스크바를 訪問할 동안 이루어졌다. 89年의 후반동안 南北韓의 공식적인 접촉은 거의 없었다. 이러한 變化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것인가? 왜 1989年 초반의 긍정적인 關係發展이 그이후에는 "갑짝스럽게" 냉각되어 갔는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지금까지의 유용한 사실들과 증거들을 통해 볼때, 서울의 統一提案에 대한 北韓의 반응이 주로 부정적이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南北韓은 서로간의 적대감의 수준을 줄일 수 없었고,서로의 政治體制를 양립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타협과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北韓은 1950年代부터 계속해서 추구해 왔던 '혁명

노선'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다. 北韓의 김일성은 자신이 제기하는 노선하에서의 한반도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호전적인 目標를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 같다.[8] 그러나 이것이 北韓의 統一戰略이 變化하는 戰略的 환경과 국제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50年代동안 평양은 南韓에 대한 직접적인 戰爭戰略을 추구했었다. 그리고 1960年에는 北韓은 南韓內에서 革命的 잠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革命戰略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戰略이 실패하자 평양은 1980年代초부터 연방제전략을 받아들였다. 연방제구상은 南北韓의 政府가 패권(Hegemony)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parity)을 추구한다는 點에서 「1民族, 1國家, 2個 政府」로 상징화할 수 있다. 1988年 8月 김일성주석은 "統一을 達成하기 위해……우리는 平和共存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현존하는 2개의 體制를 그대로 둔채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을 흡수하거나 압도하지 않으면서 연방제하에서 統一하는 방법을 따라야 한다.[9] 고 말하였다. 이것은 北韓이 平和共存原則을 인정하는 매우 전향적인 조치인 동시에 과거의 革命戰略을 고집하는데서 벗어나 평양이 새롭게 출발하는 중대한 조치인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연방제하의 平和共存原則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 왔던 革命的 目標를 이미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8) 이 부분의 사실과 해석은 다음을 參照할 것.; Chong-Sik Lee, *Op. cit;* Young Whan Kihl, "South Korea in 1989: Slow progress toward Democracy," ; *Asian Survey* vol. XXX, No.1 (January 1990), pp 67-73; Kang Dan Oh, "North Korea in 1989: Touched by Winds of Change?" *Asian Survey*, vol. XXX, No. 1 (January 1990), pp.74-80.

9) Lee, *op. cit.*, p. 1033

는 않는다. 南韓의 노태우정권에 대한 김일성의 태도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새로운 政府가 들어섰을지라도 파쇼군사독재는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희망과 期待를 걸 수 없다."(1988年 1月 1日 김일성 신년사)

"오늘날 美帝國主義者의 보호하에 있는 남조선정권은 民主主義의 가면을 쓰고 인민을 교활하게 기만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와 청년학도들의 정의로운 鬪爭을 流血로서 억압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파쇼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은 적의 억압과 기만전술을 쳐부셔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격렬한 투쟁을 수행해야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南朝鮮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를 끝장낼 수 있으며, 祖國의 統一을 촉진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1988年 9月 8日 김일성의 연설)

"祖國統一을 위한 南朝鮮內에서의 투쟁은 이제 대다수의 투쟁으로 변하고 있다. 南朝鮮의 투쟁은 다양한 계급과 부분을 포괄하는 대중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鬪爭을 위한 토론과 논쟁의 단계로 전환되고 있다."(1989年 1月 1日 김일성의 신년사)

"구세력이 자신의 파멸이 다가옴에 따라 더욱 비열하고 사악해 진다는 것은 진리이다. 이것은 인민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될 歷史的 교훈이다. 오늘날 歷史를 거슬러 대항하는 반동세력은 平和와 협력의 가면아래 숨어서 자신들의 침략과 간섭을 계속해 왔으며 기회가 도래하자마자 자신들의 假面을 벗어던지고 적나라한 침략과 간섭의 길을 취하고 있다. … 青年學徒들은 반동들과의 鬪爭에서 투사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世界를 건설하는 신성한 임무에서 先驅者가 되어야 한다."(1989年 7月 1日 제

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의 개회식 기념사)

이렇게 볼때 北韓이 노태우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한 충분한 이유들을 發見할 수 있다. 北韓은 南韓측의 제안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으며, 단지 2개의 韓國을 책동하는 분열주의자"의 기존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김일성의 관점에서는 노태우대통령이 인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한 美國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며, 따라서, 統一에 필요한 책임있는 합의를 할 資格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만약 노태우대통령이 "聯邦政府을 수립하거나 聯邦樹立을 목적으로 하는 平和統一委員會를 樹立하려고 한다면 노태우대통령과 만날"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노태우대통령이 "근본적인 問題"를 독자적으로 해결한 권한을 가질 수 없는 한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南韓이 평양이 제시해 왔던 모든 전제조건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상대자로서 南韓의 현 지도체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1988年부터 1990年초까지의 南韓에서의 변혁이 진행되는 동안 "時間은 南韓內에서의 革命을 위해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고 느꼈던 것 같다. 南韓에서의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김일성은 1988年 南北韓의 중요한 政黨, 社會團體, 그리고 지도급인사들을 포함하는 소위 連席會議를 제안하였으며, 1989年에는 南北韓 政治協商會義를 제기하였다. 1989年의 南北韓 政治協商會義 제안에서 평양은 김수환추기경, 문익환목사, 백기완, 그리고 南韓內의 정당대표자들을 초청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 政黨의 대표자로서 資格을 가진채 이들 대표자중 한사람으로 초청되었던 것이다. 南韓政府는 이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제안은 노태우정권의 正統性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식교수는 김일성의 이러한 立

場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요약하고 있다.[11]

"金日成주석은 聯邦制가 설립되면 한반도에서 현존해 온 2개의 體制를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암시해 왔다. 그러나 이와동시에 그는 南朝鮮人民들에게 南韓의 現存體制를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革命과 平和共存은 비록 南韓內部에서의 革命運動이 자체내부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南韓政府가 상대편이 협상상대자를 전복시키려 하는 한 중대한 협상에 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볼때 南北韓關係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統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운 협상을 위한 기회는 서로가 상대방을 "分裂主義者" "매국주의자" 그리고 "침략자" 등으로 여기는 한 결코 전망이 밝지 않다. 현재의 南北韓間의 교착상태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지난 몇년동안 서울과 평양간에 비록 미미한 것이나 제기되었던 變化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더욱 긍정적인 전망을 주는 이유는 평양정권에 가해지는 외부환경의 압력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평양의 전통적인 同盟國들과의 광범한 關係變化가 北韓의 外交政策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평양정권내부에 전개되고 있는 政治發展의 양상도 南北關係 改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

10) *Ibid.*, pp. 1038-1039 재인용

11) *Ibid*, p.1041.

5. 샌프란시스코 頂上會談과 그 以後

1990年 6月 5日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쵸프대통령간의 한·소정상회담은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關係正常化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타결이었다. 이 頂上會談은 동유럽의 社會主義國家들을 휩쓸고 있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 주변으로까지 밀려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었으며 이와함께 동북아지역에 여전히 남아있는 냉전이 곧 걷힐 것이라는 희망을 일으켜 주었다. 이에따라 많은 觀察者들은 한소정상회담이 한반도의 統一을 재촉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고르바쵸프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회담에서 南韓 대통령의 서신을 金日成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메시지는 보도에 따르면 南韓이 北韓에 대해 軍事的 지위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金日成에게 설득하는 내용이었다. 노태우대통령은 金日成과의 만남에 關心을 표명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 고르바쵸프를 통해 經濟的인 成長을 하고 있는 南韓은 평양이 여타 世界國家들과의 문호개방을 하는데 기꺼이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12]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한소정상회담이후에 노태우대통령은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正常的인 쌍무관계"가 곧 성립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르바쵸프 소련대통령은 "서울과 평양간의 關係는 동북아지역과 한반도에서의 일반적인 政治狀況의 發展과 改善의 맥락에서 쌍무적인 협력이 발전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합의는 동시에

12) Korea Herald, June 8, 1990

평양과 모스크바간의 關係에 큰 반발을 야기시킬 것이다. 南韓과 소련간의 外交的 정상화는 소련이 하나의 독립된 國家로서 南韓을 사실상으로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스크바의 서울승인에 따라 北韓은 한반도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正統性을 가진 政府라고 계속해 주장해왔던 立場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다. 北韓은 현재 소련과는 강력한 軍事, 經濟的 협력을 유지해 왔다. 北韓의 이러한 밀접한 모스크바와의 相互關係로 인해 北韓은 거의 經濟的·軍事的 현대화에 필요한 원조와 技術의 많은 부분들을 소련에 의존해 왔다. 또한 모스크바는 北韓의 가장 중요한 同盟國이기 때문에 北韓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양의 變化를 유도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쵸프대통령의 한소정상회담은 처음에는 北韓政府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따라서 이 한소정상회담은 北韓의 金日成을 매우 "화나게"했던 것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노태우대통령의 성공을 좌초시키려 했다. 결국 北韓은 모스크바의 움직에 격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또한 한소정상회담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北韓의 고립주의정책을 더욱더 확고히 하도록 압력을 준 것 같다. 예를 들어 北韓의 관영보도매체는 1990年 7月 7日 표면적으로 평양지지의 「南朝鮮民族民主戰線」의 입장을 전하는 형식으로 고르바쵸프가 南韓의 노태우 정권과 "용서할 수 없는 배반적인 거래"를 했다고 공격하였다. 이보도들은 "모든 사실들은 이 會談이 용서할 수 없는 배반적인 거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北韓의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 또한 한·소정상회담은 "두개의 韓國"을 영구화시키는 國際的 음모라고 비난하였다. 평양은 또한 1990年 6月 13日 南北韓關係에 관련된 南韓의 外交政策을 노태우

정권의 종속적이고 事大的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비난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론은 모스크바와 서울간의 改善된 關係는 韓國問題의 平和的 해결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하는 길을 열고 있다는 평이다. 따라서 金日成은 내부적으로 적어도 당분간은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치원칙에서의 變化는 金日成 지도력의 安定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際關係 차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평양이 世界的 조류로서의 화해와 협력 추세를 받아들이는 이외의 어떠한 선택 대안을 실제로 갖고 있지 않으며, 그결과 北韓의 고립주의정책을 再考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北韓이 開放의 門을 열고 南韓과의 對話를 재개하는 데는 단지 時間問題일 뿐인 것이다. 심지어 몇몇 분석가들은 南北韓의 상황은 동독과 서독간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도 하는 것이다.

센프란시스코에서의 서울·모스크바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태우 政府는 1990年 9月 북경아시안게임을 전후하여 노태우대통령의 北京訪問을 가능토록 하기위한 움직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경아시안게임을 보다 나은 韓國과 中國間의 關係를 改善하기 위한 계기로 이용하려는 韓國측의 努力에 기인하고 있다. 南韓은 서울과 北京間의 關係改善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南韓과 北韓同盟國들과의 접촉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關係增進이 北韓의 行動을 제약하고 있다. 그 결과 이러한 접촉과 교류증대는 北韓의 好戰性을 지지하는데 대한 中國과 소련의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결국 北韓의 모

험주의와 軍事主義를 억제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의 北方外交政策은 비록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南韓의 安保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北韓은 이제 더 이상 敵對者가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실제로 한반도에서의 2개의 國家間의 접근을 가져 올 것이며, 나아가 하나의 韓國의 출현을 가져올 것인가? 지금까지 나타났던 變化는 아마 직접적으로 平和와 統一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南韓에서의 많은 사람들과 외부의 많은 觀察者들이 예견한 바와 같이 이러한 變化들은 平和와 統一을 향한 매우 본질적인 조치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關係改善과 서울과 北京間의 關係改善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北韓이 南韓의 同盟國家인 日本과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쉽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關係改善은 北韓의 침체된 經濟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평양의 經濟가 고갈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평양과 서울간의 經濟的 불균형은 너무나 큰 차로 벌어져 평양은 이제 世界市場에서 더이상 서울의 경쟁이 아닌 것이다. [14]

---

13) "Roh's Diplomay paves Road to Unification," *Korea Herald*, June 13, 1990.

14) 1987年 北韓經濟는 韓國의 12%成長과 비교할 때 3.3%의 成長率을 보였다. 北韓의 GNP는 南韓의 1,186억달러에 비해 193.7억달러이다. 1인당 GNP는 北韓의 경우 1,186달러인데 반해 南韓의 경우는 2,826달러이다. 北韓의 1987年 貿易規模는 40.6억달러로서 輸出이 16.7억달러, 輸入이 23.9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南韓의 貿易規模는 883억달러로서, 이중 輸出은 472.8억달러이며, 輸入은 410.2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經濟的 不均等은 그때이후에도 계속해서 커져왔다.

南韓과 北韓의 전통적인 同盟國인 中國 및 소련간의 貿易 및 기타형태의 접촉이 지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의 北韓의 입지는 계속해서 쇠퇴해왔었다. 소련과 中國은 모두 그들 자신의 經濟近代化라는 과업에 매달려 있으며, 그 결과 北韓經濟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北韓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의 經濟를 개방하여 北韓經濟體制의 통제성과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의 北方政策은 비록 시간상의 시차가 있을지라도 北韓이 자신의 經濟路線을 變化시키도록 고무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0 년동안 北韓은 貿易關係와 交易을 共産主義國家들에 한정시켜왔다. 現在 北韓은 자신의 經濟를 世界의 여타국가들에게 부분적으로 開放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開放努力이 이웃 共産國家들과 같은 급격한 變化를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 서구의 영향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經濟를 공개적으로 재편하고 있는 中國, 소련, 그리고 여타共産主義國家들과는 달리 北韓은 자급자족 經濟의 건설이라는 北韓 고유의 政策에는 어떠한 變化도 없다. 바로 여기에 經濟開放이라는 새로운 비전이 자급자족과 이데올로기적 순수성에 대한 오래된 꿈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北韓은 일련의 주저함을 가지면서도 손을 外部로 뻗치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양의 外交政策에 있어서 새로운 變化의 징후는 1990 年 2 月 北韓 외교관들이 뉴욕, 北京,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美國과 自由 접촉하려는 새로운 움직임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美國務省이 駐韓美軍의 감축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시점에서 이 地域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美國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美國의 국무장관인 베이커는 1990年 2月 美國이 "南北韓사이와 美國-北韓間의 보다 나은 關係를 향해서 지속적이고 상호호혜적인 過程이 진전되기를"바라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때부터 美國은 北韓과 제한적인 對話를 계속하고 있으며, 北韓이 "기본생활필수품"인 식량과 의약품과 같은 상품의 교역거래를 수락하도록 하고 있다.[15] 北韓이 5月 말 韓國戰爭에서 전사한 5구의 미군유해의 반환을 제의한 것은 이러한 상황하에서 나왔던 것이다. 이 사건은 北韓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원하고 있는 제스츄어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美國은 지금 駐韓美軍의 감축을 통해 北韓으로부터 보다 많은 화해와 양보를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를들어 美國의 한 고급관료는 최근 서울에서 美國은 만약 평양이 美國과의 關係를 증진시키는 것과 南韓과의 對話를 진전시키는데 성의를 보여 준다면 北韓과의 접촉을 승격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16] 모스크바와 서울간의 改善된 關係는 駐韓美軍의 감축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철수의 속도는 北韓의 행동에 달려있다. 北韓은 서울과 모스크바간의 外交關

15) New York Times, July 15, 1989.
동경은 이와 유사하게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 예를들어 日本의 수상인 노부로 타케시다(Noburo Takeshita)는 1989年 3月 30日 日本議會演說에서 北韓과의 "直接的인 對話"를 要請하였다. 日本사회당은 오래전부터 北韓과의 關係改善과 南北韓의 實質的인 통일을 지역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옹호해 왔었다.(New York Times March 31, 1989). 또한 日本의 수상은 이것을 최근의 연설에 다시 한번 제안하고 있다. 즉 그는 北韓과의 "보다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樹立할 것과 꺼리낌없는 대화를 갖기를 원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Korea Herald, June 16, 1990.

16) 다음을 參照할 것. Korea Herald, June 10, 1990.

係樹立이 가시화됨에 따라 美國과의 보다 나은 關係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政治問題에 대한 협상의도는 심각한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평양은 강대국들의 祖國分斷에 대한 책임을 비난하면서 駐韓美軍을 統一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北韓은 經濟的, 政治的 改革問題를 해결함에 있어서 社會主義國家들의 改革에 있어서 나타났던 부정적 충격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北韓은 北韓의 반미선전을 낮추어 달라는 美國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하에서 평양은 6月 20日 갑자기 판문점에서 제11차 國會豫備會談을 개최하기 위한 서울과의 對話를 재개하자고 제안하였다. 北韓은 또한 한반도에서의 군비축소를 위한 會談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南韓과 고위급 軍事委員會의 창설과 상호군사감시단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北韓의 이와같은 變化된 입장은 韓國이 이에 앞서 南北韓 頂上會談과 결렬된 對話의 재개를 제안한 것을 거절한지 단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은 北韓이 제안한 1990年 7月 12日 보다는 며칠 늦은 날자에 會談을 개최하자고 역제의하였다. 따라서 變化된 제반 상황이 南北韓에게 21세기의 새로운 장을 열기위한 보다 대담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南北韓 改善에 획기적인 계기를 가져 올 것인지에 關心이 쏠리고 있다.

6. 結　　論

40年이 넘는 기간동안 영토분단의 결과로 인해 한반도의 南北韓은 서로간의 깊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對話와 호혜적인 협

력을 증대시킴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성실한 努力이 성공적인 南北韓關係의 改善과 民族의 統一을 보장하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變化하는 국제환경에 발 맞추어서 제6공화국의 노태우대통령 政府는 共産圈國家들과의 關係를 확대하기 위한 "北方外交政策"을 추구하였다. 北方政策의 일차적 目的은 北韓의 경직된 자세를 變化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평화롭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있다. 그 결과 南韓의 北韓을 포함한 대공산권국가 政策은 예전보다 더욱 화해적이며 부드러운 것이었다. 서울의 대소관계와 이보다는 덜하지만 서울의 대중국관계는 눈에 뜨일 정도의 改善을 이루었다. 또한 南韓은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과 정상적인 經濟的, 外交的 關係를 수립하게 되었다.

한반도에서의 平和와 安定의 전망은 이 논문에서 설명되지 않은 여러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러한 변수들중의 몇몇은 서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소련과 中國, 그리고 여타 共産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國內의 政治發展이다. 만약 개혁추세가 역류되거나 혹은 이들 社會主義國家들에서의 현 지도부가 일련의 전혀 다른 정책우선순위를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 대체되어 진다면 지금까지 成就한 모든 것들은 좌절되거나, 혹은 심각한 퇴보를 경험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南韓國內의 經濟的, 政治的 상황 또한 고려되어야 할 중대한 변수이다. 經濟成長의 지지부진은 역으로 共産主義國家들에 대한 韓國의 협상능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장기화된 政治的 불안 또한 北方政策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서울의 호율성을 반감시킬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北方政策의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北韓의 대남,

그리고 對世界 政策과 의향의 變化與否에 달려있다.

평양의 對南關係에 대한 기본입장이 變化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서울측에서는 인내, 동정, 그리고 융통성을 가진 비상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은 北韓과 北韓指導者의 政治的 요구, 특히 주체원칙과 民族自尊에 대한 광적인 집착성에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또한 南韓은 北方政策의 성공에 대해 너무 높은 희망과 기대를 걸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南北韓關係에서 어떤 극적인 돌파구가 없다는 사실이 北韓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

國際統合의 이론과 실제는 비록 두개의 社會가 政治的으로 통합되지 않을지라도 이들 양사회는 平和를 가질 수 있으며, 가까운 經濟的, 文化的 關係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統一의 기회가 거의 없거나 統一에 있어서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두 社會는 統一없이 이득을 여전히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經濟寄與과 초보적인 民主主義를 강화하면서 자신감을 확립하는 것이며, 상호간의 對話意志를 북돋워주는 것이며, 구시대의 革命世代를 대체하여 平和統一의 보장에 필요한 일련의 가치관을 가져올 새로운 指導者의 부상을 도와주는데 있다.

蘇聯·東歐의 變革과 分斷國 統一問題

1990년 12월 20일 인쇄
1990년 12월 30일 발행

발 행 처 통 일 원
조사연구실
전화 720-2145
인 쇄 처 양동문화사

통조 90-12-88 〈 비매품 〉